

2024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25. 10.

기획재정위원회

【 목 차 】

I. 감사의 목적	1
II. 감사기간 및 감사일정	1
III. 감사실시 대상기관	3
IV. 감사반편성	4
V. 주요감사 실시사항	7
1. 기획재정부	7
가. 경제 및 재정정책 부문	7
나. 세제 부문	41
2. 국세청(서울·중부·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 포함)	65
3. 관세청(광주·대구·부산본부세관 포함)	89
4. 조달청	103
5. 통계청	109
6. 한국은행	116
7. 한국수출입은행	142
8. 한국조폐공사	153
9. 한국투자공사	159
10. 한국재정정보원	164
11. 한국원산지정보원	166
12. 한국통계정보원	167

VI.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8
1. 기획재정부	168
가. 경제 및 재정정책 부문	168
나. 세제부문	188
2. 국세청(서울·중부·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 포함)	206
3. 관세청(부산본부세관 포함)	233
4. 조달청	249
5. 통계청	254
6. 한국은행	258
7. 한국수출입은행	266
8. 한국조폐공사	272
9. 한국투자공사	276
10. 한국재정정보원	279
11. 국제원산지정보원	280
12. 한국통계정보원	281

I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 재정통제 및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II 감사기간 및 감사일정

1. 감사기간

- 2024. 10. 10. (목) ~ 10. 29. (화) [20일간]

2. 감사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0.10(목)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기획재정부(세종)	
10.11(금)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 회	
10.12(토)	자 료 정 리		
10.13(일)	자 료 정 리		
10.14(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본점	
10.15(화)	자 료 정 리		
10.16(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국 회	
10.17(목)	자 료 정 리		
10.18(금)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정부대전청사	

일 자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0.19(토)	공 휴 일		
10.20(일)	공 휴 일		
10.21(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통계정보원	국 회	
10.22(화)	자 료 정 리		
10.23(수)	[1반] ▸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경남지방조달청, 동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부산·경남·울산본부)	부산지방국세청	
	▸ 현장시찰	부산신항	
	[2반] ▸ 현장시찰	평택항	
	▸ 대전지방국세청, 전북지방조달청, 한국은행(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	
10.24(목)	[1반] ▸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한국은행(대구경북포항본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반] ▸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지방조달청 호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광주전남·목포본부)	광주지방국세청	
10.25(금)	자 료 정 리		
10.26(토)	공 휴 일		
10.27(일)	공 휴 일		
10.28(월)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 회	
10.29(화)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통계정보원	국 회	

Ⅲ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총 42개 기관	
1. 기획재정부	22. 대구지방조달청
2. 국세청	23. 광주지방조달청
3. 관세청	24. 대전지방조달청
4. 조달청	25. 경남지방조달청
5. 통계청	26. 강원지방조달청
6. 서울지방국세청	27. 충북지방조달청
7. 중부지방국세청	28. 전북지방조달청
8. 인천지방국세청	29. 제주지방조달청
9. 대전지방국세청	30. 조달청 조달품질원
10. 광주지방국세청	31. 경인지방통계청
11. 대구지방국세청	32. 동북지방통계청
12. 부산지방국세청	33. 호남지방통계청
13. 인천공항본부세관	34. 동남지방통계청
14. 서울본부세관	35. 충청지방통계청
15. 부산본부세관	36. 한국은행(지역본부 포함)
16. 인천본부세관	37. 한국수출입은행
17. 대구본부세관	38. 한국조폐공사
18. 광주본부세관	39. 한국투자공사
19. 서울지방조달청	40. 한국재정정보원
20. 인천지방조달청	41. 한국원산지정보원
21. 부산지방조달청	42. 한국통계정보원

Ⅳ 감사반편성

1. 중앙감사반

감사위원 (26)	감사반장	송언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15)	정태호 위원 (간사) 김영진 위원, 김영환 위원, 김태년 위원, 박홍근 위원, 신영대 위원, 안도걸 위원, 오기형 위원, 윤호중 위원, 임광현 위원, 정성호 위원, 정일영 위원, 진성준 위원, 최기상 위원, 황명선 위원	
	국민의힘 (9) *위원장 포함	박수영 위원 (간사) 구자근 위원, 박대출 위원, 박성훈 위원, 박수민 위원, 송언석 위원, 이인선 위원, 이종욱 위원, 최은석 위원	
	조국혁신당(1)	차규근 위원	
	개혁신당(1)	천하람 위원	
사무보조자	①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법조사관(3급) 〃 행정실장(4급) 입법조사관(4급) 〃 입법조사관(5급) 〃 〃 〃 〃 〃 〃 〃 입법조사관(6급) 행정관 주무관 〃 〃 〃	직원(21인) 송주아 이정은 김현중 주규준 이상홍 임윤섭 권혁만 문유선 노현정 김태경 김정엽 최동완 이덕형 김승균 이건화 황용준 장우석 김정혜 이인희 송경희 오승희	②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③ 의원 보좌직원 ④ 속기주무관

2. 지방감사반

감사 일자	감사 반	대 상 기 관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직 원	
10.23. (수)	제 1 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경남지방 조달청, 동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부산· 경남·울산본부)	감사반장	송언석 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더불어 민주당 (4)	임광현 위원 정성호 위원 진성준 위원 최기상 위원	입법조사관	김현중
			국민의힘 (7) *위원장 포함	구자근 위원 박대출 위원 박성훈 위원 이인선 위원 이종욱 위원 최은석 위원	행정실장	이상홍
			조국혁신당 (1)	차규근 위원	입법조사관	임윤섭
					〃	노현정
					〃	최동완
					〃	이덕형
					〃	이건화
					입법조사관보	황용준
					정책연구위원	
					의원보좌직원	
					속기주무관	
	제 2 반	대전지방국세청, 전북지방조달청, 한국은행(대전세 종충남·충북·전북 본부)	감사반장	정태호 간사	전 문 위 원	이정은
			더불어 민주당 (11) *간사 포함	김영진 위원 김영환 위원 김태년 위원 박홍근 위원 신영대 위원 안도걸 위원 오기형 위원 윤호중 위원 정일영 위원 황명선 위원	입법조사관	주규준
			국민의힘 (2)	박수영 위원 박수민 위원	〃	권혁만
			개혁신당 (1)	천하람 위원	〃	문유선
					〃	김태경
					〃	김정엽
					〃	김승균
					행 정 관	장우석
					정책연구위원	
					의원보좌직원	
					속기주무관	

감사 일자	감사 반	대 상 기 관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직 원	
10.24. (목)	제 1 반	- 대구지방국세청, - 대구본부세관, - 대구지방조달청 - 동북지방통계청, - 한국은행(대구경북포항본부)	감사반장	송언석 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더불어 민주당 (4)	임광현 위원 정성호 위원 진성준 위원 최기상 위원	입법조사관	김현중
			국민의힘 (7) *위원장 포함	구자근 위원 박대출 위원 박성훈 위원 이인선 위원 이종욱 위원 최은석 위원	행정실장	이상홍
			조국혁신당 (1)	차규근 위원	입법조사관	임윤섭
					노현정	최동완
					이덕형	이건화
					입법조사관보	황용준
					정책연구위원	
					의원보좌직원	
					속기주무관	
	제 2 반	- 광주지방국세청, - 광주본부세관, - 광주지방조달청 - 호남지방통계청, - 한국은행(광주전남목포본부)	감사반장	정태호 간사	전 문 위 원	이정은
			더불어 민주당 (11) *간사 포함	김영진 위원 김영환 위원 김태년 위원 박홍근 위원 신영대 위원 안도걸 위원 오기형 위원 윤호중 위원 정일영 위원 황명선 위원	입법조사관	주규준
			국민의힘 (2)	박수영 위원 박수민 위원	권혁만	문유선
			개혁신당 (1)	천하람 위원	김태정	김정엽
					김승균	김승균
					행 정 관	장우석
					정책연구위원	
					의원보좌직원	
					속기주무관	

V 주요감사 실시사항

1. 기획재정부

가. 경제 및 재정정책 부문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경제정책 일반	○ 정부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므로 상황인식의 변화와 정책 기조의 재검토 필요 ○ 정부 출범 시와 비교하여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었지만 심각한 내수 부진 문제 대응을 위해 산업구조, 고용 상황,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등의 변수를 조합한 맞춤형 대응 필요 ○ 민간소비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정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낙관적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기동행종합지수, 경기순환시계, 자영업자 폐업자 수에서 부정적인 지표가 나오는 등 경제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감세, 긴축재정, 간접지원을 통해 경기침체과 내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어 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 조합을 고민할 필요 ○ 국내시장의 총수요 부족으로 내수·소비 쪽이 취약하므로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지수가 악화되고 있으므로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정책 기조를 전반적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 ○ 자영업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과감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경제비전의 부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실패, 대국민 소통 부재로 인해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므로 미래혁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범국민 협의체 도입과 인적 쇄신을 통한 열린 경제정책 운용으로 변화할 필요 ○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세우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 ○ 관계부처와 함께 기재부가 자영업자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현재 대한민국은 수출 증가가 임금을 높인 후 일자리, 내수와 소비로 연결되는 구조가 깨진 것으로 판단되기에 정책 기조의 변화 필요 ○ 경제심리지수가 하락하는 문제에 대해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조성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 필요 ○ 설비투자에 직접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경제난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정책 마련 필요 ○ 정부의 감세, 긴축재정, 간접적인 지원정책을 전환하여 자영업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대책 강구 필요 ○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를 구조적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수출산업이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집약되면서 고용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유발계수가 낮아지고 있고, 수출 등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고금리·고물가 등의 문제로 인해 소비자가 느끼는 주관적 경기는 이에 못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 ○ 은행권 대출 제한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대책 검토 필요 ○ 반도체 경쟁의 선점을 위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인프라 조성을 빠르게 추진하는 정책 필요 ○ 반도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력망 확충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한국전력 등 전기사업자에게 송·변전 설비를 맡기고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을 근거로 기업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 ○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배터리 산업 공급망이 자국 중심으로 흘러가 폐점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초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해달라는 업체 요구 검토 필요 ○ 정부에서 홍보하는 무역수지 흑자도 사실상 반도체 착시효과와 내수부진에 따른 수입감소효과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는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경제낙관론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급등하여 서민의 가처분소득과 가계흑자액은 대폭 감소하고 부자감세에 따라 고소득자의 소득과 지출이 대폭 늘어난 문제 ○ 민관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대상 미래첨단산업을 선별하고 대규모 지분투자 지원을 심의하는 방식으로의 산업지원체계 개편 검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경제상황이 안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 필요 ○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떨어지고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정책수단이 감세, 긴축, 건전재정의 기조로 인해 부재하고 금리인하 역시 환율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책기조를 바꿀 필요 ○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과 관련하여 정책방향이 일관적이지 않아 국민들과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과 필요 ○ 국제 정세나 수출 수요가 급감하는 대외변수 속 GDP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회복하는 정책 대비 필요 ○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낮아지는 상황 속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인하 정책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내수 부양을 도모하는 재정정책의 조합 필요 ○ 수출이 더딘 부분에 대한 내수의 성장 경로를 새롭게 기획하고 재정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세수 감소는 기업의 실적이 주된 요인이기에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세수와 고용 확보 필요 ○ 기획재정부와 KDI가 경제동향에 있어 서로 다른 전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경기 진단에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적세 개혁, 운용보수 문제 해결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여 자본시장을 개혁시키고 이를 통해 다층 연금체제로 흘러들도록 정책의 마련 필요 ○ 내수회복 초기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패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시장과 경제 심리를 안정 시킬 필요 ○ 경제성장률, 수출, 고용전망, 환율 등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있어 적절한 정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노력과 기획이 필요 ○ 내수, 자영업 대책을 위해 세수결손을 불용 처리하면 경제 하방 압력이 된다는 점에서 변화 필요 ○ 건설부분의 내수 부양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국회를 찾아 설명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의 강화 필요 ○ 기 발표했던 소비·투자·건설 맞춤형 보완 방안 이외에 추가 대응 방안을 적기에 마련하여 성장률 제고에 힘쓸 필요 ○ 공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도입 필요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로 이민 정책을 통한 생산가능인구 확보와 장기적으로 지방·고령층 중심으로 한 내수 확보, 수출기반의 안정적 구축 필요 ○ 기획재정부는 경제전망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모형을 활용하나 오차가 과도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수출의 증가를 통해 성장을 높여 민생경제를 좋아지게 하겠다는 낙수효과 논리 수정 필요 ○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소비와 투자 여력을 국내로 환원시킬 대책 마련 필요
재정 운용	○ 예비비를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연도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외교부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 대통령실 관련 예비비 집행의 적절성 지적 ○ 긴축재정, 부채 억제 등이 권고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 물가안정 및 내수활성화 등을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만큼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 ○ 건전재정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재정당국은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방만한 재정의 운영을 방지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을 운용할 필요 ○ 의무지출 등 전 정부의 정책이 현 정부의 국가채무와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지 분석 및 검토 필요 ○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 역할 수행 필요 ○ 지나치게 낙관적인 재정전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유보하는 태도 지양 필요 ○ 의무지출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부자감세 정책은 재정 기반을 붕괴시키므로 지속가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능성 측면에서 재검토 필요 ○ 적자성 채무가 늘어났다면 건전재정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 ○ 「국가재정법」 목적 조항에 건전성보다 지속가능성의 재정운용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을 위해 노인 연령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 검토 필요 ○ 2024년 상고하저의 경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경기변동을 증폭시켰으며, 예년 대비 2024년 2~3월 예산집행률이 너무 높기에 총선을 고려하여 조기집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 ○ 예산의 조기집행 제도로 인해 지방정부의 경우 무리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매뉴얼을 만들어 이를 방지할 필요 ○ 예산 수시배정제도로 인하여 예산 집행의 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국가재정법을 정비할 필요 ○ 대규모 송배전선로 확충이 필요함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줄여 재정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 추경이나 세수결손 문제, 재정의 역할 문제는 토론의 영역이기에 국회와 행정부 간 합의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지출 재구조화 등 정부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하여 재정청문회를 통한 재정 운용 상황 검토 필요 ○ GDP 성장 정부 기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상 불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용을 최소화할 필요 ○ SOC 투자와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 심사 권한을 기획재정부가 아닌 사업 담당 주무부처에 넘기는 방안 검토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KDI, 조세재정연구원 외에 다른 기관을 연구기관으로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부정수급 발생 사전예방 및 실시간 관리 등 보조금 제도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대책 필요 ○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현 정부의 전망이 단기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중장기 재정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
세수결손 대응	○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평기금·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고 지방교부금·교부세 교부를 유보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을 희생시키는 정책이므로, 이 경우 추경을 편성하고 일선의 교육당국과 협의를 할 필요 ○ 세수결손으로 인한 재정지출 감소는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세수결손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수추계 대비 실적이 5% 이상 차이나는 경우 추경을 편성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할 필요 ○ 세입계획이나 세출계획이 큰 규모로 수정될 때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받아서 의결하도록 국가재정법의 개정 필요 ○ 세수를 주기적으로 재추계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차를 도입할 필요 ○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재원 미교부 결정 및 실행 과정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추경안 없이 미교부 한 것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및 지자체장의 자치재정권을 방해한 것인지 등에 대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및 고발 등을 검토할 필요 ○ 세수 추계 오류 개선을 위해 중립적인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세수결손 반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재정청문회를 실시 등 필요 ○ 4년 연속 세수 추계에 실패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히지 못한다면 국정조사 통해서라도 규명할 필요가 있고, 세수추계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책임성 제고 필요 ○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기보다 헌법에 따라 9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출 시기를 늦추는 방안 검토 필요 ○ 세수효과를 과소하게 보이기 위해 누적법이 아닌 순액법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누적법 기반으로 세수효과 산출할 필요 ○ 세수결손 대응을 위한 여유재원 활용에서 여유재원 판단의 기준 제시 필요 ○ 세수 추계의 오류는 정부 신뢰도를 하락시킨다는 지적과 ‘재추계한 세수추계 진도비율’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구조적인 경제 체질 개선 통해 세수결손 문제를 해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거시지표와 자산시장 전망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 ○ 세수 결손 발생 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확대 노력, 회계기금의 가용 자원 발굴, 기금 간 금융성 거래 중심 지출의 조정, 공공기관 출자 유예 등이 필요 ○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한국은행 일시차입 규모가 급증하고 있고 헷수도 증가하였는바, 한은 일시차입을 지양하고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필요 ○ 세수결손 재추계·외평기금 미활용 발표에 지속되면 정책의 탄력성이 저하되므로 탄력적인 대응 및 국회와의 공감대 형성 필요 ○ 대규모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공자기금 차입을 늘려 이자비용이 급증하고 있는바, 이는 미래세대에 빚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 ○ 최근 2년 간 86조원 세수결손 중 45.5%가 법인세인데 부족한 세수를 중산층과 서민을 통해 메우고 있고, 세수결손은 경제 관리의 실패라는 지적 ○ 부자감세로 인해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 ○ 세수결손의 원인은 농산물 가격 안정위한 할당관세 및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부자감세가 아니라 민생감세라고 봐야 한다는 지적 ○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했을 때 세수결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하는 것은 최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 ○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적자성 채무가 증가하는 것이라는 지적 ○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활용이 세수결손 대응에 효과적이라면 법 테두리 내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세수오차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므로 세수 초과·부족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를 국회와 정부가 진행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 활용에 있어 기금 활용계획, 변경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 ○ 세수결손 규모를 줄이기 위해 각 부처의 세외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 ○ 세수결손이 과도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시효로 인한 채권소멸 방지를 위한 제재 부과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외평기금 추가활용을 하지 않겠다고 9월 발표하였음에도 두 달도 안 돼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 ○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외환시장 대응에 적절한 수준이므로, 세수결손 시 이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는 평가 ○ 세수결손 대응 위해 투자공사에 배당금을 100% 요구해 지급받았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해치는 것이므로 이를 지양하고, 기관별로 각각의 배당성향을 표시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 ○ 국가재정법 제43조제5항에 대해서 지방교부세와 같은 법정 의무지출도 해당 대상인지 불분명하기에 개정을 통해 취지 명확히 할 필요
대외경제정책	○ 미 대선, 중 내수 부진, 러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영향을 파악하고 수출 증가를 위한 적절한 대응 필요 ○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관세장벽 등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철저한 대책의 마련 필요 ○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발전적인 대안의 도출 필요 ○ 반도체 사이클 둔화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경기가 아닌 다른 산업 전반의 수출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주변국이 반도체 인프라 구축 국가 책임제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를 검토하고,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 상향, 송전망 구축 예산편성, 전력기금부담금 감면, 반도체특별법 등 제반 이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명확화할 필요 ○ 수출품목과 대상국의 다변화를 위한 전략 모색 필요 ○ 아세안 쪽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어 중립적 외교를 통해 경제적 통로를 확보할 필요 ○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나 자본 유출 가능성 측면에서 엔화 트레이드의 적극적 모니터링 필요 ○ 원화의 국제적 위상 향상을 위해 통화스왑 활용 직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거래 확대, 기업의 원화 결제 유도 및 통화바스켓 편입 추진 필요 ○ 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외환업무 관련 자금세탁 방지규율이 명확하지 않아 불법 외환송금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므로 제도개선 필요 ○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지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분 투자 및 펀드 출자에 관련된 제약을 완화할 필요 ○ 체크 원전 수주와 관련하여 정부가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경제안보 품목, 비축물자, 광산물 등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핵심광물 및 원자재 비축·이관을 위한 예산을 마련할 필요 ○ 핵심 원자재의 목표 재고량 달성을 위한 노력과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의존하는 비율을 다변화시킬 필요 ○ 공급망 기본 계획이 기존 산업부가 추진해온 정책들과 차별되지 않고, 협업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개선 필요
가계부채	○ 정부의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증가를 유도하였고 정책대출 관리에 대한 부처간 혼선 등 가계부채 관리기조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 ○ 내수 진작을 위한 금리인하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 ○ 가계부채 탕감 측면에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하기 위한 은행 및 정부의 역할 필요 ○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에 대한 지적
부동산 정책	○ 주택의 가격과 수요에 대한 인위적 억제 정책을 지양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집중하되 공급의 양 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여 도시정책 수립 필요 ○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양도세로 인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수준 점검 필요 ○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과열 및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 관리 필요 ○ 전세 사기·사고 문제 대응 및 양질의 임대주택, 임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업형 임대제도 도입 필요 ○ 전세 사기 대응을 위해 LH가 우선 매입하고, 실제 매각 시 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임차인에게 추가 지급하는 정책 도입 필요 ○ 착한임대인 제도를 악용하여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관리비를 올리는 등의 사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보완책 마련 필요 ○ 주택·오피스·학교·상업시설이 한 공간에 있는 복합 공간을 탄생시킬 수 있는 정부 정책 도입 필요 ○ 서민 주거나 신혼부부를 상대로 한 정책 대출을 줄이기보다 투기성 목적의 대출을 줄이는 방안 검토 필요
지역정책	○ 소상공인·골목상인 등을 지원하는 데에 대출 지원보다는 지역화폐·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직접적인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매출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 ○ 소상공인·골목상권·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및 내수·소비진작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발행하고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지역별 차등지원으로 지역 간 형평성 저해 우려가 사라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지원 필요 ○ 온누리상품권은 국비 지원하는데, 발행규모도 더 크고 사용처가 많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원하지 않음 지적 ○ 가처분소득 감소 및 민간소비 회복 지연에 대응하여 지역화폐 및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지역경제, 골목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수 경제 회복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이 발행규모가 큰 지자체와 사용액이 많은 주민에게 집중되면서 지역차별상품권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지방 홀대, 지역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 ○ 온누리상품권 업종 확대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상품권 발행 중 효과가 높은 정책 비교 검토 필요 ○ 3/4분기 GDP 성장률 저조를 이유로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 온누리상품권 활용성 제고 등 소비 촉진 정책 관련 부정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는 발전된 지역에 대해서 통과율이 높고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통과율이 낮기에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 지역낙후도 가점제에서 수도권은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제외되어 있는데, 수도권 중 소외지역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 ○ 세수 감소 대응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 처리로 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 ○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삭감을 지양하고 중앙부처의 업무추진비·특별활동비·기관운영비 삭감 등 고통 분담을 위한 경비 절감 노력 필요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배정 유보는 열악한 재정을 가진 지방 중소도시 주민들의 복지 예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지방교부재원 미교부에 관해 국무회의 심의, 지자체 및 지방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우려 지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으로 지방고교 무상교육 수행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경제와 재정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 ○ 정부의 재정관리 실패로 지방예산이 삭감되어 지방 소멸 문제가 가속화될 우려 지적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 잔액을 감소시키는 것은 지방 소멸을 가중시킨다는 지적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자율계정 비율과 지원계정 비율이 역전되고 있어 줄어든 자율계정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재원 배분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균형발전 기여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연구 개선 필요 ○ 부동산 공급을 통해 강력한 지방 자생적 경제권 구축 필요 ○ 현재 대부분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이루어 지기에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정책의 다른 접근을 검토할 필요 ○ 공자기금에서 지방채 인수가 되지 않으면 고금리의 시중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워지기에 인수 검토 필요 ○ 전라북도의 GRDP(지역내총생산)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SOC 지원이 저조하다는 지적 ○ GTX 건설사업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 ○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필요 ○ 부산 산단특화 중소제조기업 개방형 탄소저감지원 플랫폼 구축, 국립UN평화기념관 별관 신축, 국립황령산 치유의숲 조성, 울산 삼산동 상권에 라이콘타운 구축 사업에 예산 반영 필요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공공부문	○ 대통령실, 기재부, 관세청, 국세청 등 출신의 재취업승인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직무 관련성·전문성이 없는 자에 대한 공공기관 임원 등 인사가 이루어지는 등 이를 통제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역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은 관련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기에 폐지를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의 기관장·임원의 임기 일치 필요 ○ 공공기관 임원의 약 40%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인 관계로 국정 기조에 맞춘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도움 필요 ○ 공공기관 일자리 혁신으로 인해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청년, 장애인, 지역 인재 또는 비수도권 인재 등이 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 ○ 공공기관 및 인력이 증가하고 있어 22년말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추진이 느슨해졌다고 비취질 수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의 엄격한 관리 필요 ○ 지난 정부에서 감소하였던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감축된 정원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 필요 ○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인력 관리 및 개혁 필요 ○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기관 실정에 맞지 않게 일률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 국립대학병원의 인력을 혁신을 이유로 감축하고 있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는데, 민영화·인력 구조조정·직무성과급제 등 정부의 혁신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 한전 KDN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단계적 일반직 전환 필요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은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에 대한 상세계획, 인사감사 등의 자료 구비 필요 ○ 공공기관 임원 임명 관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인사 관련 회의록 및 결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후보자별 통과 사유 및 미통과 후보자별 결격사유 제출 필요 ○ 공공기관 자산매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면서 공공기관들이 자산을 헐값에 매각한다는 우려 지적 ○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고, 평가지표도 정권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제도의 획기적 개선 필요 ○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도 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평가업무를 주무부처로 이양하고 기획재정부는 최종결과만 검토하는 방안 도입 필요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고용노동부의 자회사 운영실태평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이행 여부가 반영되도록 배점 부여 등 개선 필요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현행 경영평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방식의 추가적인 개선 노력 필요 ○ 업무 전문성 등을 이유로 여러 기관들이 소관 공공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기관 내 유사 업무 수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행부서와의 업무 중복, 관리기관의 위탁수주 형태로의 운영 등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기관 신설을 지양하고 기존 자원의 효과적 활용 필요 ○ 공공기관에 대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개혁 및 혁신 필요 ○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용결격사유만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직원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 외에는 임용결격사유가 내부규정으로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결격사유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및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 에 대한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대상 법률 규정 필요 ○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사내대출, 과도한 복리후생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의 특혜 폐지 등 특단의 대책 필요 ○ 공공기관의 호화사택이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전 공공기관을 상대로 종합감사 실시 필요 ○ 공공기관의 겸직근무 위반, 근태 문제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으므로 법령 개정 등 점검 필요 ○ 공공기관 노조 조직률이 민간에 비해 높으며, 타임오프제도 시행에 대해서도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노력 필요 ○ 정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이 개별 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인 틀로 작동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핵심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정부 가이드라인의 현실화 필요 ○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가격 산정 시 적정한 원가 소요를 반영하는 노력을 통해 재무상황 개선 필요 ○ 지방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응 차원에서 정부 부처, 관계 부처 합동으로 근절 노력 필요
기후위기 대응	○ 기업들이 RE100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한 예산 및 금융 지원 필요 ○ 수소산업 관련 예산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에 대하여 정부가 수소경제 발전과 관련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 ○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 작성 대상 사업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정량적으로 측정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확대할 필요 ○ 기후대응기금의 주된 수입원인 온실가스배출권 수입 확보를 위하여 배출권 가격 정상화 방안 및 유사할당 비율 확대를 검토하고, 탄소감축 효과성이 높은 사업위주로 기금 지출사업을 개편할 필요 ○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철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제반 인프라 확충 노력 필요 ○ 공공조달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전략적 조달정책 추진 계획 마련 필요
노동정책	○ 고용서비스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도입 필요 ○ 화이트칼라에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자는 근로 시간 제한을 없애주는 정책 검토 필요 ○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컨설팅을 확인하여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 필요 ○ 특별한 사유 없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 수를 줄이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오히려 쉬었음 청년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청년층 고용 상황 개선 정책 필요 ○ 기업 지배구조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신속히 제시할 필요 ○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원직의 임금격차가 현저하게 난다는 점에서 공무원직의 실질임금에 물가인상율과 민간부문 인상율 등을 반영하는 등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공무원 인건비는 사업비로 편성되어 예산이 남더라도 총괄적 사용이 어려우므로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부처 내 사업별 구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을 총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체 공직에 대한 처우 및 처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 ○ 공무원들의 보수에 대한 경쟁력을 민간과 비교하여 합당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기재부지침에서는 공무원의 상용임금을 인건비로 분류하고 있으나 세부지침에서 기본경비 또는 사업비로 편성하고 있는바, 사업비로 임금이 편성된 공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무직은 해당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받으므로 인건비 편성의 이원적 구조를 개편하여 공무원직 처우 개선 필요 ○ 공무원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무원위원회 재추진 검토 필요 ○ 국가 AI 전략 확보를 위해 기술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필요 ○ 고용불안과 실질임금 감소가 가계소비 감소로 이어지기에 고용안정과 실질임금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 마련 필요
사회복지	○ 저출생과 관련 없는 예산들을 정리하고, 저출생 대응 현금지원 정책은 잘못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바우처 형태로 전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되 전기요금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을 통해 편셋지원 정책 검토 필요 ○ 기혼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혼 패널티 정책을 전수조사하고 필요시 범정부 추진기구를 조성하여 결혼 패널티 정책을 과감히 없애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부담금 감면·폐지가 속의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회적·공공적 필요에 의해 부담되던 사업의 유지 어려움 지적 ○ 보조금법 개정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의 하위유형으로 편입되었는데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지방이양사업이므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장애인거주시설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명시하여 국비지원 검토 필요 ○ 주거빈곤 아동 및 최소 주거기준 미달 개선, 장애인 복지를 위해 관련 예산 반영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 지방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과 예산을 축소시키고 해당 기금을 활용하여 세수결손에 대응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사업 축소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 ○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여 안정성, 포용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요
기획재정부 조직 및 운영	○ 소관 부처에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대응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재정당국이 세수 추계를 낙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 재정당국과 세수 추계기관을 분리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 성인지예산은 25.7조, 관련 사업 개수는 264개에 달하는 데 반해 기획재정부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기에 검토 필요 ○ 성인지예산이 톱다운으로 내려오다 보니 본질과 다르게 진행되는 문제가 있고 운영 기관이 법적인 근거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구축 필요 ○ 기획재정부 건물 보수 및 시설관리 작업 진행을 위해 국유재산기금 배정을 검토할 필요 ○ 기획이 재정을 선도해야 함에도 재정이 우선되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기획재정부 내 조직구조 개선 필요 ○ 인구구조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 ○ 기획재정부에 예산, 세제 등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지 않기에 이를 분리할 필요
기타	○ 매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10일이 총선 투표일 지정에 따른 임시 휴일이라는 이유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11일에 제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한 것이므로 감사원 감사 청구 필요 ○ 개식용 산업과 같은 사양 산업에 대한 폐업 지원 예산이 예산 운용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책정되었는지 검토하고 재원 마련 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할 필요 ○ 민생토론회에서 285개의 과제를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예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 신뢰 저하 문제가 발생 ○ 무리한 관저 이전에 따라 발생한 절차상 문제 지적 ○ 경제 형벌 완화 가운데 일부에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보호 방안에 대한 규제와 오염물질 배출 규제 완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추진 필요 ○ 군 장병 처우 개선 정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대한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 협동조합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 ○ 서민·중산층 분류를 할 때 OECD 중위소득 기준으로 할지,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할지 명확히 할 필요 ○ 기획재정부의 경우 지특회계의 지방정부별 배분 내역을 정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상법 개정 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나 투자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가 균형감을 가지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 ○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성별 수혜분석 통계를 포함하도록 강화하고 국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성평등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중위소득을 산정할 때 기획재정부2차관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관이 불참하고 복지예산심의관이 참석하는 관행의 개선 필요 ○ 글로벌지식협력단지의 건물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리노베이션 작업 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기금 배정 및 운영경비 삭감분 복원 등 방안 검토 필요 ○ 삼성물산 흡수합병 관련 ISDS 결과는 사실상 확정된 단계로 이해되는만큼 정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 소멸시효 도과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자료를 제공할 필요 ○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를 KDI에 출연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자본시장의 가격기능 정상화를 위해 주가조작 관련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주가조작에 대한 엄벌주의를 확립할 필요 ○ 관저 대상지 변경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처리한 것과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이전 문제를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부적절 ○ 대통령 관저 대상지 변경을 과장이 전결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대통령과 관련한 사항은 국유재산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 ○ 외교부장관의 공관이 용도폐지되지 않았고 기재부의 사용승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관저 공사를 착수한 것은 국유재산법 위반이므로 대통령실은 이에 따른 처벌 필요하며 기재부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와 제도개선 필요 ○ 핀테크 기업은 외환업무와 관련해 자금세탁 방지 등의 규율이 명확하지 않아 불법적 목적의 거래 발생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티메프-해피머니 사태가 상품권 발행·유통 관리 미흡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 검토 필요 ○ 생활소비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친환경 생활소비재 글로벌 공급기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 ○ 입국장 인도장 확대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 ○ 여수박람회장의 여수광양항만공사 이관 취지를 고려할 때, 정부선투자금을 재투자하거나 유예·분할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상환하게 해달라는 항만공사의 요청 검토 필요 ○ 반도체 인프라 구축 관련 송전선로 건설에 있어서 주민들의 저항이 많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배·보상 정책의 도입 필요 ○ 국세외수입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 효율적·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상법 개정 등 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 민간항공기교역협정 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운항업체, 제조업체 등 업계 간 의견이 상충된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노력 필요 ○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에 국제금융기구 출자 금액을 떠넘기는 것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회피하는 것이기에 분담금 납부 계획, 실적, 평가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 ○ 한전의 재무상황 악화를 고려하여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적정한 원가 소요를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 ○ 대통령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공사시 관저 장소가 변경되었으면 예비비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 ○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부정 선정 과정과 공사 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지출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발표 필요 ○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독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공공·산업 부문 AI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대북사업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투자자들에 대한 지원 등 정리 방안 모색 필요 ○ 개식용 종식법의 경우 최초 수용 불가 입장에서 과도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예타 면제까지 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전반과 폐업지원금 철회를 검토할 필요 ○ 상법 상 이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더하여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독립해서 감시와 견제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이사도 확대할 필요 ○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할 필요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독립이사의 겸직 기준이나 재직기간을 다른 선진국처럼 강화해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독립해서 감시·견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필요 ○ 국민연금 운용역의 경우 자료 요구가 너무 과다하여 업무 수행이 힘들다는 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 ○ 외국계 운용사와 한국계 운용사의 보수가 크게 차이나는 문제 해결 필요 ○ 경제의 구조개혁과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야합의가 필요한만큼 진정한 합의를 위해 정부가 노력할 필요 ○ R&D 재정삭감과 의료개혁 등의 문제로 인해 미래인력 구조를 정부가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 ○ 현재 개식용 금지법의 경우 내용적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간적 여유를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두고 해결할 필요 ○ 기금평가 결과가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수정과 보완의 대책 필요 ○ 기획재정부가 일관성 없는 정책 발표를 통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신뢰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지적 ○ 방산, 원전, 우주항공 분야가 7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해당 분야를 추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국제기구에 통계가 정확히 제출되지 않기에 기재부, 각 국제기구 이사실, 한은, 통계청, 각 부처가 역할을 분담해서 정확한 통계가 생성·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국민연금의 조직 문제 해결을 위해 운용수익률 배점이 낮은 경영평가를 개선할 필요 ○ 학교용지 관련 유희지에 대한 용도폐지 문제 검토 필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 예산 사전심의권 범위 확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역할을 할 필요 ○ 군장성들만을 위한 군골프장을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군장병들 처우 개선을 위해 활용할 필요 ○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로 인해 범죄, 탈세 및 자산증여 등이 진행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고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기본법 제정 논의 필요 ○ 교육청이 점유 중인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용도폐지를 추진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하기보다 양여를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채권 소멸 방지를 위해서 제재 부과 방안 등을 마련하고 미분류 채권에 대한 세부 분류 기준 등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할 필요 ○ LH의 철근 누락 공사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처 방안 마련 필요 ○ 국유재산이 공익적 목적으로 국민의 삶과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무상임대 확대 등 적극적 책임을 다할 필요 ○ 허위매출을 통해 입찰자격 사전심사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국가계약법과 납품대금연동제가 상충하는 것이 있어 제도 간 충돌을 해소하는 개선 방안 필요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 지원 정책 검토 필요 ○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팀의 사퇴와 개편이 필요 ○ 비영리법인인 한국담배판매인회의 인건비 사용제한으로 인한 다양한 부패와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사운영 등에 대한 기재부의 검사·감독 필요 ○ 과기부 장관과 협업하여 민간에 위탁되고 있는 R&D 사업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관리·감독 필요 ○ 부실시공 업체가 별점을 받았음에도 집행정지를 통해 이를 무력화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에 대해 근절방안 마련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e-나라지표 중 일부 지표의 그래프에 오류가 있으므로 모니터링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관리할 필요 ○ 조달청 등 기획재정부 소속기관이 감사원 지적에 대해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독 필요 ○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 조작 문제로 인해 대외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어 이를 회복하고 정상화시키는 방안 필요 ○ 경제안보공급망이 공급망안정화법, 조달사업법,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등 다양한 곳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 ○ 핵심 원자재 비축과 관련하여 조달청에서 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하는 이관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핵심 광물 또는 핵심 원자재를 관리할 재정적인 수요를 파악해 재정 확보 계획 마련 필요 ○ 기획재정부가 AI 시대의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재정과 기술 지원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할 필요 ○ 다양한 정책 수립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대책 마련 필요 ○ 국유지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문제 ○ 국유지에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획재정부는 조사와 조치를 취할 필요 ○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의 채널 일부가 경제 관한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편협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 필요 ○ 특정 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임대 관련하여 캠프코의 특혜 여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필요 ○ 은행들이 공적책임은 무시한 채 금리 상승기에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고 이를 통해 성과급, 퇴직금 잔치를 벌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와 유사담배를 조속히 규제하기 위해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기획재정부는 문서목록 중 일부를 은닉하고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법률 위반으로서 징계 대상 ○ 기획재정부는 경제전망 발표 시 ‘정부소비’를 반드시 공개할 필요 ○ 국유재산 관리 소홀로 유희건물과 대부료 미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 혁신제품의 양적 ‘지정’에 치중하여 혁신 제품/기업의 후속관리가 부진하므로 질적 관리에 집중할 필요 ○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은 조달사업의 주요업무임에도 수출 실적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 해외 물품/시설조달 진출 현황이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문제이므로 해외 조달시장 진출 실태파악과 종합 전략계획을 수립할 필요 ○ 민자사업 소요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으므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별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개별 사업에 대한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철저한 관리 필요 ○ 불법 복권 사이트 차단을 위한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소요되어 그 실적이 부진하므로 불법사이트 조기 차단을 위한 신속심의 등 제도 개선 필요 ○ 공공계약 내 고정불변가격계약 체결하지 않도록 개선 필요

나. 세제 부문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조세정책 일반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원인 중 하나가 성급한 감세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세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 필요 ○ 지속적인 부자감세 정책은 의무지출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정 기반을 붕괴시키므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기획재정부의 역할 필요 ○ 우리나라의 높은 조세부담률 수준과 각 세목 세율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감세를 통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필요 ○ 고령화에 따른 사회지출 증가 소요와 일본 및 독일 등 고령화 국가의 증세 추세, 소득·자산의 양극화, 지방소멸 등을 고려할 때, 감세 정책은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감세정책을 재고할 필요 ○ 최근 국세감면율이 범정한도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으므로 개별세법상 감면항목을 전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시켜 조세지출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 ○ 고소득자에 귀착되는 조세지출이 2021년 10.4조원에서 2025년 16.6조원으로 5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 조세지출 귀착 비중이 2021년 10.9%에서 2025년 17.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소득 및 대기업 중심의 세법개정 문제점 지적 ○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되어 법인세 실적이 2023년 80.4조원으로 2022년 103.6조원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설비투자 지수는 107.5로 2022년 113 대비 감소하였고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은 2022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년 대비 17.2조원 증가한 문제점 지적 ○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 또는 세제개편 계획을 보면, 부의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상위 1%의 초부자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감세정책 뿐이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 ○ 조세의 기능은 재원을 조달하여 소득과 부의 재분배와 함께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것인데, 정부는 부자감세, 부동산 부자, 초이익 법인, 주식 부자 등을 향한 감세로 이를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 ○ 초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중심의 감세로 인해 재정건전성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붕괴되었다는 지적 ○ 경기침체, R의 공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세로 인해 재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여러 정책적 수단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국채 상승으로 인해 국가 총자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지속적인 대규모 감세로 인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에서 제시된 초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 ○ 작년과 올해 국내 소비 증가폭은 40% 넘게 감소한 반면, 해외 소비는 작년 138% 증가, 해외 투자는 지난 2년간 26% 증가한 점에 비추어 감세로 만들어진 소비와 투자 여력이 해외로 지금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 ○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G7, OECD 평균 수준에 급격한 속도로 근접했으므로 앞으로는 적절한 적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하면서 감세정책을 유지한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다는건 모순된다는 지적 ○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붓물을 이루고 있으나 직장인에 대한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지적 ○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 법인세 등의 세율이 높은 상황에서 상속세 할증까지 할 경우 세계 1위의 세율이 된다는 점에서 감세정책을 통한 장기적 세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 ○ AI 시대로 인한 고용시장의 변화와 사회적 양극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극소부 초부자에게만 집중되는 경제적 이익을 일정 부분 국부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 건전 재정을 유지해 위기에 대응해야 되는데 부자감세,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세를 통해 위기 시기에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없어졌다는 지적 ○ 세수결손에 따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교부재원 미교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협의 필요 ○ 지속적인 세수결손 등에 따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 상실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기업 가치 제고등을 위해 상속세, 배당세 등의 세제 개편 필요 ○ 과도한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 결손으로 경기 침체의 발생 우려되므로 유효적절한 정책 시행 필요 ○ 감세정책등이 경제에 활력을 가져오지 못하는 정책 운용에 대한 검토 필요 ○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자산세수가 감소되는 것은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비정상적이므로 세금 관련 정책 변화 필요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례에 부합하도록 예규 및 집행기준을 운영할 필요
소득세 관련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각종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 중인데, 동 제도가 폐업한 자영업자들에게도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확대 적용 방안 검토 필요 ○ 세계적인 연구에 따르면 소득세와 자산세의 누진세제가 소득의 불균형 또는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므로 이를 도입하여 우리 사회의 부와 소득의 재분배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 ○ 금투세 시행여부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사모펀드의 과세를 완화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이를 폐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국내주식시장에서 해외주식시장 또는 부동산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주식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지할 필요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실질적 참여율이 저조하고 임대료를 인하하면서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정책효과를 높이고 참여율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며,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 ○ 주주환원촉진세제가 기업 오너의 배당을 늘리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비판에 대한 기재부 입장에 대해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질의 ○ 가상자산 과세는 국회 차원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기재부는 우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일반 투자자의 거래내역을 제출받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 ○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해 부동산 사모펀드가 과세완화 혜택을 받고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상장사의 밸류업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지할 필요 ○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추진되는 문제점 지적 ○ 전체 세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종업원 할인 금액을 과세하는 것은 직장인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실질적인 증세이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구비 필요 ○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거래세의 세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금투세 미도입시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세 원복 필요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에 대한 실태 조사 필요 ○ 소득세 기준금액 방치등은 사실상 직장인 증세에 가까우므로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감면논의를 우선할 필요 ○ 무계단위를 활용한 고급의류의 과세 가능성 검토 필요 ○ 역사적 합의로 마련한 금융투자소득세 법안에 대한 유예 및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 법안에 대한 기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금융투자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통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 유인을 늘리고 모험자본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의미에 대한 질의 ○ 금융투자소득세 법안에 담겨진 의제취득가액제도의 의미에 대한 질의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폐지 및 특수관계 관련 규정 재정비를 통해 특례 악용 방지 필요 ○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가 소득공제 대상의 중요지침이 되고 있으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의사 또는 병원마다 다르므로, 이에 대해 기재부와 국세청이 구체적인 관련 지침을 만들 필요 ○ 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액 투자자 위주인 미술품 조각투자에 대한 과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법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필요 ○ 기업의 영업실적 제고 및 시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금투세 폐지 필요 ○ 금투세 시행 시 집행방법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방식 등에 대한 혼선이 있으므로 폐지 필요 ○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높아진 양도세로 인해 거래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수준 점검 필요
법인세 관련	○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소수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취지와 달리 국내 설비 투자 및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과도하게 해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 실시 내용
	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기반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보완 검토 필요 ○ 반도체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국가적 지원 필요 ○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한다면 법인세 등의 세금으로 다시 충분히 보전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법인세가 20% 떨어지면 62.5%에 달하는 기업이 비수도권으로의 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자료에 비추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 지역별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비수도권에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 ○ 법인세를 낮추면 배당이 일반 국민이 아닌 상위 10%, 1%에 집중되어 결국 부자감세가 된다는 지적 ○ 배터리 산업은 최근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세계의 배터리 공급망은 자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므로, 기업의 초기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세액공제액 직접 환급 및 양도 제도를 신설할 필요 ○ 인공지능(AI),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장비 및 토지·건축물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할 필요 ○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활성화 및 낙수효과는 불확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실한 측면이 있는데, 감세정책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재고할 필요 ○ 미국은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기한이 20년이고 영국과 독일은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기한이 무제한인 점을 참고하여 세액공제액 이월공제를 현행 10년에서 연장할 필요 ○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고 주요국의 지원규모가 우리나라에 비해 더 큰 수준이므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율을 일괄적으로 10%p 상향하고, 세액공제액에 대한 환급 제도를 신설하거나 세액공제를 기업 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 ○ 톤세제는 법인세 감면효과가 있고, 환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톤세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효과가 크고, 주요국들이 톤세제를 영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톤세제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미국에서 IRA를 통해 청정수소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소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수소경제에 대한 투자를 확충할 필요 ○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받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액 비율의 차이는 2021년 34.2%에서 2023년 55.4%로 증가하였는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소재기업이 R&D 및 시설에 투자할 때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지역별로 법인세율을 차등적용할 필요 ○ 기업 영업실적이 91.4% 증가하고 순이익이 107.2% 증가하는 등 2024년 상반기 기업실적이 2023년 상반기 대비 크게 증가하였는데, 2023년 법인세 감세조치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 실시 내용
	가 2024년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질의 ○ R&D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등 가이드라인에 대해 질의 ○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과 신규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장 운영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 게임산업은 콘텐츠 산업 전체 수출액 중 67.8%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 e스포츠 산업규모는 1.1억 달러에 불과해 국제 e스포츠 시장규모 14.2억 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할 필요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수도권 밖의 투자에 대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내년도 법인세수 40% 증가의 현실성 검토 필요 ○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구축 및 과세근거자료 제출 의무화 법안마련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안의 내용과 도입취지에 대한 질의 및 주주환원을 잘 해왔던 우량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검토 필요 ○ 주요국 대비 한국의 반도체 시설투자 인센티브가 낮으므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율을 10%p 상향할 계획에 대한 질의 ○ 자발적으로 고배당을 지속해온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주주환원 촉진세제 관련 역차별 문제가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
국제조세 관련	○ 디지털세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국내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해외 법인을 대거 설립하고 있으며 조세피난처 해외 송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과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질의 ○ 구글은 연간 국내 매출액이 12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나 2023년에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저조한 수준으로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과 비교할 때 법인세 납부 실적이 저조하므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 ○ 디지털세 도입 등 IT기업들의 해외 자회사등으로 매출을 이전을 통한 세원의 축소 관련 대책 수립 필요 ○ 해외 가상자산의 자발적인 신고의무는 성실신고여부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완화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부동산세제 관련	○ 종합부동산세 폐지 또는 완화 정책은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는 지적 ○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개편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기재부가 준비 중인 개편 방향에 대해 질의 ○ 종부세 폐지 시 지방 세입 감소에 따라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세수결손이 가속화되며,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 또는 인하 시 세수결손을 메울 방안을 마련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서울과 수도권만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가 회복되어 지방 중소도시는 이와 관련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 필요 ○ 부동산교부세를 저출생으로 활용하는 것은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던 일부 당정의 정책추진과 상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종부세 폐지와 관련된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
상증세 관련	○ 가업상속의 사후관리가 7년에서 5년으로 줄어 기업의 고용 유지라는 제도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필요성 심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 ○ 상속은 사유재산, 시장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한 공동체에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 ○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액 인하도를 보면, 과표구간 10억 이하 대상자가 25만명으로 감세 규모 1조원인 반면, 과표 30억 초과 2302명에 대한 감세 규모는 2조 2,000억원으로 고용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 ○ 상속세 과세표준은 1997년에 정해지고 나서 27년간 바뀌지 않아 실질적인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 국가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는 지적 ○ 상속세 과세비율이 2005년 0.8%에서 2023년 6.8%로, 결정세액은 2005년 7,000억에서 2023년 12조 3,000억원으로 과세대상과 징수액이 크게 늘어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집값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의 과세대상과 징수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 ○ 기업의 최대주주 할증으로 상속세가 60%까지 상승하는데, OECD 평균에 비해 과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뜨린다는 지적 ○ 25년간 유지되어 온 상속세 최고구간을 부와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 ○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백년가게로 선정된 가게가 정작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 ○ 서울 근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통한 가업상속,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최대 1,200억원의 상속세 공제 등 가업상속제도의 문제점 지적 ○ 상장기업인 도이치모터스가 밸류업 우수기업이 되면 매출액 제한 없이 1,200억 공제가 가능해는데, 이러한 사례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 정부는 2025년 유산취득세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2024년 상속세 개편안을 2025년에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 유산취득세 도입시 일괄공제는 자동으로 없어지게 된다는 점과 유산세를 적용하고 있는 4개국 중 일괄공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괄공제보다는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 ○ 수학이나 통계학의 기본이 안된 가짜뉴스로 인해 33%의 상속세 실효세율이 13.9%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 ○ 상속·증여세 개편은 향후 5년간 18조 6,000억원의 감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면혜택이 상위 2%한테 돌아가며, 총 상속 발생 인원의 0.03%인 100명이 총 상속세액의 60%, 상위 2%에 속하는 7180명이 총 상속세액의 95%를 부담하기 때문에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는 지적 ○ 부부 간의 증여·상속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명의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서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현행 증여세·상속세는 결혼과 양성평등 가치에 위배된다는 지적 ○ 실질적으로 지배주주의 주식을 할증평가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므로 개별 기업들의 특성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개선방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 유산취득세 도입을 통해 조세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점과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필요 ○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시 자산소득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개선할 필요 ○ 가업상속공제는 부의 세습과 집중에 기여하고 경제적 균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점,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이 있었던 점,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성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필요 ○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배우자 상속 후 자녀 상속 시 발생하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배우자공제를 확대할 필요 ○ 최대주주 할증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작동이 어려우므로 경영권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는 경영권 매각 시 양도차익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 ○ 우리나라는 GDP 대비 상속세 비율이 높고,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 ○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실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세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 ○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 대상 기업, 조건, 기간 등에 대해 공시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부동산 자산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상속세 과세 대상 및 징수액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자녀공제액 확대 및 과세표준 조정 등을 통해 상속세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 ○ 상속증여세 개편으로 인해 누적법 기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18.6조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하는 문제점 지적 ○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업 자산의 일정비율을 동원해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세금을 면제하는 등의 세감면 필요성 심사를 도입할 필요가 없는지 질의 ○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사유에 갑질 등 노동관계법 위반, 기술탈취 등 공정거래법 관련 범죄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질의 ○ 가업상속지원방식을 공제가 아니라 10% 내외의 저율의 분리과세로 개편하여 소액이라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상속공제 규모가 확대되어 면세율이 높아질 경우, 피상속인의 미실현 양도차익 비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마련할 필요 ○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 기업승계의 부담이 있어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의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이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 ○ 기업상속공제제도가 부자감세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제도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상속공제요건에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을 포함시키는 방안 고려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기재부의 의견과 관련해 과표 하위구간의 공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검토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 베이커리 카페 및 강남의 꼬마빌딩을 활용한 기업상속공제의 허점에 비추어 기업상속공제금액 확대에 대한 검토 필요 ○ 독일 등 기타 국가와의 경제환경 특성 및 사회이동성 고려 시 기업상속공제의 무분별한 적용대상 확대 지양 필요 ○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 높은 상속세율 개선 시 주거빈곤 아동 및 장애인 기본권 부분 또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필요 ○ 해외에서의 편법적인 증여·상속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무신고가산세의 상향 등 입법 검토 필요 ○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사업 승계에 대한 상속공제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 필요
관세 관련	○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 가입 시 국내 항공기 제작업체들이 외국 대형 항공기 제조업체와 경쟁을 해야하는 점을 고려할 때, TCA 가입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이므로 가입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연구용역 등을 추진할 필요 ○ 전기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상계 관세 부과 또는 덤핑방지 관세 등의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미국 대통령 선거 등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 무기화 대응 관련 특별 대책 수립 필요 ○ 미국이 중국산 부품을 활용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또는 배터리 산업업체 대상 추가적 관세 부과 및 무역 보복을 행할 수 있으므로 기운영 중인 TF와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 필요 ○ 할당관세가 실제 물가 하락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부가가치세, 유류세, 주세 등 간접세 관련	○ 신용카드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정책이 서민 소상공인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검토 필요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폐지 법률의 시행일을 계속 연장하고 있으므로, 동 세제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해 조세체계를 다시 정비하거나 폐지 법률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 ○ 대중형 골프장에서 이용우선권을 판매하는 것은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준 본래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용우선권을 구매한 이용자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 ○ 서민연료로 불리우는 등유가 도시가스에 비해 개별소비세율이 높아 소득역진성을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위해 등유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 ○ 레저용 고급 요트 대상 사치세 부과 등 개별소비세의 새로운 세원 발굴 필요 ○ 3월 개통한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은 기관별 양식 및 표기방식 차이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정상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가향탁주를 기타 주류에서 탁주로 분류하는 정책은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고, 다수의 제조장이 반대하고 있으며, 막걸리 관련 특허를 위협할 소지가 있는 점을 지적 ○ 등유의 주 소비계층을 고려하여 관련 물품 대상 개별소비세 폐지 검토 필요 ○ 주세제도의 종가세 유지로 인한 국내 전통주의 고급화등을 막고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주세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 국민 절반 이상이 보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치세를 부과하나 고가의 레저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 현실적합성이 떨어지는 세금에 대한 개편 필요 ○ 8차 연장을 통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운용은 법적인 정성을 저해하는 문제등이 있으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 시점 및 추후 운영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양육자 책임강화 및 동물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목적세로서의 반려동물세 논의 필요
세수실적 및 세입예산 관련	○ 세수 추계 모형의 고도화를 추진하더라도 정확한 세수 추계는 불가능하므로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재정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초과 세수 또는 세수 부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유류세 인하 6조원 등 세수결손의 원인은 부자감세라기보다는 서민들의 민생을 위한 감세라고 봐야 한다는 지적 ○ 국회의원 1명이 있는 지역구의 교부세가 무려 1447억 5000만 원이 줄어들어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지방정부의 사업들이 세수 핑크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지적 ○ 교부세 불용 등으로 인하여 세수결손의 책임과 피해를 지방정부나 교육청에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역대급 세수핑크가 발생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근로소득세는 크게 오르고 법인세는 하락하여 대기업 중심의 감세 효과만 크게 나타났다는 지적 ○ 부동산 거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자감세를 감추려고 세수 추계를 실패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지적 ○ 세수추계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중립적인 민간기관에 이를 위탁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 금투세 폐지로 인해 4조원, 증권거래세 인하로 6조원 정도의 세감이 발생하는데, 재정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 실시 내용
	○ 국세수입 총량이 2022년 384조, 2023년 335조, 2024년 330조로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세가 우리 경제의 선순환 발전과 가계, 기업, 정부의 균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 ○ 기업의 하반기 영업실적 둔화로 법인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동산 거래 둔화로 양도소득세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둔화로 인한 민간 소비 감소로 부가가치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등 경제지표 전망이 상당 부분 낙관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2025년 세수를 재추계할 필요 ○ 반복되는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인 추계모형 개선과 같은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궁극적으로 소수 업종, 소수 기업이 국가 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산업의 구조적 개선 필요 ○ 2024년 세수재추계 결과 당초 전망보다 29.6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수결손에 대해 세입 추가 경정예산안을 제출할 필요 ○ 세입 결손에 따른 구체적 대응 방안을 국회에 사전적으로 보고 및 협의할 필요 ○ 악화되는 지방경기를 고려하여 세수결손과 관련되는 지방재정에 대한 예산안 편성 시 관련 사안의 반영 필요 ○ 2023회계연도 세수결손 및 이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고, 재정청문회를 추진하며 세입결손 발생 시 구체적 대응방안을 국회에 사전보고 및 협의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30조 가량의 세수추계 결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4/4분기 예산 배정계획 및 이에 따른 재정대응 방안을 국감 마지막날 발표하는 태도의 개선 필요 ○ 세수결손 규모를 줄이도록 노력 및 세외 수입 체납액등을 활용한 세외수입 확대 노력 필요 ○ 경기침체, 감세정책, 예측모델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세수결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수립 필요 ○ 중앙정부의 세수 추계오류로 인한 세수 결손을 지방정부에 책임 전가하는 정책의 개선 필요 ○ 대규모 세입결손에 따른 세입계획의 변경 시 국회의 심의 확정을 받을 필요 ○ 경기상황에 따른 세수 변동은 불가피하므로 예산 회계 처리 집행을 넘어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을 필요 ○ 세수결손과 관련해 교부세·교부금이 축소되고 있는데 지자체의 민생 또는 안전 관련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연말에 세수가 추가적으로 확보될 경우 일부 추가 교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 ○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추가소비 특별공제 등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내년도 세입예산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 필요 ○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세입의 오차 최소화 및 추경편성을 통한 세출 조정을 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세감면을 범정한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도 준수를 의무화하며, 신규 국세감면에 대한 예타제도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소비진작 효과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지원을 검토할 필요 ○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국세감면을 줄이거나, 재정수입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체수단이 있는지 및 감세와 긴축재정을 함께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 ○ 우리 경제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의 문제점 및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방침의 재검토 필요성 제기 ○ 일시적 소비부양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기 보다는 건설투자 또는 소상공인 등 부문별 맞춤형지원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 질의 ○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의 조세정책 목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질의 ○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으로 투자공사에 무리한 정부 배당 비율을 요구한 사항과 관련하여, 각 기관별로 배당비율을 표시할 필요 ○ 하반기 주요 경제 전망치등을 모니터링 후 2025년 세입 조정을 검토할 필요 ○ 3년 연속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위반한 사례에 비추어 조세지출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요불급한 항목의 폐지 및 개별세법 감면조항들의 조세지출예산서 반영 필요
기타	○ 조세지출이 2025년도 전망으로 2,600억원까지 증가했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는데, 예비타당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매출 산정 방식 개선과 조세회피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과세 가능한 매출액 관련 정보에 대해서 적시성 있는 접근을 위해 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한국거래소는 분기별로 상장사 결산 실적을 보면, 기재부가 발표한 상장사 영업이익 감소보다는 훨씬 큰 폭으로 떨어졌으므로 시장 상황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라는 지적 ○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30.2%에서 21.6%로 낮췄는데, 이는 국제사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목표량이라는 지적 ○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공익법인이 다양한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공익법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 ○ 기후변화 문제의 중대성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조세지출 제도를 강화할 필요 ○ 세외수입 미납액 및 불납결손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기·고액 체납자 재산·소득 정보조회권 강화 등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할 필요 ○ PX 매출 상위 10개 물품이 모두 술, 화장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품별 면세한도량이 군인복지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질의 ○ 국세 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관리가 부실하므로 국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세 통계 관련 기구 신설, 현재 국세청 산하 국세통계센터의 전국적 확대설치, 시스템 구축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 ○ OECD 대비 낮은 조세부담률이 OECD 대비 낮은 복지수준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하므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필요 ○ 미국은 AI 기술인력을 유입시키려 노력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0.3명의 순수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필요 ○ 민간위탁 R&D사업의 관리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정보 공유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필요 ○ AI기술 발전과 디지털 창작물 형태의 다변화로 세제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AI 산출물에 대한 과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TF 구성 및 AI기본법 제정 등을 검토할 필요 ○ 관세청의 밀수단속 업무에 대한 기재부의 관리 강화 필요 ○ 직원할인 과세 관련 의원실 정보 협조한 기업에 대한 기재부의 색출 등에 대한 즉각적 시정 필요 ○ 한국의 GDP 대비 세입이 선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통계는 중앙정부 수입만 반영된 결과이므로 관련된 정확한 통계 생성·전달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금년도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의 세부담 귀착효과를 상세하게 작성할 필요 ○ 담배소비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전환 비율의 일몰연장에 대한 검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가상자산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관세청이 관련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입법 검토 필요 ○ 증감법 개정을 통해 국회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 ○ 조세지출의 총량적 관점에서 기후영향평가가 필요하므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조세지출 제도 도입 검토 필요 ○ 영세자영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재설계 및 적극적 홍보 필요 ○ 견제 장치가 부재한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결정문 공개를 통해 투명성 제고할 필요 ○ 조세특례 일몰의무제 도입등 조세특례 일몰제도와 관련해 전면적 개편방안을 모색할 필요

2. 국세청(서울·충부·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 포함)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부과·징수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위한 자회사 주식의 지주회사 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속의 경우 법 개정으로 과세가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관련 사안에 대한 경위파악 필요 ○ 비상장주식 물납의 경우 사전에 평가를 면밀히 하고, 물납 허가 시 경영 실적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강화 필요 ○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초과납부 원천징수세액 자동환급 시스템 구축 및 원천징수세율 인하 필요 ○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일괄납부제 재도입 필요 ○ 배달산업 관련 일관된 사업자 등록지침 마련 필요 ○ 골프장 캐디피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검토 필요 ○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거래형태가 등장하면서 개인 간 거래를 가장한 조세탈루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의 ○ 주거용 부동산 중 거래금액 5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적절한 감정평가 없이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문제에 대한 보완 필요 ○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지방세무서의 감사결과와 관련해 대행사업을 면세사업의 예외로 인정한 이유와 지방세무서별 관할 지방공사의 대행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경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우와 추정하지 않는 경우가 혼재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고액 체납자 징수활동 강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수치에 대한 질의 ○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시기 및 부과금액 산정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질의 ○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이 지연되는 가운데,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OECD 등 국제기구와 주요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질의 ○ 중고거래에 대한 소득세 부과시 소액거래하는 일반시민에게 세금폭탄 안내가 가지 않도록 정확한 매출 파악 시스템 정비 필요 ○ 소상공인의 원활한 세금신고를 위해 홈택스 서버 증설 등 운영개선 필요 ○ 세무대리 플랫폼 활성화로 납세자들의 세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홈택스 과부하 및 세무직원 업무량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탈세·체납 등 세원관리	○ 창업중소기업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악용한 조세탈루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수조사 등 제도 정비 필요 ○ 글로벌기업의 조세회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강화, 자료요구권 신설, 자료제출 거부시 미제출 자료의 증거능력 불인정, 이행강제금·형사처벌 등 제재수단 도입, 조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제재수단 입법화,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권고하는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신고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검토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 ○ 가짜 석유를 판매하여 탈세하고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 근절을 위해 부가세 수시부과 등 제도개선 필요 ○ 고액·상습채납자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명단 제외 및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악순환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 필요 ○ 고액·상습채납자 명단에 기재된 연령이 명단 공개 연도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채납자 식별을 위해 생년월일로 바꿀 필요 ○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내 법인 설립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하이마트 전 회장 증여세 소송 패소 책임소재, 제도상 문제 유무, 소송수행 과정 상 의혹 등에 대한 질의 ○ 국세청의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이 2% 수준이고, 지급액은 탈루세액의 5%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세수 결손에 대응하여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구글 수익에 대한 과세방안으로서 유튜브프리미엄 가입비, 플레이스토어 수입 등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국내 이용자가 대금 결제 시 20% 이하의 원천징수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초과납부 원천징수세액 자동환급 시스템 구축 및 원천징수세율 인하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일괄납부제 재도입 필요 ○ 지방 창업기업 확인제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 환수 필요 ○ 역외탈세 조사 인력 증원 필요 ○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탈루 근절을 위해 매년 검증하는 대상인원을 확대할 필요 ○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강화 필요 ○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가 어려워므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0%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조항을 해외자산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국세청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출국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동일인의 출국금지 반복 해제 횟수 등을 관리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있으므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 ○ 배달산업 관련 일관된 사업자 등록지침 마련 필요 ○ 골프장 캐디피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검토 필요 ○ 허위 세금계산서를 활용한 탈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고소득 유튜버 포함 필요 ○ 사업장폐기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 군부대에 대한 지도 또는 조사 수행 필요 ○ 국민 탈세제보 중 국세청이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해로 이월하는 사안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담당인력 1인당 처리건수가 무려 146건에 달하며 탈세체보 처리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력 충원, 업무체계 점검 등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 ○ 컨설팅 업체를 통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탈루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인력을 확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 ○ 2024년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 규모가 100조원에 달함.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알머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본사가 아닌 연구시설에 대해 착수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특혜를 준 것이라면 관계 직위자는 책임을 질 필요 ○ IT기업들의 해외 자회사등으로 매출 이전을 통한 세원 축소 관련 대책 수립 필요 ○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출처에 대한 국세청의 엄정한 조사 필요 ○ 문다혜씨의 에어비앤비 불법 숙박업 운영, 임대수익 탈루,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책 표지 디자인비 수령액 등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과 진실규명 필요 ○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프리카TV BJ의 개인계좌로 받는 후원금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가 미흡하므로, 정확한 수수료 신고를 위해 과세근거자료 제출 의무화 법안 및 법인세 부과방안 검토 필요 ○ 에어비앤비에서 숙박제공자로 활동하는 사람의 39%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가 불법영업 중이므로, 숙박영업 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영업을 하도록 시스템을 바꿀 필요성 제기 ○ 특정법인을 통한 우회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과세예정인데, 국세청 출신 컨설팅업체가 올해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가업승계가 가능하다는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편법증여에 대한 소급과세의 필요성 검토 및 편법증여 방지대책 마련 촉구 ○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의 가업승계 특강과 관련해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와 합병비율의 조정 등 편법 증여 또는 승계·홍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 및 일감몰아주기 여부와 합병비율에 대한 조사 필요 ○ 미성년자 불법·편법 증여 추세 현황과 어떤 형식으로 불법·편법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정리될 필요 ○ 조세불복환급금의 증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 ○ 고액소송 패소율에서 높은 패소율을 기록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는지 질의 ○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탈세 조사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의 ○ 글로벌 빅테크 기업 등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이 높는데, 이는 국세청의 소송 대응역량이 부족함에 기인하므로 전문변호사 인력 확충 등 체계적인 소송 대응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탈세신고를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아 피해사례가 속출하므로 제22대국회에서는 법률개정을 통해 탈세신고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세청의 협조 필요 ○ 영세자영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재설계 및 적극적 홍보 필요 ○ 비수도권 및 고령층 대상 대면 세금신고 지원이 시급하므로,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인력을 지방 고령화 지역에 재배치할 필요 ○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같은 불법행위 협조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 강화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리 강화 필요 ○ 가상자산 강제집행을 위한 창구를 일원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가상자산 지갑 보관업자를 통해 공매 절차 진행 등 가상자산 압류 및 매각 전반의 과정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 필요 ○ 세수추계참여 기관으로서 기재부에 현장상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미납된 체납액 관리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사후검증 등	○ 문다혜씨 관련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부동산 취득, 주식 매수 등에 대하여 조세탈루 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 ○ 노태우 비자금 관련 공익법인, 페이퍼 컴퍼니, 조세 피난처 등을 이용한 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미흡한 조치에 대한 지적 및 적극적 조치 필요 ○ 신성통상의 증여세 절감을 위한 주식 저평가 의혹,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법적 조치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김건희 여사의 선물 수수 관련 증여세 부과 조치 미흡 건에 대한 지적 ○ 병원에 대한 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세무조사 증가. 세무조사가 의사단체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의정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관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 창업중소기업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악용한 조세탈루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글로벌기업의 조세회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강화, 자료요구권 신설, 자료제출 거부시 미제출 자료의 증거능력 불인정, 이행강제금·형사처벌 등 제재수단 도입, 조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입법화,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권고하는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신고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검토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 ○ 김혜경씨 수행비서 배소현씨 관련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조사 필요 ○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도는 법률적 근거를 우선적으로 마련한 후 추진할 필요 ○ 가짜 석유를 판매하여 탈세하고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 근절을 위해 부가세 수시부과 등 제도개선 필요 ○ 고액·상습채납자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명단 제외 및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악순환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고액·상습채납자 명단에 기재된 연령이 명단 공개 연도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채납자 식별을 위해 생년월일로 바꿀 필요 ○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내 법인 설립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하이마트 전 회장 증여세 소송 패소 책임소재, 제도상 문제 유무, 소송수행 과정 상 의혹 등에 대한 질의 ○ 웨딩업체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및 축소신고를 통한 탈세 행태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 수행 및 엄격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세정지원 방안 함께 검토 필요 ○ 국세청의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이 2% 수준이고, 지급액은 탈루세액의 5%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세수 결손에 대응하여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구글 수익에 대한 과세방안으로서 유튜브프리미엄 가입비, 플레이스토어 수입 등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국내 이용자가 대금 결제 시 20% 이하의 원천징수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초과납부 원천징수세액 자동환급 시스템 구축 및 원천징수세율 인하 필요 ○ 세무조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정보는 활용 후 즉시 폐기할 필요가 있고 관련하여 세밀한 운영지침 마련 필요 ○ 대통령 관저 공사 수행 업체의 성실신고 의무 미이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의혹에 대해 사전에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파악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지적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세를 위해 주식 등 보유 및 거래 현황을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는 유지할 필요 ○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 불법사금융 신고는 매년 10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세무조사 착수율은 1%대에 그치는 실정으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 필요 ○ 호반건설의 승계 관련 합병 이익의 증여가 특수관계자에게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관련된 적절성 검토 필요 ○ 가상자산 압류에 대한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추징 수준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인력 배치 등 대책 수립 필요 ○ 납세자의 성실도, 미조사기간 등과 관계없는 무작위 추출방식 세무조사는 실적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성·공정성을 갖춘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게 기준을 정비할 필요 ○ 도이치모터스에서 권오수회장에게 준 20억원의 성격에 대한 조사 필요성 제기 ○ 개인간 책 매매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이 원칙인데, 신학림씨가 본인 책 3권을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책값을 받은 사례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 ○ 세무조사 중 납세자 금융거래 정보 일괄조회 및 디지털포렌식의 실시건수가 높으므로 무분별한 계좌추적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등을 막기 위한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빅테크의 세무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제도를 포함한 대책의 조속한 수립 필요 ○ 세무조사 시 ‘플리바게닝’ 사례를 전수조사 후, 사실인 경우 청장 및 관계자의 사퇴 및 위증죄 처벌 필요 ○ 투기성 주택보유 외국인에 대해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친 철저한 세무조사 필요 ○ 구글, 넷플릭스 등 외국계 기업의 매출 과소신고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현황 및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
납세자 보호 및 세정지원	○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에 대한 환수금 발생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신설로 세무서 직원들 업무 부담이 커지고 환수에 따른 대량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를 지양하고 개별조회를 원칙으로 할 필요 ○ 월세세액공제 신청이 저조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원스톱 세액공제시스템 구축 필요 ○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혜택을 악용하여 탈세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므로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또는 우대혜택에 대한 재검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에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겪은 사업자 외에 알렛츠 등 유사 사례 추가 필요 ○ 채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기준금액 완화 필요 ○ 국세행정 상의 오류로 인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률이 매년 90%를 상회하고 있고 조사권 남용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대로 무분별한 과세권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세금포인트 현금화 등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가업승계 납부유예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 및 연구 필요 ○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필요 ○ 일정 금액 이상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무화하되 평가수수료에 대하여 공제혜택 부여 필요 ○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거주하다가 자가를 구매하는 경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요건 적용대상을 현행 세대주에서 부부합산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 보완 필요 ○ 시가 형성이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되어 실질에 맞지 않게 과세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확대하여 개선할 필요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자가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 ○ 모범납세자 포상제도 혜택 중 세무조사 관련 우대 혜택을 삭제하고 명예 위주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소송 계류 중인 법인세 부과처분 사건의 지연으로 납세자에게 장기간 불편과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조치 필요 ○ 국세청의 비상장 주식 간이 평가서를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공개하도록 개선 필요 ○ 편법적인 증여 상담으로 전락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수정 또는 폐지할 필요 ○ 일용직 특고등 소득자료 제출 절차와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필요 ○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이 평균 188일로 장기화되고 있는데,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청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무엇인지 질의 ○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이 2021년 대비 89% 감소하였는데, 자영업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질의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질의
인사·조직	○ 국세청 직원을 감사업무 지원이라는 사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파견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감사를 통한 방송장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직

주요감사사항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원을 복귀시킬 필요 ○ 근로장려금 직원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최근 4년간 국세청 공무원의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금품 수수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공직기강을 바로 잡을 필요 ○ 국세청 공무원의 뇌물 수수 비위 근절을 위해 국세청 본청 자체 감사를 실시, 감사결과 공개, 개방형 감사 직위 마련 등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고위공무원단 승진 시 퇴직 후 불로소득 포기 서약 필요 ○ 국세청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한 교육 등 노력 강화 필요 ○ 국세청 내 체납 전담조직 등 비선호부서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인센티브 부여 필요 ○ 청년인턴 경험을 통한 직무경험 축적, 능력 배양 등을 위하여 업무 환경 점검 등 개선책 마련 필요 ○ 현행 세무조사 성과평가는 100% 정성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비율을 적절하게 조합한 평가방식으로 변경할 것 ○ CARF 체계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증원 필요 ○ 이해충돌 방지 대상에 국세청 고위직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소유 법인을 포함할 필요 ○ 국세청 공무원의 범죄율 및 비위 발생률 감소 방안 마련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세무대리 플랫폼 시장의 활성화로 국민의 세무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된 효과가 있으나, 이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업무량 증가 및 홈텍스 서버 과부하 발생 등 문제점이 함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 ○ 콜센터 상담사들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와 민간위탁 사무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상담사 임금 인상 등을 검토할 필요 ○ 해외진출기업들의 우호적인 세정환경 확보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국세청장회의에서 적극적인 협의 필요 ○ 경제부처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방형 감사관 도입 필요 ○ 국세청 고액 소송 패소율 해소 등을 위해 송무 담당 변호사의 처우개선 필요 ○ 근래 국세청 사적이해신고 강화 직무재배정 조치비율이 낮은 수준이고, 국세청장의 이해충돌등의 논란이 있으므로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 ○ 국세청의 고시/남성 편중 인사 해소 필요 ○ ‘사무관 승진임용 내정증서 수여식’은 국세청장 명의로 사무관 임명장을 제작·수여하는 등 현행법과 규정에 어긋나고, 소수를 위한 행사이므로 폐지 등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 국세청 공무원 비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17~’19 간 운영되었던 비위 누적관리제도가 폐지되었는지 질의
기타 세무행정 등	○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과세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홈택스 서버 증설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IP를 차단하는 등 과세행정 수요를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톱스타 연예인의 무보수 홍보대사 위촉은 권력기관의 갑질로 보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금투세 원천징수 방식 변경 등과 관련하여 금융업계가 전산시스템 준비 등에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필요 ○ 승소장려금 인상, 승진 혜택 부여, 연봉상한 폐지 등 조세소송의 승소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필요 ○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과세정보 수집의 경우 사후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감사원 사전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국세기본법을 개정할 필요 ○ 조세특례 관련 집행 시 조세특례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의거하여 집행할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대로 소멸 예정 공적 항공마일 리지를 사회공헌활동에 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의 위 원직 수행 여부가 외부에 공개된 사례가 적발된 바 있으므로, 철저한 점검 관리가 필요 ○ 양평동 주택 관련 주택투자 및 취득에 관한 조사 필요 ○ 문다혜씨 관련 에어비엔비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 ○ 세무조사 운용방향과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 공개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가 소득공제 대상의 중요지침이 되고 있으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의사 또는 병원마다 다르므로, 이에 대한 국세청의 구체적인 지침 마련 필요 ○ 국세공무원이 수집한 현장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했으나, 1.2%의 현장정보만 실제 추징에 활용되고 관련 성과격려금이나 인센티브도 저조한 실정이므로, 활용도 면에서의 개선 및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 검토 필요 ○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상속인이 2년간 기업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받은 경우 상속인이 기업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지에 대해 질문 ○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정조사 등과 관련된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의 강행규정화 및 국회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방안 검토 필요 ○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출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 ○ 민간위탁 R&D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해 납세자연맹, 국세청 OB 활용방안 등을 검토해 보았는지를 질의 ○ 전국 임차청사 27곳에 높은 수준의 임차료를 지출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임차 청사를 줄여나가고 이른 시일내에 청사를 확보 할 수 있는 제도 환경 구축 필요 ○ 양주세무서 설치 필요 ○ 세무플랫폼 관련 허위과장광고 등 관련 문제의 적극적 조사 필요 ○ 전통주로 지정된 포도주나 청주는 온라인판매가 가능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한 반면 국산보리로 만든 수제맥주는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한데, 수제맥주의 온라인 판매허용 여부 및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의
서울지방국세청	○ 역외탈세 대응 강화 필요 ○ 서울 지역 안내가구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는데 장려금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
인천지방국세청	○ 인천지방국세청 직원 1인당 납세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으므로 직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직 확대 검토 필요 ○ 인천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함께 노력할 것 ○ 세정지원등을 통해 인천지역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할 필요
중부지방국세청	○ 수원세무서 재구조화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참관제도’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 ○ 중부지방국세청의 민생탈세 세무조사에 따른 징수율이 다른 청에 비해 저조한 이유는? ○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의 신분을 외부에 알리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교육 필요
대전지방국세청	○ 대전·충청지역의 개인·간이사업자 폐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탄력적인 세금 부과·징수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불복 환급을 줄이고 과세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세 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피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미수령 환급금 축소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철저한 관리 필요 ○ 체납액 및 심판청구 불복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만전을 기할 필요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인력 확충, 홍보 강화 및 세무상담 기록 관리 필요 ○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및 스포츠강사 소득자료 제출 의무화 관련 홍보 강화 및 신고방법 안내 필요 ○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 직원들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실적, 탈세제보 포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실적 제고 필요 ○ 다단계 사기 피해자의 이자소득세 신고 납기 연장 또는 법적 절차 유예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 강구 필요 ○ 대전지방국세청의 (주)타이거월드 관련 과세처분 오류 시정필요
광주지방국세청	○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찾아가는 서비스의 2023년 실적 건수가 전년 대비 83% 감소한 이유에 대한 질의 ○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의 일환인 국선대리인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 및 처리사건이 없는 국선대리인의 연임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광주청에서 5년 이내 근무자 중 8명의 퇴직자 발생 (올해 9월 기준) 사유에 대한 질의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남녀 모두에게 육아휴직 사용 권고 등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산 맥아로 만든 수제맥주 또는 위스키가 지역특산주로 포함되지 않아 주세 경감 및 온라인 판매 등이 불가하므로, 국산맥아로 만든 수제맥주 등을 전통주로 인정할 필요 ○ 2021년부터 최근까지 세수 감소폭이 큰 것은 내수가 많이 위축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세수 감소폭이 큰 이유에 대한 질의 ○ 광주청 소관 세수가 7개 지방청 중 최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실시 비중은 가장 높은 이유에 대한 질의 ○ 고질적으로 낮은 조직성과평가를 보이고 있어 직원 사기문제로 연계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직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통계적으로 고액 체납자들의 징수비율은 낮고, 생계형 체납자들의 징수비율은 높는데, 생계형 체납자에게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징수의 탄력적 집행 검토 필요 ○ 타 지역에 비해 광주전남 지역의 근로장려세제 지급 비율이 높고, 올해 대상자도 확대될 계획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 에너지 공기업으로 인해 광주전남지역의 부가가치세 비중이 매우 치중되어 있으므로, 국세수입 목표 설정 시 한국은행과 공조 필요 ○ 광주청 관할 공익법인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담당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직원은 2명에 불과해 위반사례 검토·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전남지역의 세수 진도율이 전년대비 저조한 이유와 광주·전남지역 산업 관련 세정지원 대책 등에 대한 질의 ○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체납정리 증가율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으므로,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 징수 필요 ○ 탈세제보 처리건수가 저조하므로, 탈세제보의 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은 수도권보다는 납세환경이 취약한 광주, 대구, 부산, 대전 등 지방에 수요가 더 많을 것이므로,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인력 확대 필요 ○ 호남지역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편인데, 법인파산과 회생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파산 및 회생을 신청한 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필요 ○ 악성·고액 체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청년창업에 관한 적극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당부
대구지방국세청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징수유예 및 납부유예 관련 제도의 적극적 홍보 필요 ○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관련 통계 작성 필요 및 엄격한 조사선정 절차 준수 필요 ○ 높아지는 소득 대비 간병비율을 고려하여 간병비를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의료비로 인정하고 이를 세액공제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MZ세대 대상 상담창구 운영 등 소통활동 내역 기타 공공기관과 소통 필요 ○ 학자금 상환 체납액 관련 유연한 상환유예제도 운영 등 체납관리 세정지원 필요 ○ 수요자별 맞춤형 서비스 적극 지원 등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세정 지원 필요 ○ 불법 증여를 위한 베이커리 창업자들의 국세청 컨설팅 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 ○ 국세심사위원회의 불복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국선대리인의 실적 제고 및 실비지원 금액 현실화 필요 ○ 대구수성세무서의 조속한 청사 이전 필요 ○ 납세자의 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일괄조회 활용할 필요 및 관련 자료의 각별한 관리 감독 필요 ○ 대구 지역내 체납액의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수립 필요 ○ 대구지역 국세청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높은 수준이므로 대구청 차원의 외부감사 임명 등 관련 대책 수립 ○ 대구지역내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를 위한 현금영수증 제도 관련 소비자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수립 필요 ○ 대구청의 기숙사가 노후화되고 있으므로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기숙사 시설의 전반적 개선책 마련 필요 ○ 대구첨단의료 복합단지내 입주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관련 적극 지원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적극적 홍보 필요 ○ 대구지방국세청내 낮은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등을 고려하여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대구지방국세청 체납액 정리보류 금액이 증가 및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원 증가에 대한 대응책 수립 필요
부산지방국세청	○ 창원 중부산 세무서에 대한 착공 지연으로 인한 세금 낭비 지양 필요 ○ 부울경 지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중소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필요 ○ 경제적 여력이 없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상환 체납액에 대한 지원 형태의 정책 집행 필요 ○ 비연고 직원들에 대한 임차료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 ○ 문다혜씨의 제주도 내 불법숙박업 운영과 관련 주택 구입자금 출처 및 탈세의혹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은 조사할 필요 ○ 부산 지역의 높은 수준의 상속세 등을 대상으로 한 상속·증여 조사 시 일괄조회 지양 및 전체 재산 내역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자료의 즉각적 파기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호우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납세 유예 및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등 제도 관련 적극적 홍보 필요 ○ 부산지역의 부동산 탈세 건수 관련 적극대응 필요 ○ 부산지역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의 모든 중소기업 대상 실시 확대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 국고계좌 출납 담당자 등의 횡령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상시적 점검 및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 필요 ○ 노인세금교실 및 세금교육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적극적 역할 할 필요 ○ 통영지역의 세무행정 수요를 고려하여 조사과를 신설할 필요 ○ 세금 불복시의 국선대리인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필요 ○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 필요 ○ 서민 상대 폭리 수취자 등 민생침해탈세자 근절 관련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력 등 대응책 마련 필요 ○ 지방국세청 중 부산국세청이 국세 과오납 환급금이 높은 수준이며 그 중 불복환급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과세행정의 품질 제고 필요 및 부산청의 미수령 환급금을 국민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3. 관세청(광주·대구·부산본부세관 포함)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마약 및 위험물 밀반입 관련	○ 관세청 직원의 마약 밀반입 연루 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유사 사건 발생 시 내부감사를 강화하는 등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지킬 필요 ○ 관세청 직원의 마약 밀반입 연루 사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의 빈번한 휴대폰 교체 경과 및 사유, 경찰의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 삭제 경과 등에 대해 질의 ○ 관세청 직원의 마약 밀반입 연루 사건과 관련하여, 직원의 마약범죄 가담여부에 따라 엄벌에 처하거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 대마성분이 들어간 과자, 젤리 등 식품들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으며 가공형태의 대마 제품 암시장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식약처 등과 협의하여 제품을 리스트업하고 국민에게 유의하도록 철저하게 안내할 필요 ○ 특송화물을 통한 사회안전 유해물품 반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장검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검사를 강화하고, AI 기반 우범 선별 모델을 개발할 필요 ○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각 플랫폼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세청이 차단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통되고 있으므로, 통관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 최근 19세 이하의 마약사범들이 늘어나고 있고, 물뽕(GHB) 등 마약에 대한 2023년 단속건수는 2021년 대비 350건 감소하였으므로 마약 밀반입 단속을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강화할 필요 ○ 마약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탐지견을 늘리는 방안과 국내 유입 마약의 주요 출발국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합동으로 마약 레드팀(감독관)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 ○ 2023년 통관건수는 2019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해외직구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세관 인력 증가율은 2배 미만으로 통관 인력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인력 증원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 ○ 2023년 기준 검찰이 국내 유통과정에서 압수한 마약 1,162kg 중 해외 밀반입 확인 압수량이 697kg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점 지적 ○ 국제우편,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관인력 및 예산은 여행자 반입 마약 단속에 치중되어 있는 문제점 지적 ○ 특송화물 전담인력이 증원된 평택항 마약단속 실적은 저조하고, 증원이 없었던 부산항은 마약단속이 늘어난 점과 관련하여 인력배치의 문제점 지적 ○ 전국 공항 및 항만에 우범여행자 감시 등 목적으로 CCTV가 운영되고 있는데 파일 저장일수가 60일에 불과하고, 1인당 담당 CCTV가 최대 158대에 달하여 CCTV 전담인력이 부족한 문제점 지적 ○ 2024년 9월 기준 관세청이 소관 부처로부터 제공받은 위해 직구제품 정보 건수가 96건에 그치는 문제점 지적 ○ 해외직구 문제를 관장할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각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관계부처 전문가의 협업 검사 인력을 확대하며, 소관법령별 해외직구 위해물품의 반입차단 대상 지정 및 관세청의 차단절차 법제화를 검토할 필요 ○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필요인력 충원이 22%에 불과하므로, 인력충원에 대한 대책 후 의원실에 보고 ○ 관세청 내부의 마약류 관리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청주국제공항 마약탐지견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인력충원 방안 마련 등 대책수립 필요 ○ 관세청은 해외 불법마약류 판매사이트 차단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차단하고, 차단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 ○ 관세청의 통관관련 수사 행위에 대해 개입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 관련 관세청장의 인식 개선 및 관련 직원교육 강화
통관·감시장비 운용 관련	○ CIQ 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조기 구축 및 재해복구 서버 장비 증설의 추진이 미흡하므로 전산망 마비 시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신속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밀수 적발을 위한 부산세관과 인천세관의 드론 운영이 곧 종료될 예정인데, 마약 및 위험물 밀반입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므로 감시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 ○ 드론 국산화를 위해서 정부지원 R&D를 투입하거나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항만 감시를 위해 드론 운영을 지속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해외직구의 폭증으로 특송화물도 증가추세이나 개장 검사율은 낮은 수준이므로, AI 기반 특송화물 검사를 신속 도입하여 적발율을 향상할 필요 ○ 밀수위험 컨테이너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e-SEAL’이 노후화 되고 있으므로 신규장비 신속히 도입할 필요 ○ 대통령 순방시 세관 검사 강화 필요 ○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지정장치 독점 관련 신규 비영리법인의 진입을 위해 관련 조건을 완화할 계획, 특정 업체에 대한 지정장치장 보관 혜택을 개선할 필요성 및 지정장치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여부 등에 대한 질의
상품·유형별 관세탈루 관련	○ 해외직구 시 실제 가격보다 낮추어 과세가격을 조작하는 언더밸류 수법을 활용한 관세탈루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 서울공항 이용자가 반출신고가 되지 않은 고가의 신변장식용품을 착용한 채 입국한 경우, 세관에서 밀수 여부를 검사한 뒤 반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물품에 대해 적정한 과세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고가 휴대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 ○ 대통령 해외순방 시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미화 600달러 이상 결제할 경우 결제내역을 관세청으로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관세법」의 규정을 대통령과 일반국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대통령 수행원의 휴대물품 반출신고 및 세관신고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불법해외직구에 명의 대여행위죄 적용 필요 ○ 수출입 가격 조작 증가에 대응하여 이와 관련된 제재 강화 필요 ○ 니코틴 성분을 속여 탈세한 불법업자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
원산지 표시관리 관련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수요는 급증하나 담당인력 수는 10년 가까이 변함이 없으므로, 적기에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 필요
기타 통관행정 관련	○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세법상 보호대상 지식재산권의 범위에 산업기술, 방산기술, 영업비밀이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수출입 관리를 강화할 필요 ○ 북한산 물품이 국내 온라인 유통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데,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이행을 위해 북한산 물품의 불법 반입 단속을 강화할 필요 ○ 전국 지정장치장 57개 중 화물관리인이 지정된 28개의 지정장치장 모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단체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정장치장 화물관리 업무를 경쟁체제로 바꾸고 외부공시를 강화할 것 ○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의 CIQ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인력을 충원할 필요 ○ 중국발 특송물량이 2019년 4,300만 건에서 2023년 1억 3,100만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세관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인력이 충분하게 늘어나지 않아 세관 직원의 검사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세관 인력을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외국 기업에 책임 의무를 부과하여 수요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거나 자격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2024년에 이커머스 중개 플랫폼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가 전년대비 44.6% 증가하였으므로 본인인증서비스의 활용 또는 일회용 통관부호 도입을 검토하고 개인통관번호 유출 차단과 관련한 전반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최근 가짜 임신테스트기 수입 차단에 대해 관세청과 식약처 간 협력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관계 기관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을 취업제한심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 ○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 문제가 만연한 상태이므로 IT 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본인인증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 ○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조품 등이 판매되는 다수의 사례가 있으므로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통관 절차에서 판매업자를 블랙리스트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 사업의 진행경과에 대해 질의 ○ 오픈마켓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시계 및 가방 등 짝퉁 명품의 유통에 대해 대표적인 사례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관세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 ○ 특송물류센터의 화물관리인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화물관리비용 감면을 통해 소수의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할당관세 확대 적용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등의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할당관세의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필요 ○ 포괄가격신고 신청건수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건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물품’이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에 원인이 있으므로 ‘같은 물품’이라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신고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 ○ 식용건 금지로 인한 잔여건중 일부를 탐지건 등 특수목적건으로 활용하는 계획에 대한 현실성 검토 필요 ○ 관세청이 압수한 농산물의 부패·변질 방지를 위해 7일 이내에 식물검역 및 식품검사 등을 의뢰한 비율이 저조하므로, 압수 농산물의 신속한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보관·관리를 개선할 것 ○ 북한 노동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제품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제품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등을 할 것 ○ 반도체 등 특수화물의 한-일 복합운송이 한-중 복합운송보다 서류절차 등 더 복잡하므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간소화시킬 필요 ○ 해외직구 물품 중 유해물질이 다수 포함된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고 있으므로, 직구물품 포장에 물품정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보를 기재해 통관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관련 기준과 근거 마련 필요
세수 체납 관련	○ 지방세 체납자의 여행자 휴대품 검사율이 낮은 수준이고,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압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므로 체납자 검사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필요 ○ 관세조사 거부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장기간 부과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국세청 등의 제도개선 시기에 맞추어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나 기타 대책을 수립할 필요 ○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하면서 관세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급증하고 있으나, 과태료 수납률이 9%에 불과하므로, 수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면세점 운영 및 면세한도 관련	○ 중국발 해외 직구 소비 급증으로, 국내 중소기업 등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국무조정실,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에 참여하여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관련 정책조정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필요 ○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의 이용률이 높고 이용자 편의가 높은 수준이므로 최근의 어려운 내수 확대를 위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전국 공항 및 항만으로 확대할 필요 ○ 면세점 노동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므로 관세청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면세점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 ○ 선부른 입국장 인도장 공항 확대로 관세행정 부담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이 커질 수 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반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국장 인도장 공항 확대를 지양할 필요
가상자산 및 외환거래 관련	○ 불법 외환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환전영업자에 대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 ○ 등록환전소에 대한 감사율이 2023년 기준 10.6%에 불과하며 감사업체 중 최근 3년간 외국환거래법 위반율이 60.4%에 달하는 등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고, 미등록환전소의 대해서는 신고 없이 환전 업무를 하는 것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환전소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가상자산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국내 무역업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관세청에서 단속한 가상자산 관련 무역범죄는 건수가 낮은 수준이므로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의 국외 이전 거래 내역 등 과세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할 필요 ○ 카지노거래의 고위험 특성을 반영해 검사 및 조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단속의 밀행성과 보안을 훼손하는 관세청 고시를 개선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 추진계획을 의원실에 보고할 필요
관세청 자체 내부운영 관련	○ 관세평가분류원 직원의 공무원 특공 악용에 대해 적절한 징계 및 환수 조치 필요 ○ 관세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중 성희롱 등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교수들이 있는데, 해촉 규정 미비로 해촉이 안 되고 있으므로 추후 운영상 미비점이 없도록 보완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2023년 7월에 국가인권위에서 관세청에 권고결정을 했는데, 관세청에서 마련한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조사직무 관련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 ○ 매년 성비위 징계자가 나오고 있는데, 직원들이 사건 발생 시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폭넓은 신고 시스템을 만들고, 성비위 관련 예방교육 이수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교육을 강화할 필요 ○ 관세청에서 지난 10년간 한국면세점협회로 총 88명이 재취업 했는데, 한국 면세점 3사의 매출은 2020년 119.8억 달러에서 2023년 99.1억 달러로 20.7억 달러 감소한 문제점 지적 ○ 관세청으로부터 AEO 심사업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중인 한국AEO진흥협회에 관세청 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해 있는 상태인데, 관세청이 AEO 제도 관련 계약을 한국AEO진흥협회에 몰아주는 문제점 지적 ○ 관세청은 조달청 및 통계청에 비해 재취업 승인 심사가 유독 많으며 승인율이 100%에 달하고 있으므로 유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관세청 직원의 마약밀반입 연루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감찰을 실시하거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필요 ○ 관세청 출신 공무원이 재직중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주)케이씨넷, 한국AEO진흥협회와의 수의계약이 과다하므로, 기획재정부 차원의 종합감사 등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타 기관에 비해 관세청의 일감몰아주기, 긴급공고와 수의계약 규모가 과다하므로, 긴급공고 또는 수의계약 규모 등을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필요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검토중인지 설명요청 ○ AEO 인증제도를 악용한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등 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 ○ 최근 5년간 직무태만, 품위손상,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07명에 달하고 있으므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재점검 필요 ○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 관련 관세청장의 휴대폰 제출 및 통신기록 제공 필요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의 높은 관세청 퇴직자 취업비율 및 일감 몰아주기 실태의 시정 필요 ○ 관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급증에 대해 예방활동과 대응체계 강화 필요
대구·부산본부세관	○ 한일간에 특수화물 복합운송 절차 관련 간소화를 위한 고시 개정 필요 ○ 부산항을 통한 불법 마약 유통을 드론등을 통해 적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부산 지역의 중국산 검색기의 잦은 고장 관련 원인 파악 및 적극적 대책 수립 필요 ○ 상승하는 부산항의 물동량을 고려하여 진해 용동 등 효율성을 바탕으로 통합검사장의 신설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부울경지역에 집중적으로 마약류가 검출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 수립 및 용당세관 내 엑스레이 검색기 증설 등 인력 장비 확충 필요 ○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통제 강화 및 산업부와의 공조 체제 적극적 활용 필요 ○ 해상화물을 통한 불법마약 차단을 위해 인력 충원 필요 ○ 부산 지역내 수출경쟁력확보를 위해 기업들의 수출 관련 애로사항 해결 지원 필요 ○ 부산 지역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향상을 위해 추적 전담팀 운영, 감치뿐만 아니라, 정확한 세금 고지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와 무역 시 통관에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본부와 협업할 필요 ○ 외화밀반출입과 관련하여 관련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보안·단속요원들과 협의하여 사전 차단에도 노력할 필요 ○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한 물품 반입 증가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적극적 대응 마련 필요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인해 기업들이 생산 과정 중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구본부세관 관할 기업들에 대해 CBAM 대응을 위한 EU 수출입 관련 상담·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대구세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을 위해 수출팩토링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필요 ○ 대구지역내 마약 적발량이 폭증하고 있으므로, 전담부서의 신설할 필요 ○ 대구세관내 장비들이 노후화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교체할 필요 ○ 대구세관 내 AI 기반 우범선별 시스템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할 필요 ○ 대구세관 내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 대구공항을 통한 마약 적발현황 등이 증가 하고 있으므로 검사 장비 노후화의 개선 필요 ○ 세관을 사칭한 로맨스 스캠에 대해 국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대구 경북지역의 중소 영세기업들의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수출물류비 지원 관련 사업 강화 등 적극적 지원 필요 ○ 군산세관 특송통관장의 2월 대비 8월의 반입건수가 551.8% 증가하여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통관을 위한 전담인력이 2명 증원된 것에 그쳤으며 2025년도 예산안에 X-Ray 검색기 설치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인력을 7명 증원하고 X-Ray 3대를 증설할 필요
광주본부세관	○ 경기침체로 인한 호남권의 무역부진이 코로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의 ○ 전자상거래 물량이 확대되고 있어 통관지연이 예상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되므로 군산세관에 검색기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 ○ 화물반입 시 1차 엑스레이 검사 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분석실로 보내는데 광주 관할 내 분석실이 없어 타 지역으로 보내 분석을 요청해야 하는 바, 인력 재배치 또는 증원 등을 통해 서남해권에도 분석실을 둘 필요 ○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농수산식품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아마존 전남브랜드관 입점 등의 시도가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질 필요성에 대한 당부 ○ JDC의 이용자 및 매출액 모두 감소하고 있으므로, 제주 발전을 위해 JDC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해외직구 의약품 중 마약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반입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해외직구 물품 중 유해물질이 다수 포함된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고 있으므로 직구물품 포장의 물품 정보를 통관시 확인하는 등 위해물품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할 필요 ○ 세액탈루 위험이 낮은 일반기업까지 관세조사를 강화할 경우 기업 부담이 증가하므로, 사전정보 분석력 제고 등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4. 조달청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조달물품 품질 관리	○ 조달청이 제품 품질 관리를 함에 있어 위험방지 기능을 높이고 적극행정을 통해 안전을 관리할 필요 ○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 점검 강화를 위해 점검의 주기를 단축할 필요 ○ 지자체에서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사용하는 지하차도·터널 차단봉 형태의 차단시설은 안전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조달청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 ○ 조달청이 수요자가 원하는 그대로 조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요건 등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우수조달물품 등 공공조달물품에 대한 품질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공조달물품 사후 품질 관리 체계의 구축 필요 ○ 수입해 오는 공공조달물품들 중 가짜 물품들이 세관을 통과하고 들어와 조달물품으로 탈바꿈을 해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조달청과 관세청 간 협조를 통해 이를 단속할 필요 ○ 계약 단계부터 원산지를 파악하여 원산지 불명이 없도록 관리 필요
혁신조달	○ 수요기관이 직접 사용 후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혁신제품 시범 사용 및 설치 지원 확대 필요 ○ 벤처나라 제품 지정 만료 이후에도 제한 없이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자력 성장을 저해하고, 신생기업에 대한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규정 보완 및 관리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지방조달청은 혁신조달을 활용하여 지역 기업을 육성하고, 그 결과를 본청에 신속히 보고하는 체계 마련 필요
조달청 입찰 과정 공정성 강화	○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전체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뇌물 등 다른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대책 마련 필요 ○ 특정 업체의 독점, 반복 입찰을 방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제 구축 필요 ○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관리를 조달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 ○ 입찰 담합에 대한 공공기관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통보하고 대응할 필요 ○ 조달시스템 문란을 조장하는 담합 사건에 대해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활성화하고 공공입찰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조달청 입찰 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비리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 이후에도 유착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및 대응 계획 마련 필요 ○ 대통령실 이전을 담당한 특정 업체의 입찰과 관련하여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필요 ○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약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예산 낭비 사례가 밝혀졌고, 모든 비목 대상 사후원가 검토조건부계약 체결 등 국가계약법 위반 사례가 있으므로 조달청의 절차에 대한 문제점 확인 및 개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불법 업체들에 대해 신속하게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필요
부정당업자 등 제재	○ 부정당업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원 판결 전까지 철근 누락 업체에 대한 벌점 제도를 회피하고 있는데, 행정소송 등을 통한 부정당업체의 편법 수주 방지 대책 강구 필요 ○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실효성 있게 올리고 부정당 제재가 인용될 경우 집행정지기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과징금을 부여하고 위장법인 설립을 통해 영업을 지속할 경우 제재효과를 증대시키는 등의 제도 개선 필요 ○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향 필요 ○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부당이득환수 제도를 개선하여 환수율을 높일 필요 ○ 부실시공 의혹 업체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혁신시제품 선정을 취소하거나 연장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내부 규정 보완 필요 ○ 서류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업체에 대한 부정당제재, 우수제품 신청제한 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거나 해당 기업을 퇴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서류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업체의 우수제품 지정을 막기 위한 우수제품 지정 과정에서의 검증 절차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필요 ○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사 거부·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조달 관련 제도개선	○ 중소기업 성능인증제도 관련 조달청이 민원발생 이유로 기술인증 가점을 주지 않는 문제점 지적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비목의 비중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사원에 통보하고 정산 결과를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국가계약법상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제도와 납품대금 연동제가 조화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간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 ○ 조정 요건과 증빙이 까다롭고 금액 조정이 장기간 소요되는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도 민간계약 수준의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할 필요 ○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하여 물품 제조 쪽 단품 에스컬레이션을 공공 공사나 공공 부문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의 전반적 검토 필요 ○ 태양광 발전장치의 핵심 장치도 아닌 지지대를 생산하지 않는 이유로 직접생산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있어 중기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 필요 ○ 특정 국가보안시설의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정상적인 공사들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우수제품에 지정된 경우에는 혁신제품의 신규 신청이 및 연장 신청을 불허하는 사례가 있는데, 유예기간을 두는 등 기업들의 기대이익 보장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구매가격 사전공개제도가 잘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관련 규정개정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사업비 책정부터 공사발주까지의 기간차로 인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방안 중 지난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평균이 15.5%인데 반해 조달청이 책정한 기준은 20%로 공사비 재검토 기준이 높으므로 대응방안의 실효성 제고 필요 ○ 협상계약 기술능력 평가항목에서의 최고 및 최저 점수 관련 기준 도입 검토 필요 ○ 공공조달 시장의 탈탄소화를 위해 최소녹색기준 강화 및 입찰 시 환경성적표지인증(EPD) 제출 의무화 등 방안 검토 필요 ○ 탄소중립을 향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녹색제품 구매목표제 도입 필요
조달청 조직 및 운영	○ 수요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조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위법적 계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나라장터를 통한 수요기관 자체계약 건에 대하여 위법한 사항에 대해 조달청이 관리하고 수요기관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조달청 공무원 채용에서 특정협회와의 유착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 업무 과중으로 인해 공공주택 계약의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발주 일정을 조율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과 애로사항 발굴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하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고 문제를 개선할 필요 ○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유입을 위한 조건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위기 조성 필요 ○ 공공조달시장에서 지역 기업들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달 지원 필요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등	○ G-PASS 지정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조달청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조달청이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집중할 필요 ○ 조달청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성과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 ○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 전략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위한 법률·하위규정 등 우선 정비 필요 ○ 수출전략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후관리체계 마련 필요

5. 통계청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통계의 기준과 원칙 준수	○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통계청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작성할 필요 ○ 통계청과 타 기관 간 거시경제 지표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지표가 정합성을 가지도록 개선할 필요 ○ 통계청에서 주요 민간통계 작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개선책 검토 필요 ○ 게임이용장애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통계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 ○ 국토부 주택건설실적통계 오류 발생과 관련하여 통계품질 관리를 위한 개선과제 이행점검 체계의 실효성 및 통계청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방안에 대한 지적
통계 품질 개선 및 작성·활용 개선	○ 신규 제품 서비스를 물가품목에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통계지표의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 필요 ○ GRDP 작성시기를 앞당겨 해당 지표가 예산안 및 정책에 시의성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가계동향조사시 적절한 샘플링을 통해 지자체의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지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자가주거비를 주지표로 포함시켜 주거 비용이 과소반영되는 현실을 개선해 정확한 물가지수를 파악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물가지수 품목 개편 주기를 단축시켜 새로운 형태의 소비나 서비스를 물가지수에 적절하게 포함시킬 필요 ○ 통계청 외의 다른 기관에서 생산되는 통계자료의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 ○ 통계청의 출산을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추계 모델을 변경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필요 ○ 복지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인연령 기준의 단계적 상향을 통계청에서 주도할 필요 ○ 미분양주택현황보고 통계와 관련하여 건설사가 보고한 미분양 주택 현황을 토대로 작성하고 있어 객관성·신뢰성이 떨어질 우려 지적 ○ 연금통계에서 제외된 60~64세에 대한 조사를 추가 사업으로 진행할 필요 ○ 사회적 고립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종합적·지속적·정례적인 조사 필요 ○ 노인빈곤 통계 관련하여 소득 뿐만이 아닌 자산을 반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가상자산 과세시행을 앞두고 청년들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방식 개선 필요 ○ 통계작성의 변경 사전승인제도와 관련하여 사전승인 신청기한 미준수 등 승인절차 준수율이 저조하므로 제도 개선 필요 ○ 통계품질개선을 위해 주요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통계품질진단을 철저히 하는 등 통계청의 관리 감독 강화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특정 부처의 통계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통계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 ○ 국가통계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통계작성기관이 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를 이행하도록 통계청의 이행 점검 감독을 강화할 필요 ○ 농가경제조사의 표본교체 시 주요 지표의 연속성 단절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1인 농가를 포함한 통계를 작성할 필요 ○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CTEPH)이 국제질병분류에 질병코드가 신설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국가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국표준질병분류에 반영할 필요 ○ 통계분류 개발에 지나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등 관리 필요 ○ 포괄적 연금통계 등 발표시차가 18개월 이상인 통계의 발표 시차를 축소하여 통계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 ○ 5년주기의 생활시간조사 및 가계생산 위성계정의 통계 작성 주기를 단축하여 통계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 ○ 통계청 블로그의 IMD 국가경쟁력 순위 그래프 왜곡 및 e-나라지표의 그래프 오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통계 오류 등 통계청의 국가통계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 실시 내용
지역 통계 개선	○ 동남지방통계청은 부산, 울산, 경남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통계조사를 작성할 필요 ○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심층적인 통계를 작성할 필요 ○ 호남지방통계청은 지역소멸 및 인구절벽 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통계 확충 필요 ○ 동북지방통계청의 대구·경북 아동 인구·가구 특성 분석이 지역현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연계도 부족하다는 지적 ○ 동북지방통계청의 지역특화통계가 부족하므로 지자체가 생산하는 지역특화통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는 통계작성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호남지방 쌀 예상생산량 조사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표본 대표성 확대, 응답률제고 등 조사방식 개선 방안에 대한 지적
통계의 개발 및 신설	○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는 등 통계청의 역할 강화 필요 ○ 가구별 가계부채 DB를 조속히 구축하여 분기별 공표를 하거나 한국은행 가계부채 DB를 국가통계로 승인하는 등 가계부채 통계 관련 개선 필요 ○ 경제지표 외에 국민행복을 반영할 수 있는 국민삶의질지수 또는 국민행복지수 등을 개발하고, 해당 지수의 분야별 비중 결정 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자산 및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한 결혼율·출산율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의 개발과 주요 지표 확보 필요 ○ 기후위기가 경제 및 소득불평등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후위기에 대한 통계 생산 필요 ○ 노인빈곤율에 자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금화 방식 등 자산 소득화 방안 검토 필요 ○ 인구집단 및 지역별 세분화된 지표체계 구축 등 신규 지표 개발을 통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하는 통계작성 필요 ○ 사회연대경제 현황 분석과 정책 발굴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기본통계 개발 필요 ○ 중국발 해외직구가 국내 산업에 미친 영향과 피해 등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통계 마련 필요
조사방법 및 환경 개선	○ 통계조사원들의 위험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통계조사 인력들의 불리한 처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 필요 ○ 가계동향조사의 불응률을 낮추기 위해 통장을 명예 통계조사원으로 위촉하는 등 방문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AI를 활용한 조사기법을 개발할 필요 ○ 출산휴가·육아휴직 통계 관련해서 보다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가상자산의 성격상 면접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방식을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 실시 내용
	수립·실행할 필요 ○ 통계조사원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야간 및 위험지역 조사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
통계청 조직·운영 및 기타	○ 용역계약시 통계청 출신 고위공무원이 재취업한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전관예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동북지방통계청의 책임운영기관 해제 이후 지역통계에 소홀하지 않도록 한국은행 대구본부 등과 함께 지역통계데이터를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 ○ 통계청의 신뢰회복을 위해 통계청의 계약방식 및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할 필요 ○ 통계정보화사업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통계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통계정보원의 사업 수탁이 어려워져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경영환경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을 혼동해서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 통계청에서 사후관리를 할 필요 ○ 인구주택총조사 등의 낮은 조사응답률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외국인 사망자 관련 사망원인별, 체류자격별, 국적별 통계화할 필요 ○ 국가통계위원회의 기본계획 상 목표가 지나치게 무미건조하다는 지적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표들이 지향하는 바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이를 시정할 필요 ○ 장애인 이동권,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통계를 마련할 필요 ○ IMD 국가경쟁력지수 인용 시 발생한 오류의 재발을 방지하고, 해당 지수를 인용하는 부분에 있어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6. 한국은행

주요감사사항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기준금리 운용 등 통화정책과 물가 관리	○ 금리인하로 가계부채가 늘면 이자 비용 증가로 소비가 위축될 수 있어 기획재정부와 정책 공조가 필요 ○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하고 내수 회복을 위해 국가의 재정 투입이 필요 ○ 수출과 내수 간의 통로가 끊어지고 내수 자체의 취약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기에 금리 인하와 재정정책의 병행이 필요 ○ 통화정책이 내수진작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님을 국민들에게 인지시키는 역할을 할 필요 ○ 금리인하 정책이 현 정부의 높은 국채발행액 및 순발행액과 맞물려 정책 효과가 상쇄될 우려 지적 ○ 확실한 통화정책을 통해 내수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에 한국은행이 대응할 필요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저금리가 필요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은 규제를 위해 고금리가 필요한 상황 속 균형을 맞추기 위해 횡재세 도입 검토 필요 ○ 선제적이지 않은 후행적 금리 인하로 인해 시장에 자극효과가 없었다는 지적 ○ 정부와 한국은행의 뒤뜰린 정책 조합으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무력화되었다는 지적 ○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위주의 시장이기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 ○ 내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금리 인하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세수결손으로 정부의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어 정책적 여지가 없기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의 압박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 ○ 건전재정 정책으로 취약계층과 취약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기에 한국은행이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 ○ 높은 물가수준의 지속이 한국은행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신뢰 제고를 위한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 도입 검토 필요 ○ 금리 인하 여부를 내수 상황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 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되고 발행량 및 현금화 가능성이 증가하면 통화신용의 내생적 팽창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화당국은 상품권 유통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필요 ○ 고금리 시 가계부채 문제가 커진다는 점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 마련 필요 ○ 통화정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없기에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정책이 병행되고 뒷받침될 필요 ○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상황 속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타격을 정하고 핀셋으로 정책대응을 할 필요 ○ 대외적으로 금리 인하 압력과 인상 압력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기에 한국은행 총재가 원칙을 갖고 대응할 필요 ○ 내수 회복을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나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너무 늦게 했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 실시 내용
	다는 지적 ○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과 조치 필요 ○ 환율이 통화정책의 새로운 고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환율 변동 속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 ○ 물가안정목표제의 실효성이 낮아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 ○ 정책목표에 물가와 성장 이외에 신용변수를 추가하는 통합적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물가안정목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여 다양한 거시경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할 필요 ○ 건설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금리인하는 가계부채 증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대안적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 ○ 내수, 소비 등 경제 체질이 좋지 않아 재정정책과 금리인하의 믹스를 통한 정책 전환 검토 필요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국 대선 등으로 인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 ○ 수출과 내수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경제지표와 무관하게 실물경기 부진이 이어진다는 지적 ○ 정부의 경제전망이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기에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한국은행의 검토 필요 ○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청년실업을 받아줄 수 없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경제구조에 위험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역할을 할 필요 ○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비해 실제 성장률이 낮기에 조정이 필요 ○ 3분기 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보다 낮기 때문에 성장률 제고를 위한 주안점과 관건 마련 필요 ○ 해마다 경제전망 오차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오차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경제전망 모델을 개선·보완할 필요 ○ 수출 악화가 구조적인 리스크의 문제인지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시장에 시그널을 줄 필요 ○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오차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 전문가를 배치 및 육성하고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필요 ○ 낙관적 경제전망은 신뢰성을 떨어뜨려 경제정책의 효과를 줄일 우려가 있고 적절한 정책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 ○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는 시나리오 분석이 너무 많이 제시되어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면이 있다는 지적 ○ 한국은행 전망이 국가정책과 통화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민간의 경제활동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원화의 국제적 위상 향상을 위해 한국은행의 노력 필요 ○ 경제전망과 관련한 통계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표시차가 큰 일부 통계의 공표시차를 단축하는 방

주요감사사항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안 검토 필요 ○ 한국은행의 기업심리지수 CBSI가 산업연구원이나 상공회의소의 조사와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경제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
외환정책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격차를 2%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 금 매입 검토 등 새로운 시각에서 외환보유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연구할 필요 ○ 탈달러화 트렌드가 지속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은행의 외환 자산 전략에 대한 변화 검토 필요 ○ 실제 환율과 균형환율 간의 차이에 대한 지적 ○ 미국 금리 인하, 일본의 저환율 및 중국의 어려움 등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 속 한국은행이 이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 필요 ○ 정부는 세수 결손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율 변동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의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질의 ○ 국가안보·국민경제를 고려하여 외환보유액 운용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사업 해외경쟁사에 대한 투자를 지양할 필요 ○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글로벌 금융사이클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 자금 흐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 외환 다변화와 금 비중을 높여 외환 보유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안 검토 필요
한국은행의	○ 경제전망보고서의 개편으로 한국은행이 싱크탱크로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 실시 내용
독립성	서의 기능이나 논쟁적인 쟁점을 던지는 역할은 수행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경제전망 분석이나 보고역량은 줄어들고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 ○ 한국은행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보호받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국가의 중장기 전략과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 ○ KDI의 경우 정권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된 싱크탱크로서의 한국은행의 역할 필요 ○ 정부는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정책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기에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한국은행이 고용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 ○ 중앙은행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정부와 독립된 역할 수행할 필요 ○ 정부가 금통위가 의결한 부대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활용을 늘리고 있는데 이는 금통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동 필요 ○ 한국은행법 제3조에 따른 중립성을 준수하여 더욱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모색 필요 ○ 법인세 부과 및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한국은행이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사전승인범위를 모든 급여성 경비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여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줄이는 방안 검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가계·국가 부채	○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200%에 달하여 추가적인 신용 증가가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부양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 ○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나 총량 관리에서 금융당국이 실패했기에 한국은행이 질적 또는 양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추구할 필요 ○ GDP 대비 가계대출비율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무리하게 축소하면 자영업자들에게 어려움이 전가된다는 점에서 세심한 배려 필요 ○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대출받는 연령이 고령화된다는 점에서 대응 방안 검토 필요 ○ 우리나라만 GDP 대비 국가총부채 비율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가 부채에 기반한 손쉬운 성장을 추구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 ○ 한국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전체 국가총부채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 ○ 코로나 부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정도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 검토 필요 ○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 ○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늘어남에 따라 금리 인하가 어려워 이를 고려한 정책 필요 ○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 필요 ○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한국은

주요감사사항	주요 감사 실시 내용
	행이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부동산 및 금융정책 관련	○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25년 2월경에 이루어지면 이 사철과 맞물려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 ○ 급작스러운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 등 정책적인 혼선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이 중심을 잡 을 필요 ○ 부동산 PF 정리 자체가 지연된 것이 통화정책에 악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 ○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졌기에 잘못된 판단이라는 지적 ○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시장의 온도 차이가 있기에 시장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고소득층이 실거 주 목적이 아닌 금융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하 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 ○ 고소득층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금융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 ○ 가계 초과저축이 주택시장에 접근하는 기회가 되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 ○ 저금리 대출이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는 점에서 빠르 게 정책을 청산할 필요 ○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정책 운영을 검토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부동산을 유동화시키는 증권 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방안 고려 필요 ○ 한국은행 총재로서 부동산 쏠림 및 상승 우려에 대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제시할 필요 ○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시장이 양극화되어있기에 통일된 정책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는 이원화된 정책을 실시할 필요 ○ 한국은행이 빅컷을 통해서 자영업자, 내수경기를 도와주고 부동산 상승의 압박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급 대책을 하는 정책 조합 검토 필요 ○ 주택 매수 심리 자극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대응책 마련 필요 ○ PF 관련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 마련 필요 ○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스톱스텝이 이루어진 것은 부동산 가계부채로 인한 것이기에 적극적인 부동산 공급을 통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	○ 금융중개지원대출이 10년째 한도가 그대로라는 점에서 한도를 늘리는 등 현실화 방안 검토 필요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경우 핀셋 정책을 하고 타겟팅을 하는데 유용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일부 시중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이용하여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므로 제도개선 필요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중개대출의 한도를 늘릴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 감사 실시 내용
	○ 티메프 사태 대응은 재정의 영역에서 할 일이고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접근을 자제할 필요 ○ 경제 규모의 확대와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 경감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방 중소기업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기조적으로 확대할 필요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위규대출에 대해 일벌백계를 하여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 ○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 새로운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한국은행 본점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금융중개지원대출심사 결과를 이중으로 점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감사실이 사후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위규대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필요 ○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가 점차 증가한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를 늘리고 지역의 소기업부터 대출 규모를 늘려주는 방안 검토 필요 ○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의 대책 마련 필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책 등 양극화 해소 관련	○ 정부와 기업이 취약계층의 고통을 분담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 ○ 중소기업 건설 분야에 제2금융권의 대출이 많다는 점에서 제2금융권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관련 부실채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권 상황 등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 ○ 가계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대출 접근성이 높은 고소득층의 자산은 저소득층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한다는 점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확장시킬 필요 ○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규모를 저리·장기로 빌려주는 등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은행들이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장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 ○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서 지역상품권 정책의 도입 필요 ○ 중소기업 대출 비율 제재 제도에 관해서 실효성이 떨어지기에 대책 마련이 필요 ○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시 제재 방식이 실효성이 떨어져 EU에서 시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팩터제도를 활용할 필요 ○ 지방 중소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너무 과다한 수준이기에 한국은행에서 실질적으로 금리 지원이 잘 되도록 검토 필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 CBDC의 경우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 장벽을 넘기 어렵다는 지적 ○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거래 내역 조회 부분 등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에서 신뢰도나 안정성,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화폐에 대한 신속한 연구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CBDC 구축과 실현가능성 및 상용화 단계에서 소외 계층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 필요 ○ 스테이블 코인이 법적 기반을 갖추고 외환거래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되면 CBDC 개발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 국민들이 CBDC의 도입으로 인해 감시사회의 고도화가 야기된다는 불안감을 갖기에 자유주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CBDC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방안 마련 필요 ○ CBDC 실거래 테스트 일정을 신속성보다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조정할 필요 ○ 한국은행이 진행 중인 CBDC 테스트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 바우처와 지역화폐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지역균형발전	○ 지역격차 등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거점국립대에 대한 혁신적 상향 평준화 방안 도입 검토 필요 ○ 전국에 기업의 본사가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지역본사제를 추진하거나 복수본사 체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 ○ 현재와 같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 방지를 위해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게 할 필요 ○ 교육환경이 부동산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검토할 필요 ○ 수도권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정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부 이전, 국회세종지사당 이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및 권력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할 필요 ○ 금리 인하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때 지방의 문제를 반드시 점검할 필요 ○ 한국은행이 제안한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은 지방 소도시를 포기하는 관점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검토 필요 ○ 지역거점국립대학의 1인당 교육비를 혁신적으로 상향하여 평준화하는 정책 마련 필요 ○ 미래산업 수요에 맞춰 지역거점국립대학 학과의 정원 개편을 검토할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논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책연구를 진행할 필요 ○ 지역별 비례선발제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 부채 증대와 연계되기에 정책의 추진 검토 필요 ○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거점도시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총생산이나 고용에 효과가 있어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고려 필요 ○ 지방의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하기에 구조 개혁과 관련된 사회적 대타협을 마련할 필요 ○ 지역비례선발제도의 경우 기계적인 다양성을 추구하면 구조적인 개혁이 아닌 억지스러운 개혁이 될 우려가 있기에 합리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모색할 필요 ○ 한국은행의 경우 지역화폐효과와 관련한 용역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를 해 재검토할 필요 ○ 지역화폐는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 시기, 대상을 타겟팅하여 진행할 필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지방에 대한 대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학 교육을 정상화시킬 필요 ○ 세수결손 부분을 지방교부재원 미교부로 회수하는 방안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사 필요 ○ 중앙은행이 지역거점대학들을 육성함을 통해 지역에 일자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 ○ 금리인하 정책과 부동산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지역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에서 수도권과 지방 시장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
지역본부	○ 목포, 강릉, 포항 지역본부 폐쇄 또는 축소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입장 검토 필요 ○ 광역시 최초로 소멸 위험 단계에 접어든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구체적인 연구와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 ○ 부산, 울산의 최근 5년 GRDP 성장률이 전국 지자체 17곳 중 각각 13위, 17위에 해당한다는 등 부울경 지역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 ○ 부산지역 자영업자 폐업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대부분이 금융지원이라는 점에서 재정지원을 검토할 수 있게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정부에 의견 전달 노력 필요 ○ 울산의 경우 1인당 GRDP와 GNI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대단히 부진하다는 점에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제출할 필요 ○ 함부르크 광역권 분석 보고서에서 노동 생산성, 대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중교통 접근성, 지역 내 주택시장의 공급수요 문제 등을 분석하였는데 지역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부울경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 검토 필요 ○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전북지역 주력 사업 중 하나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한 결과보고서 작성 필요 ○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전라북도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새로운 도약 방안에 대해 연구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연구인원이 부족하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연구역량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대전과 전북지역의 취업자 수 감소 및 자영업 침체 악화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부금 삭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경기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분석할 필요 ○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에 접수된 금융중개지원 대출의 신청 건수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액 지원은 낮다는 점에서 금액을 상향해 지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충남 지역의 소득 역외유출이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정주여건의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제반의 문제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 ○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GRDP의 시점이 예산안 작성 시점 기준 대비 시차가 2년이 늦어진다는 점에서 시차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전북 지역의 지방소멸 문제에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전략보고서 작성 필요 ○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등 지역의 정주여건을 높여 기업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연구를 지역본부에서 추진할 필요 ○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관련 기업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하여 양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질적인 결과도 제시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 ○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전북의 성장을 위해 신성장 수출산업 육성으로의 다변화 전략 연구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방안 연구 필요 ○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에서 대전지역의 연구개발 인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R&D 예산의 삭감이 연구인력의 축소·감소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 ○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에서 연구 중심 대학이나 해외 우수 대학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분석하여 비수도권 경제 발전을 위해 카이스트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할 필요 ○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통화관리를 지역별로 편차를 두는 방법이나 정부의 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연구할 필요 ○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지역의 행복도를 높여 인구를 늘리고 경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전북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경제 관련 단체장들과 협력하는 방안 모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색 필요 ○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에서 충청권이 자생적인 경제생태계를 만들 잠재력이 크므로 이를 하나의 시험적 모델로 만들어 타 지역에도 확산시킬 필요 ○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조성하고 새만금이 가진 잠재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을 조성하기 위해 청사진을 뒷받침할 필요 ○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제일 낮기에 사업 투자 자원 미확보로 인한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지역에 기반한 연구를 통해 지원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 ○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군산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등 지역형 일자의 계획 대비 실적이 낮은 수준에 있는 것에 대해 분석하고 관리감독할 필요 ○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지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서 지방 중심의 자생적인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백업할 필요 ○ 교통 인프라 문제 해결 없이 지역 인프라를 증진시키는 것은 오히려 교통난만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교통문제 및 상무광천선의 필요성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간할 필요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전남 지역의 의료 인프라 문제를 검토할 필요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광주전남 지역을 전체적으로 메가시티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 ○ 광주·전남의 싱크탱크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의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 실시 내용
	협력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 ○ 광주가 자영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GRDP가 낮다는 점에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산업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제언할 필요 ○ 제2금융권 및 비은행권 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주시할 필요 ○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기후 변화가 어업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 등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금융 지원정책을 강구할 필요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외부에 들어온 공공기관들이 지역사회와 밀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ESG 경영에 지역사회공헌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대구경북의 청년고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청년 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산업구조가 바뀔 수 있도록 역할을 고민할 필요 ○ 탈탄소 정책으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의 제조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구경북본부에서 이에 대해 연구 및 조사를 시행할 필요 ○ 대구지역 한계기업 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타격 축소 방안 마련 ○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경우 직원 1인당 담당 인구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인력 충원 및 재배치 방안 검토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필요 ○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신청액이 3.4조인데 한도는 5894억에 불과해 한도를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조정 필요 ○ 반도체특화단지 등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구미에서 추진되기에 금융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 구미지점 재설치 검토 필요
경영관리	○ 한국은행의 책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할 필요 ○ 한국은행의 해외 주재원들이 지나치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 검토 필요 ○ 한국은행법 규정에 따라 매년 순이익의 30%를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한시적인 유예를 통해 정부의 세외수입 확대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 ○ 한국은행 내부 고위직도 여성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배려 필요 ○ 한국은행의 평판조사 결과가 낮기에 확인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 ○ 한국은행 지역인재선발제도의 경우 지방인재 채용 목표 인원이 자체도 미미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적도 많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 ○ 한국은행의 경우 개방형 고위직 채용도 적고 정규직 전환 비율도 낮다는 점에서 조직구조가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기에 외부 인사를 적극 영입하는 등 경영인사 혁신방안 도입 필요 ○ 한국은행이 미국의 FRB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새로이 확장시킬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기관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경영정보 공시수준을 지금보다 확대할 필요 ○ 한국은행이 해외사무소장 및 사무소 소속 선임 주재원에 대해 주택임차료를 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보다 30% 가산하여 지원하는 것은 외교부에서 정하는 공무원 임차료 한도를 상회하는 과도한 복지이기에 개선 필요 ○ 한국은행의 일반국민 대상 평판 조사에서 통화신용 정책 수립 및 집행 등 주요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가 하락하였기에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한국은행 임직원들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사내대출을 활용하고 있어 사내대출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 필요 ○ 한국은행 내 젊은 직원들의 전직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한국은행의 21년~23년 3년간 평균 예산 집행률이 74%에 불과하여 예산을 현실적으로 편성하고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할 필요 ○ 한국은행의 과도한 기자간담회 비용 발생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은행권 품질 개선과 보안기술 강화 등을 위한 R&D 연구 노력 필요 ○ 한국은행 금융 전산망 장애 대응 지침이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세부절차, 금융기관의 책임소재, 운영인력 배치 등이 미비해 보완책 마련 필요
금융통화위원회	○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실명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 실시 내용
	금통위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지적 ○ 금융통화위원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록이나 의사록을 실명으로 공개할 필요 ○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기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금통위원들의 활동이 적어 회의록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 ○ 금융통화위원회의 경우 학력, 성별 등이 편향된 측면이 있기에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주적 구조를 갖출 필요 ○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경우 의사록의 익명 공개로 책임성이 낮고 활발한 활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 ○ 금통위원의 보수 기준을 조정하고 회의록의 실명화를 통해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
녹색금융 및 지속가능한 금융 관련	○ 한국은행이 타 국가의 중앙은행과 비교했을 때 지속가능한 금융생태계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 ○ 녹색채권과 관련하여 금융감독 기관과의 정책공조 및 녹색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확대 검토 필요 ○ 한국은행이 기후플레이션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 기후위기와 관련된 대응이 물가안정이라는 한국은행 본연의 법적 책무와 연관되어 있기에 중요성을 강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 실시 내용
	게 인식할 필요 ○ 한국은행이 NGFS에서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권한을 갖고 노력할 필요 ○ 녹색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늘려가는 정책의 구체화 필요 ○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금융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문제가 있기에 한국은행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 ○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저금리 녹색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 기후공시와 관련하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필요 ○ 한국은행이 녹색채권 발행을 활성화하여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후대응 정책 중 실제로 시행되는 정책은 일부에 불과해 실질적인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필요 ○ 한국은행이 매입자산의 탈탄소화를 추진할 계획을 마련하고 유럽중앙은행처럼 적극적인 탈탄소화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기후위기 대응이 물가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기후위기 대응을 통화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할 필요 ○ 전체 유가증권 대비 ESG 자산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기타	○ 권위적인 발상을 버리고 국민 입장을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게 글로벌한 시각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중앙은행으로서 책무를 다할 필요 ○ 금융 당국자들이 은행 기관들과 결탁하여 은행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는지 의혹 제기 ○ 재정건전성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재정준칙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결혼식 과다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예식장을 공공에 개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국내 금융시스템 내에서 약한 연결고리가 없는지 예의주시할 필요 ○ 모든 인간들이 생성시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 증가함에도 자본에 대한 분배가 계속 커지는 문제점 지적 ○ 교육교부금을 유치등 교육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할 필요 ○ 대한민국의 입시 문제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이 검토할 필요 ○ 우리나라의 비은행 금융중개 자산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그림자 금융의 리스크 관리 필요 ○ 한국은행의 정부에 대한 일시대출금이 급증하는 것은 정부의 국채발행을 우회하고 통화증발을 야기하며 파행적 재정운용을 방조한다는 점에서 검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정부의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 한도를 누적액 기준으로 한도를 바꾸고 이자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페널티를 부여할 필요 ○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있어 장기간의 관점에서 경제에 대한 구조개선을 검토할 필요 ○ 대한민국의 자원들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본 시장의 발전을 유도할 필요 ○ 정부가 감세정책을 통해 재정여력을 감퇴시켜 취약계층을 고금리 시기에 그대로 방치하도록 해 내수 붕괴 위기가 발생했다는 지적 ○ 일가정 양립을 해야 하는 가정들이 최저임금의 상승 문제로 가사도우미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에 개선 필요 ○ 정부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구조적인 부족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를 제대로 하고 재정 운용에 있어서 세입세출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해 일시차입금이 필요한 상황을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 ○ 한국은행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감독권한을 가질 필요 ○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과 관련하여 부대조건과 같이 기획재정부에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우선 조달하도록 촉구할 필요 ○ 한국은행의 공적자금이 배당금 형식으로 회수되어 회수 속도가 현저히 낮다는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상환 대책 마련 필요 ○ 한국은행 일시차입금과 관련하여 가산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 실시 내용
	○ 은행 간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적정 수준 금리를 준수하도록 은행 간 할당액에 차이를 두는 제도 도입 필요 ○ 자본시장의 발전을 통해 다층연금체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양극화 개선을 노릴 필요 ○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독과점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 ○ 공공요금을 물가 관리 수단으로 쓰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 등에서 개선할 필요 ○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에서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기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할 필요 ○ 화폐 인물과 관련하여 독립운동을 인물로 고려할 필요 ○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의 활용을 위해 사인 간의 계약을 통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서 가계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 ○ 돌봄서비스 부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함에 있어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한국은행의 구조개혁 보고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현금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전통시장에서 위조지폐가 활용되면 소상공인이나 고령층의 피해가 커지기에 이에 대응하는 위폐 방지대책 마련 필요 ○ 농산물 가격 인상에 대한 해법으로 농산물 수입보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정부정책 마련과 대체작물 확대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 ○ 최근 발행·유통이 늘어난 상품권의 영향력을 살펴보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고향후 관련 지표에 반영하여 활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 ○ 한국은행의 정책 제안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정권이나 의사결정자들이 바뀌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위조지폐 통계에 대한 개선과 법적인 문제 개선 및 유통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KOFR(코파)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필요 ○ 총재 초상화 제작 시 미술품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의 개정 필요 ○ 금융기관 및 소매점과 협력하여 POS기 현금인출 수수료를 ATM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검토 필요 ○ POS기 현금인출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분석하는 정책 연구를 진행하여 현금인출 수단을 다양화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 마련 필요 ○ 모바일현금카드 사업의 실적 제고를 위해 모바일현금카드 기능을 개별 금융기관 앱에서도 확대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직불결제 가맹점도 확대할 필요 ○ 사회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할 필요

7. 한국수출입은행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체코 원전 수주 관련	○ 체코 원전 수주 관련 경제성과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익성, 자금회수 가능성 및 지식재산권 이슈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며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 ○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하여 30년 전력 판매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에 대해 검토 필요 ○ 체코가 원전 수주에 100% 자금을 투입하고, 금융지원 의향서는 관례상 제출되는 것이며, 금융지원이 합의된 바 없다는 주장 모두 거짓으로 보이므로, 6호기 수주까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하여 과도한 저가수주나 저리지원이 국제투명성협약 또는 EU 내부의 법률에 저촉돼서 불법 보조금으로 규정받을 우려가 있기에 검토 필요 ○ 체코 원전 수주 등 대형 수주와 관련하여 자본 수출의 기회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식개선이 느리기 때문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할 필요 ○ 관심서한과 여신의향서의 차이 등 국민적 혼란이 발생하는 영역에 대해서 해명을 통해 불안 요소를 해소할 필요 ○ 수은은 OECD 수출신용협약을 따르는 수출신용기관으로, 체코 원전 금융지원의 건은 가이드라인 내에서 국익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 ○ 체코 원전 수주 문제는 수익뿐만 아니라 원전기술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장악을 위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검토 필요 ○ 원전 수주 사업 관련하여 경제성, 수익성의 예측과 분석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 ○ SMR 사업의 경우 상용화가 된 적도 없고 표준화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철저히 파악하고 진행할 필요 ○ 체코정부가 두코바니 6호기와 테플린 원전건설에 금융지원을 요청할 경우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수출입 해외진출 지원 등 정책금융 관련	○ 납입자본금이 모자라 폴란드 방산수출에 필요한 충분한 신용공여를 못해주는 상황이기에 대주단을 구성하고 은행들이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 필요 ○ 국내기업들의 대규모 방산 수주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수출입은행 내 방산 수출금융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방산 수출에 특화된 금융지원 수단 개발 필요 ○ 폴란드 방산수출 관련 금융지원 자본금 문제로 한계가 있기에 자본금 추가 확충 필요 ○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에 있어 최근 수출금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실물 수출에 더해 금융 수출의 효과까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 ○ 특정 계열을 대상으로 동일차주 신용공여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여신이 균형있게 공여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할 것 ○ 특별계정을 활용한 신규 대출 승인이 부진하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재점검하고 정부의 포지셔닝을 다시 잡아 활성화시킬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수출입은행이 대출하고 보증과 연계되어서만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는 제한을 해소하여 해외 지분 투자를 활성화하고, 펀드 출자에 관련된 제약을 완화할 필요 ○ 미래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벤처캐피탈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 현행법상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한 국내 기업만 지원할 수 있고 ‘국내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제도 개선 필요 ○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따른 지원방식을 대출뿐만 아니라 보증, 출자 등 다른 영역으로 넓힐 필요 ○ 5조원 규모로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아직 1,900억원 발행에 그치고 있으므로 내실 있는 운영 필요 ○ 기반기금의 저조한 집행률을 반면교사 삼아 공급망안정화 기금의 내실 있는 운용 필요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금융지원이 과다하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지원의 위험성 심사를 철저히 할 필요 ○ 수은금융과 공급망안정화기금이 계정이 분리되어 별도 운영된다는 점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자금의 중복지원 문제 발생할 여지가 있기에 대책 마련 필요 ○ 수은금융과 공급망안정화기금간 공동·연계지원을 통해 공급망안정화사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유턴기업 49개에 대한 수은의 금융지원 규모가 2조 5천억원을 넘는데, 실제 돌아온 기업은 절반도 되지 않으므로 제도개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유턴기업 지원사업의 낮은 복귀율 문제, 산자부와의 사후관리 공조 및 자금 회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제도와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이 겹치지 않도록 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에 주력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험을 통해 리스크 관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 비중 대비 수은의 문화콘텐츠 분야 지원 비중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 문화콘텐츠 관련 대출만 실행하는 것보다 투자를 병행하여 수출입은행의 포트폴리오 구조 개선 및 수익률 제고 도모 필요 ○ 콘텐츠수출 특례금융 지원 실적이 낮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수출품목과 수출 국가의 다변화를 위해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대책 마련 필요 ○ KOFR(국채담보 익일물 RP금리) 활성화를 위해 KOFR 연계 채권 발행 검토 필요 ○ 수은이 PF 방식으로 지원한 해외사업 관련 우리나라 기업의 뇌물 의혹이 있는데 수은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은은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인도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수출입은행의 인도 현지 법인을 뉴델리보다는 뭄바이 부근으로 설립할 필요
중소기업, 취약계층, 지역경제등	○ RG 발급이 대형 조선사에만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조선소에 대한 RG 발급을 확대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지원관련	○ 수출입과 해외 진출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나 ESG 금융프로그램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에 보다 지원할 필요 ○ 히든챔피언 사업자 선정이 대기업에 가까운 기업들이 선정된다는 점에서 제도 취지에 맞는 적절한 기준과 원칙을 세울 필요 ○ 수출팩토링 지원 사업에서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측면이 있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중소기업 대출 채권 비중과 수출팩토링 제도의 지원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 ○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지원 확대 및 신용도가 높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여신정책 필요 ○ 중소중견 건설사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정책금융이 보다 균형있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수은의 법정 자본금이 늘어난 만큼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수출 성장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자원외교 관련	○ 금융지원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관리의 구체적인 관리목표를 설정할 필요 ○ 수은은 추가적인 신규 화석연료 투자를 중단하고, 금융지원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관리의 구체적인 관리 목표를 조속히 수립해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필요 ○ 화석연료 공적 금융지원 제한을 위한 OECD 수출 신용협약 개정에 정부가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수은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은 지속적으로 LNG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바 이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 필요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사용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수출입은행의 탄소배출량이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배출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배출량 감축을 위해 에너지 고효율 사무기기 도입 확대 및 외부감축사업 폭 확대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그린 ODA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기후변화 직접 관련 사업 증대에 집중할 필요
EDCF등 경제협력 관련	○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는 ODA 지원이 필요하고, 개도국 고부가가치 대형 인프라 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승인 규모를 선제적으로 확대할 필요 ○ EDCF 차관과 관련하여 해당국의 경제상황, 신용, 국가적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 전반적인 사업 관리를 할 필요 ○ EDCF 사업 대형화에 따라 공여국 신용 상황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 확대 및 기존 사업의 국가별 자본조달상황과 신용상황 파악 등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EDCF 사업에서 원리금이 연체되고 있는 사업과 채무위험국으로 파악되는 나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부산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최근 5년간 20건의 기본약정 중 12건의 기본약정을 2024년에 체결하였는데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신용도가 낮은 국가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바, 신용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환수 가능한 나라에 대해서 승인을 할 필요 ○ 입찰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료를 제출해 선정될 경우 수출입은행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 강화 필요 ○ 미승인된 사업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함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하고 자체변경이 과도하므로 개선 필요 ○ EDCF 사업의 수주금액 비중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편중되어 진행된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 ○ EDCF 입찰 초기 단계의 실적 조건 평가에서 중소기업에 불이익이 많기에 제도개선 필요 ○ EDCF 소액차관 프로그램의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 마련 필요 ○ 2020년까지 운용됐지만 현재는 사실상 폐지된 중소기업 전용 차관 제도를 부활시킬 필요 ○ EDCF 지원사업의 ESG 경영을 위해 부정당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제재기간도 명시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민원이 제기된 경우 민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승인을 중지하는 등 EDCF 사업 입찰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이 개입 가능한 절차와 향후 수원국과의 권한 명확화 필요 ○ EDCF 사업 입찰 시 뇌물제공 등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에이전트 고용을 금지하는 방안 고려 필요 ○ EDCF 사업 민원들을 수원국의 권한과 책임으로 미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루지 말고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조치방안 강구 필요 ○ EDCF 사업 진행에 있어 잘못된 원-하청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방안 마련 필요 ○ 코트디부아르 암센터, 세네갈 암센터 등 EDCF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책임을 가지고 지연 사유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필요 ○ 필리핀 라구나호 순환도로 사업은 ADB에서 실시한 F/S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여 일반적인 EDCF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은 문제 지적 ○ SOC 중심의 EDCF 사업을 인적 자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 ○ EDCF 홈페이지에 ODA 역사가 식민지 종주국들의 점령지 개발이라는 표현 삭제 필요 ○ EDCF 사업의 사후평가가 취사선택되어 이뤄지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사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EDCF 사업 세이프가드 공개 체계를 국제기구나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필요
출자 관련	○ 수출입은행에 정부가 출자를 하는 경우 현금출자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승인이 불필요하는 등의 이유로 현물출자의 비중이 높는데, 이는 BIS 규제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물출자에 대해 국회의 통제 필요 ○ 수은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예외적용은 과도함에도 행정부가 시행령에서 임의로 연장하고 확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제도개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금융지원 적기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수출입은행 자본금을 조기에 확충할 필요 ○ KAI의 공적 특성 및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이 초기단계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KAI의 민영화 이슈에 대응할 필요 ○ 현물 출자 중 KAI 지분이 너무 과도하여 적정 수준으로 해소 필요 ○ KAI의 리스크관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지분 구조로 인해 KAI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KAI 지분을 정리하고, 즉시 정리가 불가능할 경우 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할 필요 ○ 수은 부실채권 누적액이 1.3조원 규모인 상황에서, 상반기 한계기업 여신잔액이 증가하고 있고 한계기업 중 대기업 비중이 높은 수준이므로 선제적 부실예방 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 제고 필요 ○ 수출입은행의 출자회사를 관리함에 있어 출자회사 관리위원회를 내실화하고, 위원회에서 대출금 출자 전환 건 등을 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편방안 마련 필요
북한 지원 문제 관련	○ 북한에 빌려준 자금으로 지은 자산을 훼손시킨 경우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북한의 자금을 가압류 하는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자금을 환수할 필요 ○ 개성공단지원재단에 계속해서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되어 혈세 낭비가 발생했으므로 수은의 재단 앞 채권의 관리계획 마련 필요 ○ 대북교역이 단절된 상황에서 대북사업 투자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은이 운영자금 지원 및 대출을 실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시하고 있는데, 해당 금액을 갚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으므로 회수가 어려운 금액은 정리하는 등 이들에 대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 ○ 남북관계의 경색 이후 실질적인 교류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의 적절성 검토 및 수은의 참여 필요 ○ 남북사업이 활발했던 기간과 경협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기간 모두 같은 규모로 남북본부 인력운용을 한다는 점에서 조정이 필요하고,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감액 필요
경영관리, 조직운영 및 기타	○ 2023년도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TFCD 보고서 정보 공개에 오류가 있는 등 문제가 있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 ○ 세수결손 대응 위해 정책금융기관에서 배당금을 과도하게 정부에 지급하고 있는바, 다른 나라의 국책은행의 사례를 연구하여 제도화시키고, 배당협의체에 수은 은행장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필요 ○ 수은 배당금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이유로 수은이 당기순이익 증가를 들고 있는데, 대손충당금 환입의 영향이 크므로 향후 배당금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배당 필요 ○ ESG 경영에 있어 매년 발전된 단기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정부에서 운영하는 K-RE100에 가입할 필요 ○ 여성과 소수자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임원의 비율을 높이고 임금 차별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 방안 개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집행액이 1%에 머물고 있으므로 제고할 필요 ○ 장애인 고용이 지속적으로 미달인데, 고용을 하기보다는 고용부담금으로 해결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시정 필요 ○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의무 이행 확보 필요 ○ 해외근무 직원들의 성과 측정이 불분명하고 국외근무수당이 공무원 수준을 상회한다는 점 등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음에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사내 대출을 제공하였는바 시정 필요 ○ 수은의 ROE가 국책은행 중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전략 마련 필요
기타	○ 수출입은행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 수은 감사팀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검토 필요

8. 한국조폐공사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디지털신분증, 기념주화 등 국내 사업 분야	○ 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계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국내 업체들에 대한 골드바 제조 기준 완화할 필요 ○ 전자여권 발급량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COS가 전부 외산 제품이라는 점에서 핵심자재 국산화 기술 개발 필요 ○ 전자여권의 전자칩과 COS의 국산화 진행 및 향후 전자여권에 실제 적용을 위한 추진 계획 마련 필요 ○ 내구성과 위조 방지 및 위생 면에서 강점이 있는 폴리머 화폐 개발 등 연구개발 필요 ○ 향후 모바일 신분증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중요하므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를 위조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협업하여 마련할 필요 ○ 모바일신분증이 위조는 편리하고 활용은 불편하기에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모바일신분증이 투표 등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장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통신망이나 시스템을 점검하여 철저하게 대비 필요 ○ 여권 재발급을 통해 세금이 낭비된다는 점에서 재발급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 관련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압인 정책을 강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필요 ○ 신여권 발급의 외주가 시스템화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여권의 핵심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외국업체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등 신분증 관리 선진화에 행정안전부와 함께 노력할 필요 ○ 조폐공사의 경영여건 악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익성 제고 및 품질 제고 방안 모색 필요 ○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신뢰도 높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구축하고 행안부, 경찰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위조 적발체계를 강화할 필요 ○ 전자여권 개별배송 서비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수수료 절감과 묶음 배송 등을 검토할 필요 ○ 여권 재택 신청 도입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과 연계한 외교부와의 협업 및 기술적 검토 필요 ○ 모바일 신분증으로 중고등학생이 사용하는 모바일 학생증 제작 추진 필요 ○ 화폐 및 유가증권의 보안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비 세부 내역을 정비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연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할 필요
미래 성장 동력 및 사업 다각화 모색 관련	○ 홀로그램 국산화와 광결정 필름 지속 개발의 두가지 방안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 ○ 조폐공사의 개척형 사업의 단기 및 중장기전략을 재검토하여 새롭게 수립할 필요 ○ 홀로그램 제작 등과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해서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필요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모의 테스트하는 CDBC로 발행하는 방안 검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조직운영 전반	○ 갑작스러운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보류에 따라 라벨지 계약상대방인 중소 민간업체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라벨지 공급 관련 계약당사자인 조폐공사는 법원 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 ○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보류에 따라 조폐공사와 계약을 맺은 중소 민간업체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조폐공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측면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보류에 따른 피해업체와 공동으로 환경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필요 ○ 조폐공사의 판매·전시 시설인 오롯디옴관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실적을 낼 필요 ○ 병가 사용을 출근 불가능할 때가 아닌 직무 수행이 곤란할 때로 개정할 필요 ○ 연차사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직들이 솔선수범하여 연차사용을 늘리는 방안 검토 필요 ○ 화폐박물관의 관람환경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 여성 전체 임직원 비율이 27%에 불과하고 여성 고위자가 7%에 불과해 조직 개선 필요 ○ GKD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점검 및 중장기적인 경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GKD 경영실태 특정감사로 밝혀진 부정행위 직원에 대한 고발결과가 나올 경우 즉각적인 공시 필요 ○ 직원들의 부정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행위를 행한 직원들에 대한 엄벌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정부의 정책 변화로 민간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필요 ○ 제지본부가 환경법을 위반하는 등 내부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하므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공사의 불공정 계약체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청년 고용률 제고 및 청년 고용의 질적 제고 추진 필요 ○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어울리도록 조폐공사의 사명 변경 검토 필요 ○ 해킹메일 대응 훈련에서 미 신고자에 대한 소속부서장의 해킹메일 대응 교육 실시 필요 ○ 연차 미사용 일수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으로 인해 연차 사용 현황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 개정 검토 필요 ○ 연차 사용은 노동력 보전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 ○ 자회사 경비원의 시중노임단가 상향과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내복지기금 운영계획 마련 필요 ○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노력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한국조폐공사 기술연구원이 집행하는 세부사업별 예산액 집행액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 ○ 연구활동진흥비 안에 지식재산권 보상을 위한 포상금을 포함시키는건 부적절하므로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과목을 별도로 마련해 계상할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요 ○ 국가과학기술자문위의 R&D 권고율 대비 5년 연속 미달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R&D 투자 확대 계획 수립 및 관련 규정 마련 필요 ○ 해킹메일 대응 훈련에서 조폐공사 직원들의 열람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신고율도 늘어나고 있는 바,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에 대한 관리 필요 ○ 정부 부처의 국정과제인 디지털위임장서비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시행 이후 중단되었고 이는 조폐공사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므로 앞으로 사업 타당성과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추진할 필요 ○ 조폐공사 자회사 콤스코시큐리티는 중소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속 특수경비원들에게 가산세 납부동의여부를 요구하였는 바, 이는 철회될 필요 ○ 콤스코시큐리티는 특수경비원 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콤스코시큐리티의 일반관리비에서 행정인력 인건비가 편성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편성할 필요 ○ 콤스코시큐리티의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이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수주인므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상향할 필요 ○ 2020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은 모기관의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활용한 자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회사 노동자 복리후생 증진을 권장하고 있는 바, 자회사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필요 ○ 고용노동부의 한국조폐공사 자회사 운영실태는 “특수경비, 시설관리등의 경우 동종·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 기준을 정하여 이를 반영하여 계약 단가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 한국조폐공사 자회사 특수경비원 시중노임단가 상향 계획 마련 필요 ○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 자회사를 정비대상 제외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한국조폐공사는 공사 내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감축현황과 인원 충원계획을 제출할 필요

9. 한국투자공사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인력 유출 문제	○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내부 육성 시스템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 ○ 전통자산 운용역의 퇴직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낮출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검토 필요 ○ 공공기관 평균보다 퇴사율이 높고, 인턴 입사자 중 25%가 계약 만료 전 퇴사한다는 점에서 고급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해외 주재원들의 귀국 후 퇴임 문제 해결 필요
투자 정책 방향 등 관련	○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투자에 활용하라는 목적으로 위탁된 7조 원의 자금을 활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외 첨단기술기업 인수를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집행할 필요 ○ KIC 수익률이 저조한 것은 위탁운용사의 수익률이 벤치마크보다 낮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위탁운용사에게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탁운용사 선정과정 투명화, 성과·페널티시스템 구축 및 지나치게 높은 위탁운용 수수료 산정체계 점검 등 제도 개선 필요 ○ 공사의 운용 수익률이 타 국내 연기금이나 해외 주요 국부펀드와 비교 시 낮다는 점에서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 수정 및 우수 인력 확보 등 전반적인 조직의 역량을 높일 필요 ○ 해외지사별 투자실적이 집계되고 있지 않아 자산 운용에 대한 평가가 어려우므로 제도개선 필요 ○ 기관과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바스켓 수익률과 달러 기준 수익률을 병행해서 공개할 필요 ○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 투자 해외 실사 관련 우려 등이 제기되므로, 부동산 투자 위험 심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대체자산 분야에 있어 국내 운용사에 대한 별도 풀 제도를 도입할 필요 ○ 정부나 한국은행 및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관리 주체 외 위탁자산을 받지 못해 위탁자산 규모가 정체되어 있어 제도 개선 필요 ○ 현행 제도상 가상자산 투자 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같기에 국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정립된 투자 방침을 세울 필요 ○ ESG 투자 확대, 투자 해서는 안되는 분야는 투자배제, 새로운 ESG 투자수단 개발, 녹색채권 발행 등 노력 필요 ○ 2021년 투자공사법 제31조 개정 당시 수익률 극대화에 더해 ESG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바, 이는 수익성 극대화랑 상충되는 부분이라는 지적 ○ 투자공사가 위탁투자한 ESG펀드의 상대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므로 수익률 개선 필요 ○ 책임투자 비중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 강구 필요 ○ 투자공사가 일본·중국 등 해외 경쟁 기업의 국가첨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 실시 내용
	단전략산업 분야를 투자해 손실을 보고 있으므로 투자규모 및 비중 즉각 조정 필요 ○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성을 갖고 투자 실시 필요 ○ 사모채권 등 투자 영역을 확대함에 있어서 올바른 자세를 견지할 필요 ○ 연차보고서, 위탁운용사 현황 등과 관련하여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일 필요 ○ 해외기업 공동투자 역할 강화를 위해 전략투자팀 인력을 확충하고,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등 전략적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인도 뭄바이사무소 개소 후 투자성과가 미미하므로, 인도 뭄바이 사무소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경영관리, 조직운영 및 기타	○ 동북아의 금융허브 취지로 설립된 한국투자공사가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운영 과정 점검 필요 ○ 세수결손 대응 위해 정책금융기관에서 배당금을 과도하게 정부에 지급하고 있는바, 당기순이익의 전액을 정부배당액으로 가져가는 것은 사업 진행의 차질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국책은행의 사례를 연구하여 제도화시킬 필요 ○ 투자공사의 정부배당을 60~80% 수준으로 두고 나머지는 투자공사 본연의 역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당 내역 조정 필요 ○ 자산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가 채용 및 내부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 대체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보고할 때 벤치마크 대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비 수익률을 보고하지 않은 것과 같이 부족한 수치를 가리고 보고하는 자세 시정 필요 ○ 임직원들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 ○ 중장기적인 전략적 목표를 세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전담 연구조직을 마련하여 연구 역량을 높일 필요 ○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중요 사안들은 국회에 정보를 정확히 보고할 필요 ○ 자산을 간접운용하는 펀드운용사들에 대해 성과보수를 지급하여 성과를 증진시킬 필요 ○ 위탁운용사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운용사를 관리·감독하는 내부 임직원 인원이 지속적으로 부족하므로 개선 필요 ○ 단기성과 위주 성과평가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연지급비 도입 필요 ○ 투자공사의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여 전통자산의 1인당 운용 규모를 낮출 필요 ○ 학자와 연구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 ○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적극적인 설명을 하는 등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 공개 필요 ○ 한국투자공사 사장 인력이 대부분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제전문가가 올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여성 고위관리자 부족 및 남녀 임금격차, 장애인 고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용 미이행 등의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의무 이행 확보 필요 ○ 해외근무 직원들의 별도 실적 없이 호화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우수한 청년인턴과 계약직/비정규직 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사제도 개편방안 마련 필요

10. 한국재정정보원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방안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징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적발률 증가를 위해 합동현장점검 활성화 등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의 적발률이 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확도를 높일 방안 마련 필요 ○ 보조금 부정수급 탐지패턴 고도화를 위해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길 필요
조직운영 및 기타	○ 삶의 질 지표와 재정사업 간 연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연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사무실 이전에 따른 새로운 임대계약시 월세가 낭비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필요 ○ 디브레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분할 수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과태료, 과징금, 국세외수입을 관리하는 국세외수입 포털시스템의 이용실적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 필요 ○ 재정정보분석센터의 연구실적 증진 및 연말에 편중되는 보고서 발간 시점 개선 필요 ○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필요 ○ 10% 이상 차이나는 성별 평균임금 비율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의 실질적 기회 확대를 위한 구조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해킹시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보안담당부서의 결원을 충원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인사 관련 제도 설명 및 안내 등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사 관련 직원들의 소요·요청에 대한 설문 실시 등 고충 처리체계 마련 필요

11. 한국원산지정보원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원산지관리사 자격 관련	○ 원산지 도용을 막고 국익 보호 위한 원산지 증명 전 문성 확보할 필요 ○ 원산지관리사, 실무사 자격시험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므로 문제은행 시스템 도입을 통한 합격률, 난이도, 출제오류등을 바로 잡을 필요
자체 운영 관련	○ 원산지 표시 업무뿐만 아니라 원산지 단속 및 교육 등에 대해서도 역할 확대 필요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규정한 수준에 부합하도록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는 등 청년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 ○ 한국원산지정보원이 보유한 주식 중 관세청 퇴직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처분 필요

12. 한국통계정보원

주요감사사항	주요감사실시내용
자체 운영 관련	○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연대 책임을 갖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할 필요 ○ 여성에게 실질적 기회가 주어지도록 여성관리자 확대를 추진하고 여성과 남성의 심화되는 평균 임금 격차를 해소할 필요 ○ 병가 사용을 출근 가능 여부가 아니라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따라 승인하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필요

Ⅵ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기획재정부

가. 경제 및 재정정책 부문

(1) 경제 정책 기조의 변화 필요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낙관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환율 등 다양한 경제 지표에서 부정적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감세·긴축재정의 정책기조를 바꾸어 대책을 마련할 것

수출 증가가 일자리와 내수로 이어지는 구조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으므로 정책기조를 변화시킬 것

(2) 내수 부진과 자영업자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내수 부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조합을 강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재기와 구조적 정착을 위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연계 등 정책을 추진할 것

(3)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강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

(4) 경제심리 안정화 방안 마련

경제심리가 악화되고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대국민 소통과 설명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과 관련하여 정책방향이 일관적이지 않아 국민과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금융위, 국토부 등 주무

부처와 협의하여 조치할 것

(5) 기업 지원 강화 방안 마련

반도체 경쟁의 선점을 위하여 국가전력망 확충 등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고 배터리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설비투자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급을 검토할 것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할 것

(6) 잠재성장률 제고 위한 방안 마련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로 이민 정책을 통해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지방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내수 진작 방안을 마련하며 수출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것

(7) 미래혁신산업 발굴 및 지원 방안 마련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미래혁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원 방식으로 정부의 직·간접적 지분투자 방식 고려할 것

(8) 기업가치 제고 방안 마련

적세개혁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여 자본시장을 개혁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9) 경제전망 오차 개선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의 경제전망의 오차가 과도하고 KDI 등과 비교하여 서로 다른 전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경제전망 오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0) 수출 증대 방안 마련

무역수지 흑자는 사실상 반도체 착시효과와 수입감소효과에 따른 것이

라는 점을 인식하고 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과 대외 불확실성 증대를 감안하여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11) 소비자의 주관적 경기인식 개선 대책 마련

고용유발계수가 낮은 산업으로의 개편,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느끼는 주관적 경기는 나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2) 개 식용 산업 폐업 지원에 대한 재검토 필요

개 식용 산업에 대한 폐업 지원이 예산 운용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책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할 것

(13)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과제에 대한 예산 관리 필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과제에 대한 예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 신뢰 저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할 것

(14)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15)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조치 필요

외교부장관의 공관이 용도폐지 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의 사용승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착수한 것은 국유재산법 위반에 해당하고 대통령 관저 대상지 변경을 과장이 전결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대통령 관련한 사항은 국유재산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부정 선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관저 이전에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발표를 실시할 것

(16) 개인 주식투자자 보호 방안 강화 필요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되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나 투자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사외이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법무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17)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자본시장의 가격기능 정상화를 위해 주가조작 관련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주가조작에 대한 엄벌주의를 금융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립할 것

(18) 방산, 원전, 우주항공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포함 검토

방산, 원전, 우주항공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19) 정확한 통계 생성·전달 시스템 구축

국제기구에 정확한 통계가 제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통계청 등이 협력하여 정확한 통계와 지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구에 정확한 통계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

e-나라지표 중 일부 그래프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

(20)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추진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범죄, 탈세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과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것

(21) 한국담배판매인회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

한국담배판매인회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부패와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의 한국담배판매인회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할 것

(22) 공공조달 정책 개선 추진

혁신제품/기업에 대한 후속관리가 부진하므로 양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질적 관리에 집중할 것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조달시장 진출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 전략계획을 수립할 것

공공계약에서 고정불변가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국가계약법과 납품대금연동제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 간 충돌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허위매출을 통해 입찰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적격심사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부실시공 업체가 벌점을 받았음에도 집행정지를 통해 이를 무력화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3) 대북사업 정리 방안 마련

대북사업 재개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투자자들에 대한 지원

등 정리 방안을 마련할 것

(24) 국유재산 관리 강화

국유재산의 관리 소홀로 유희건물과 대부료 미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국유지에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특정 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임대 관련하여 캠프의 특혜 여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25)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방안 마련

국유재산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무상임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육청이 점유 중인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의 양여를 검토할 것

(26) 유사담배 규제를 위한 노력 필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와 유사담배를 조속히 규제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

(27)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별 지원을 막기 위해 개별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28) 불법 복권 사이트 조기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불법 복권 사이트 차단을 위한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소요되므로 불법 사이트 조기 차단을 위한 신속 심의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할 것

(29)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민간항공기교역협정 문제 해결 필요

민간항공기교역협정 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운항업체와 제조업체 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으므로 객관적 절차를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

(30) 한국은행의 국제금융기구 출자 계획 등 국회 제출 필요

한국은행의 국제금융기구 출자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분담금 납부 계획, 실적과 평가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31) 적정한 원가 소요를 반영한 전기요금 결정 필요

한국전력의 재무상황 악화를 고려할 때, 적정한 원가 소요를 반영하여 전기요금을 결정할 것

(32) 핵심 원자재 비축 업무의 광해광업공단 이관계획 수립

핵심 원자재 비축 업무를 조달청에서 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한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것

(33)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34) 은행의 과도한 이자수익에 대한 대책 마련

은행들이 공적책임은 도외시한 채, 금리 상승기에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고 이를 직원들의 성과급, 퇴직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5) 자료 미제출 관련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필요

기획재정부가 문서목록 중 일부를 은닉하고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법률 위반이므로 관련자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

(36) 정부 소비를 포함한 경제전망 발표 필요

기획재정부는 경제전망 발표 시, ‘정부소비’를 반드시 포함시켜 공개할 것

(37) 군 장병 처우 개선 방안 마련

군 장성들만을 위한 군 골프장 처분 등을 통한 군 장병 처우 개선 방안 마련할 것

(38) 삼성물산 흡수합병 관련 ISDS 결과 검토 자료 제공

삼성물산 흡수합병 관련 ISDS 결과는 사실상 확정된 단계이므로 관련 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 소멸시효 도과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자료를 제공할 것

(39) 채권 관리 방안 개선

채권 소멸 방지를 위해서 제재 부과 방안 등을 마련하고 미분류 채권에 대한 세부 분류 기준 등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할 것

(40) R&D 사업 관리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민간에 위탁되고 있는 R&D 사업에 대해 관리·감독할 것

(41) 경제안보공급망 관리 체계 개선

경제안보공급망이 공급망안정화법, 조달사업법,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등 다양한 곳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

(42) 편향 우려 경제교육 개선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채널 일부가 경제에 관한 편향적인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4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정부별 배분 내역 공개 검토

기획재정부는 지특회계의 지방정부별 배분 내역을 정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배분 내역 공개를 검토할 것

(44) 성인지 예산제도 강화 방안 검토

성인지예산서 작성시 성별 수혜분석 통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성평등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5) 상품권 발행·유통 관리 제도 개선

티메프-해피머니 사태가 상품권 발행·유통 관리 미흡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6) 기금평가 결과 이행 방안 마련

기금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7) 국민연금 운용 환경 개선 방안 마련

운용수익률 배점이 지나치게 낮은 국민연금에 대한 경영평가를 개선하고 외부로부터의 과도한 자료요구로 인해 국민연금 운용역의 본래 업무수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48) 예비비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당해연도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등 예비비

를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집행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

(49)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필요

긴축재정, 국가채무 억제 등이 권고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할 것

(50) 재정준칙 법제화 신중 검토 필요

물가안정 및 내수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시 투입이 필요한 만큼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은 신중할 것

(51) 지속가능성 있는 재정 운용 필요

건전재정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재정당국은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방만한 재정의 운영을 방지하는 등 지속가능성 있는 재정 운용을 할 것

(52) 양극화 완화 노력 필요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3) 예산 조기집행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예산의 조기집행 제도로 인해 지방정부의 경우 상반기에 무리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매뉴얼 제작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4)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소상공인·골목상권·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및 내수·소비진작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되, 지자체 간 형평성 저해 등 우려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55)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지방 및 수도권 중 소외된 지역에 불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이를 개선할 것

(56) 지방재원 확보 필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는 지방재정 부담 증가, 주민 복지·교육 수준 저하 및 지역경제 위축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할 것

(5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개선 필요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자체별 재원배분 정보공개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균형발전 기여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

(58) 세수결손 대응 위한 추경 편성 제도화 및 재정청문회 실시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평기금·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고 지방교부금·교부세 교부를 유보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을 희생시키는 정책이므로, 이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청문회를 국회에서 실시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할 것

(59) 세수 결손 대응 위해 탄력적 재정운용 추진

세수결손 발생 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확대 노력, 회계기금의 가용 재원 발굴, 기금 간 금융성 거래 중심 지출의 조정, 공공기관 출자 유예 등의 수단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것

(60) 세수의 주기적 재추계 및 세수추계 결과 성과평가 마련

세수를 주기적으로 재추계하고 필요시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세수추계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책임성을 제고시킬 것

(61)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위한 국가재정법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기보다 헌법에 따라 9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출 시기를 늦추는 방안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62) 누적법 기반 세수효과 발표 및 대응 추진

현재 기획재정부는 세수효과를 과소하게 보이기 위해 누적법이 아닌 순액법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누적법 기반으로 세수효과를 산출할 것

(63) 불납결손액 관리 위한 법령개선 및 제재 부과방안 마련

세수결손이 과도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채권관리법 내지 시행령을 개정하여 캠프 조기위탁 등 적극적인 채권 관리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64)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위해 100% 정부배당금 지양 및 기관별 배당성향 표시

기획재정부는 세수결손 대응 위해 일부 공공기관에 배당금을 100% 요구해 지급받았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이를 지양할 것

기관별로 각각의 배당성향을 표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65)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 파악 및 수출 증가 위한 대책 마련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관세장벽, 중국 내수 부진, 아세안 국가 수출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 영향을 파악하고, 수출 증가를 위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66) 반도체 인프라 구축 국가 책임제 검토

주변국이 반도체 인프라 구축 국가 책임제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를 검토하고,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 상향, 송전망 구축 예산편성, 전력기금부담금 감면, 반도체특별법 등 제반 이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명확화할 것

(67) 원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외환시장 불안정성 대책 마련

원화의 국제적 위상 향상을 위해 통화스왑 활용 직거래 확대, 기업의 원화 결제 유도 및 통화바스켓 편입을 추진할 것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나 자본 유출 가능성 측면에서 엔화 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

(68) 공급망 관련 용어정비 및 핵심광물·원자재 비축·이관 예산 마련 등

경제안보 품목, 비축물자, 광산물 등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핵심광물 및 원자재 비축·이관을 위한 예산을 마련할 것

핵심 원자재의 목표 재고량 달성을 위한 노력과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의존하는 비율을 다변화할 것

공급망 기본 계획이 기존 산업부가 추진해온 정책들과 차별되지 않고, 협업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개선할 것

(69)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대책 마련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책대출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70) 경제형벌 완화 과제에 대한 신중한 추진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완화 과제들 중 오염물질 불법배출, 최저임금법 위반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들도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71)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 시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 수가 늘고 있으므로 청년 고용상황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72) 공무원 임금 인상 등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공무원 실질 임금과 공무원 보수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 인건비가 사업비로 편성되어 총괄적 사용이 어려우므로 공무원 인건비 편성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3) 저출산 대책 마련

바우처 형태로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기혼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혼패널티 정책을 폐지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74)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

주거빈곤 아동 및 최소 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장애인주거시설 국비지원 및 장애인 복지 예산 반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75)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주택의 가격과 수요에 대한 인위적인 억제 정책을 지양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집중하되, 공급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한 도시정책을 수립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76)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양도세 등으로 인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수준을 점검할 것

(77) 기준금리 인하에 대비한 부동산 시장 관리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과열 및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

(78) 전세 사기 대응 방안 마련

전세 사기·사고 문제 대응 및 양질의 임대주택, 임대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업형 임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전세 사기 대응을 위해 LH가 우선 매입하고, 실제 매각 시 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임차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 도입을 검토할 것

(79) 착한임대인 제도의 보완책 마련

착한임대인 제도를 악용하여 실질적으로 임대료나 관리비를 올리는 등

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8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관세청, 국세청 등 출신의 재취업 승인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직무 관련성·전문성이 부족한 자에 대한 공공기관 임원 등 인사가 이루어지는 등 이를 통제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은 관련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할 것

(81) 공공기관 인력 관리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인력 관리 및 개혁이 필요하며,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할 것

(82) 공공기관 일자리 감축 정책의 문제점 개선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청년, 장애인, 지역 인재 등이 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지난 정부에서 감소하였던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감축된 정원이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되고 있으므로 개선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기관 실정에 맞지 않게 일률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

(83) 한전 KDN 무기계약직 근로자 처우 개선

한전 KDN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84) 공공기관 채용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은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에 대한 상세계획, 인사감사 등의 자료를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 임원 임명 관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인사 관련 회의록 및 결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후보자별 통과 사유 및 미통과 후보자별 결격사유를 제출할 것

(85)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우며, 정권에 따라 평가지표 변경 및 공공기관의 자산매각에 대한 기관평가 반영에 따른 험값 자산 매각 등 문제가 있으므로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며,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 평가업무를 주무부처로 이양하고 기획재정부는 최종 결과만 검토하는 방안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것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고용노동부의 자회사 운영실태평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이행 여부가 반영되도록 배점 부여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86) 공공기관의 개혁 및 혁신 방안 마련

공공기관에 대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개혁 및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현행 경영평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에 대한 추가 개선노력을 할 것

업무 전문성 등을 이유로 여러 기관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소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 내 유사 업무 수행부서와의 업무 중복, 관리기관의 위탁수주 형태로의 운영 등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기관 신설을 지양하고 기

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

(87) 공공기관의 개혁 및 혁신 방안 마련

공공기관에 대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개혁

(88)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임용결격사유 등 법률 규정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용 결격사유만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직원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 외에는 임용결격사유가 내부규정으로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결격사유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및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대상을 법률로 규정할 것

(89) 공공기관의 근무기강 확립 및 방만 경영 개선

공공기관의 겸직근무 위반, 근태 문제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으므로 법령 개정 등 점점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노조 조직률이 민간에 비해 높으며, 타임오프제도 시행에 대해서도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사내대출, 과도한 복리후생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의 특혜를 폐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호화사택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전 공공기관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

(90)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준수하도록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현실화

정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이 개별 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인 틀로 작동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을 현실화할 것

(91) 한국전력공사 재무상황 개선 노력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가격 산정 시 적정한 원가 소요를 반영하는 노력을 통해 재무상황을 개선할 것

(92) 기후대응기금 지출사업 개편

기후대응기금 지출사업을 탄소감축 효과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개편할 것

(93) 온실가스배출권 수입 확대방안 마련

온실가스배출권 가격 정상화, 유상할당 비율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의 주 수입원인 온실가스배출권 수입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94) 온실가스감축 인지에산 작성 대상사업 확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정량적으로 측정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인지에산 작성 대상사업을 확대할 것

(95)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산업 관련 지원 확대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수소환원제철 등 수소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예산 및 금융지원 확대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96) 기획재정부의 조직구조 개선 방안 마련

재정당국의 낙관적인 세수추계가 반복되고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으며, 기획보다 재정이 우선시되고 있고, 예산·세제 등 모든 기능이 기획재정부 내 집중되어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있는 조직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97) 성인지예산 활용 인력 및 가이드라인 마련

성인지예산 및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것

나. 세제부문

(1) 세수 추계 및 세수 결손 대응 관련 제도 개선

세수오차 및 세입결손 발생 시 구체적 대응방안을 국회에 사전보고 및 협의하는 한편, 감사원의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세수결손 관련 재정청문회를 국회에서 실시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할 것

세법 개정안 제출 시의 세부담 귀착효과를 상세하게 작성할 것

정부가 자율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세수추계치를 확정적인 수치로 보고하기 보다는 범위를 두어 보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세수 결손의 원인은 세수추계 모형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추계된 경제성장률과 같은 부정확한 경제전망에 기인함. 세수 추계기관을 재정 당국과 분리·독립시키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경기침체, 감세정책, 예측모델 오류 등으로 발생한 세수결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2025년도에 40% 가량 증가하는 법인세수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하반기 주요 경제 전망치등을 검토하여 2025년 세입조정을 검토하고, 세수결손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세외수입 체납액등을 활용한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세입의 오차 최소화 및 추경편성을 통한 세출 조정을 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며, 신규 국세감면에 대한 예타제도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

4년 연속 세수추계에 실패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책임성을 제고할 것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거시경제 지표와 자산시장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2025년 세수 재추계 필요

기업의 2024년 하반기 영업실적 둔화로 2025년 법인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동산 거래 둔화로 양도소득세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둔화로 인한 민간 소비 감소로 부가가치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등 경제지표 전망이 상당 부분 낙관적인 측면이 있어 당초 추계한 것에 비해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2025년 세입예산을 재추계할 것

(3) 세수 결손 대응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적인 협의 필요

악화되는 지방경기를 고려한 지방재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세수세수결손에 따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교부재원 미교부시 지방자치단체들과 사전에 협의 할 것

(4) 연례적인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으로 관련 세금 정책 개편 필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자산세수가 감소하는 실태는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세금 관련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며, 감세정책등은 경제의 동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의성 있는 세제정책의 운용을 검토할 것

(5)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해 신규 세원 확보 필요

레저용 고급 요트 대상 사치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 또는 고급의류 대상

무게 단위를 활용한 고급 의류 대상 과세 등 신규 세원의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

(6) 세입 관련 통계 작성 개선

한국의 GDP 대비 세입이 선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통계는 중앙정부 수입만 반영된 결과이므로 관련된 정확한 통계를 생성·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7) 서민·중산층 세부담 귀착 효과 분석 시 중위소득 활용

정확한 서민·중산층 세부담 귀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중위소득 활용을 검토할 것

(8) 교부세·교부금이 축소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교부방안 마련

세수결손과 관련해 교부세·교부금이 축소되고 있는데 지자체의 민생 또는 안전 관련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세수가 추가적으로 확보될 경우 일부 추가 교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

(9) 세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의 구조적 개선 필요

세수결손 문제와 관련하여 단기적인 추계모형 개선과 같은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소수 업종, 소수 기업이 국가 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산업구조를 개선하여 세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10)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필요

2024년 세수재추계 결과 당초 전망 367.3조원보다 29.6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규모 세수부족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에 해당되므로 세수결손에 대해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기보다는 세

입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11)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관련 방안 마련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추가소비 특별공제 등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2) 감세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검토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고려 필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원인 중 하나가 성급한 감세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감세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검토할 것

지속적인 감세 정책은 의무지출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정 기반을 붕괴시키므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검토할 것

고령화에 따라 미래에 사회지출 증가가 예상되며, 일본 및 독일 등 고령화 국가는 사회지출 증가에 대비하여 증세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소득·자산의 양극화와 지방소멸 등으로 인해 미래에 추가적인 재정지출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세정책은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감세정책을 재검토할 것

(13)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최근 10년간 세계 주요국의 조세정책은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을 낮추거나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는데, 최근 국민 조세부담률이 늘고 주요 세목의 세율이 높아졌으며, 감세를 통해 GDP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주요 세목의 세율을 낮추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 종업원 할인 금액 과세 지양 필요

전체 세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종업원 할인 금액을 과세하는 것은 직장인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실질적인 증세이므로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감면 논의 등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확대 적용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각종 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업한 자영업자들에 제도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지 양도소득세 경감 방안 마련 필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원거주민들이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경감방안을 마련할 것

(17)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폐지 필요

외국인에 대한 조세특례인 외국인 근로자 특례는 외국인 기술자 특례에 비해 요건이 느슨하고, 혜택도 파격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외국사용자 과세특례를 폐지하고, 외국인 기술자 과세특례로 통합하되,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정의를 재정비 할 것

(18)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국내주식시장에서 해외주식시장 또는 부동산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주식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하여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부동산 사모펀드가 과세완화 혜택을 받고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상장사의 밸류업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19)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의 동시 추진에 대한 재검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0조 1,22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추진되어 세수감소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므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의 동시 추진을 재검토할 것

(20)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보완 필요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실질적 참여율이 2.1%로 저조하고, 임대료를 인하하면서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2023년에 추정액이 12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책효과를 높이고 참여율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며,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것

(21)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자료 확보 필요

가상자산 과세는 국회 차원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인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가상자산을 투명하게 관리되는 양지의 자산으로 전환시키고, 법인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출받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

(22) 중증환자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필요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가 소득공제 대상의 중요지침이 되고 있으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의사 또는 병원마다 다르므로, 이에 대해 기재부와 국세청이 구체적인 관련지침을 만들 것

(23) 법인세 감세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되어 법인세 실적이 2023년 80.4조원으로 2022년 103.6조원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설비투자 지수는 107.5로 2022년 113 대비 감소하였고,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은 2022년 대비 17.2조원 증가하여 법인세 감세의 경제활성화 및 낙수효과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데, 감세정책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법인세 감세 정책에 대해 재검토할 것

(24) 주주환원 촉진세제 관련 제도개선

자발적으로 고배당을 지속해온 기업에 대해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재설계를 검토할 것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안의 내용과 도입취지에 대한 질의 및 주주환원을 잘 해왔던 우량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검토할 것

(25)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한 과세방안 등 검토 필요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구축 및 과세근거자료 제출 의무화 법안마련 등에 대해 검토할 것

(26)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보완 필요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소수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취지와 달리 국내 설비투자 및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과도한 해외 투자로 이어져 국내 투자기반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보완을 검토할 것

(27) 반도체 산업 법인세 감면 등 검토 필요

반도체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국가적 지원을 검토할 것

(28)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필요

기업의 활력을 도모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킬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29)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필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장비 및 토지·건축물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미국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기한이 20년이고 영국과 독일은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기한이 무제한인 점을 참고하여 세액공제액 이월공제를 현행 10년에서 연장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30)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필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고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우리나라에 비해 더 큰 수준이므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율을 10%p 상향하고, 반도체 및 배터리 등 주요산업의 초기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세액공제액에 대한 환급 제도를 신설하거나 세액공제액을 기업 간 양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1)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필요

미국은 AI 기술인력을 유입시키려 노력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0.3명의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것

(32) 민간위탁 R&D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민간위탁 R&D사업의 관리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 공유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33) AI 산출물에 대한 과세전략 방안 검토 필요

AI기술 발전과 디지털 창작물 형태의 다변화로 세제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AI 산출물에 대한 과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TF 구성 및 AI기본법 제정 등을 검토할 것

(34) 톤세제 개선 필요

톤세제는 법인세를 감면시키는 효과가 있고, 기업의 환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톤세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주요국들이 톤세제를 영구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톤세제를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5) 수소경제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과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있는데, 수소는 전략적인 에너지 저장수단으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반면 최근 5년간 수소 R&D 및 비R&D 지원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수소경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6) 비수도권 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받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액 비율의 차이는 2021년 34.2%에서 2023년 55.4%로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이 R&D 및 시설에 투자할 때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지역별로 법인세율을 차등적용하여 비수도권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7) 기업의 디지털 인재양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필요

기업들이 자체 예산을 사용하는 SW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대기업 포함)에 대해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신규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장 운영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38) e스포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필요

게임산업은 콘텐츠 산업 전체 수출액 중 67.8%를 차지하는 반면, 국내 e스포츠 산업규모는 1.1억 달러로 국제 e스포츠 시장규모인 14.2억 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므로, e스포츠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9) 공익법인 제도 활성화 필요

공익법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기업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증여한도를 완화하며, 공익법인이 다양한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공익법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40) 개별소비세 관련 제도 개선

담배소비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전환 비율의 일몰연장에 대한 검토할 것

서민연료로 불리우는 등유가 도시가스에 비해 개별소비세율이 높아 소득역진성을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위해 등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할 것

(41)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인하 신중 검토 필요

신용카드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정책이 서민 소상공인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검토할 것

(42) 가향탁주의 분류 변경에 대한 재검토 필요

가향탁주를 기타 주류에서 탁주로 분류하는 정책은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고, 일부의 제조장만 찬성하고 다수의 제조장이 반대하고 있으며, 막걸리를 우리나라 대표 전통주로 육성하려는 정책 취지에 반하여 막걸리 관련 특허를 위협할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

(43) 주세 제도 관련 제도 개선

주세제도의 종가세 유지로 인한 국내 전통주의 고급화등을 막고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주세 체계를 재검토할 것

(44) 반려동물세 논의 필요

양육자 책임강화 및 동물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목적세로서의 반려동물세 도입 검토 할 것

(45) 교통에너지 환경세 관련 제도 개선

8차 연장을 통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운용은 법적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등이 있으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 시점 및 추후 운영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4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관련 조세체계의 정비 검토 필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폐지 법률의 시행일을 계속 연장하고 있으므로, 동 세제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해 조세체계를 다시 정비하거나 폐지 법률의 폐지를 검토할 것

(47) 대중형 골프장의 이용우선권 구매자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타당성 검토 필요

대중형 골프장에서 이용우선권을 판매하는 것은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준 본래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용우선권을 구매한 이용자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48) 종합부동산세 폐지 시 세수감소 등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경우, 지방 세입이 감소하여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세수결손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경우 세수결손을 메울 대안을 마련할 것

(49)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상속세제등의 개편 필요

기업가치를 높여 자본시장의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상속세, 배당세, 소득세, 금투세 등에 대한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

(50)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유산취득세 체계에 따라 각각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며,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체계도 통일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현재 상속세를 운용 중인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할 것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시 자산소득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개선할 것

(51) 가업상속공제 제도 관련 제도 개선

가업상속공제는 부의 세습과 집중에 기여하고 경제적 균등을 저해할 수 있고,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이 있었으며,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성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부자감세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제도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가업상속 공제요건에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을 포함시키는 방안 고려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2)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 확대 필요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는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배우자 상속 후 자녀 상속 시 발생하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3)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검토 필요

최대주주 할증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이고, 최대주주 할증제도로 상속세 규모가 증가하여 기업의 지분을 블록딜로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현실적으로 작동이 어려우며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는 경영권 매각 시 양도차익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

(54) 상증세 부담 완화 필요

우리나라는 GDP 대비 상증세 비율이 높고, 전체 세수에서 상증세 비율이 큰 상황이며, 상속세 완화를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실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 자산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상속세 과세 대상 및 징수액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세율 인하, 자녀공제액 확대, 과세표준 조정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5) 상속세 인하에 대한 재검토 필요

상속증여세 개편으로 인해 누적법 기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18.6조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고, 상속공제 규모가 확대되어 면세율이 높아질 경우 피상속인의 미실현 양도차익 비과세 문제가 발생하며, 상속세는 인하로 부자 위주의 감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상속세 인하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56) 가업상속공제 제도 보완 및 개편 필요

가업상속공제는 기업과 기업인들이 큰 혜택인 점을 고려하여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 대상 기업·조건·기간 등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독일의 사례와 같이 기업자산의 일정비율을 동원해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세금을 면제하는 등의 세감면 필요성 심사를 도입하는 방안,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사유에 갑질 등 노동관계법 위반과 기술탈취 등 공정거래법 관련 범죄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가업상속지원방식을 공제가 아니라 10% 내외의 저율의 분리과세로 개편하여 가업상속을 받으려는 기업인이 소액이라도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7) 가업상속공제제도 정비

우리나라의 경제환경 특성 및 사회이동성을 고려하여 기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확대를 재검토하고, 베이커리 카페 및 강남의 꼬마빌딩을 활용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허점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할 것

(58) 부정무신고가산세 상황

해외에서의 편법적인 증여·상속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무신고가산세의 상향을 위한 입법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59) 관세 관련 제도 개선

할당관세가 실제 물가 하락에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할당관세 제도의 실효성 등을 재검토할 것

미국이 중국산 부품을 활용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또는 배터리 산업업체 대상 추가적 관세 부과 및 보복 무역을 행할 수 있으므로 기 운영 중인 TF와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할 것

(60) 국제조세 관련 제도 개선

해외 가상자산의 자발적인 신고의무는 성실신고여부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완화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

IT기업들의 해외 자회사등으로 매출을 이전하는 경우 세원이 축소 될 수 있으므로 디지털세 도입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

(61) 조세지출 관련 제도 개선

최근 지속적으로 국세감면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조세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별세법에 있는 조세감면 항목 수 380개 중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조세감면 항목 수가 69개에 불과하고, 개별세법 69개에서 발생한 조세지출이 34조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세법상 조세감면에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고소득자에 귀착되는 조세지출이 2021년 10.4조원에서 2025년 16.6조원으로 5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 조세지출 귀착 비중이 2021년 10.9%에서 2025년 17.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소득 및 대기업 중심의 세법개정을 지양하고 중·저소득층 및 중소기업에 귀착되는 혜택을 늘려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세지출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요불급한 항목의 폐지 및 개별세법 감면조항들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반영하며, 조세지출의 총량적 관점에서 기후영향평가가 필요하므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조세지출 제도를 도입을 검토할 것

(62) 조세특례 일몰 관련 제도 개선

조세특례 일몰의무제 도입등 조세특례 일몰제도와 관련해 전면적 개편 방안을 모색할 것

(63) 국내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국내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해외 법인을 대거 설립하고 있어 국내대기업의 해외자회사는 '23년 기준 총 137개이고, 지난 2년 반 동안 주요 조세피난처 송금액이 약 25조인 상황이므로,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해외자회사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할 것

(64)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 대응방안 마련 필요

구글은 연간 국내 매출액이 12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나 2023년에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저조한 수준으로 글로벌 빅테크의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충분하게 과세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의 구체적인 매출 현황과 용역의 중

류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것

(65) 온실가스감축인지 조세지출 제도 강화 필요

기후변화오 온실가스 감축 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세지출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조세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6)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 추진 필요

세외수입 미납액 및 불납결손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세외수입 연체액 규모를 파악하고 장기·고액 체납자 재산·소득 정보조회권 강화 등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67) 세입예산 확대를 위한 세외수입 확대에 대한 재검토

내년도 세입예산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재검토할 것

(68) 군납 면세제도 운영에 대한 점검 필요

군마트(PX) 매출 상위 10개 물품이 모두 술, 화장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품별 면세한도량이 군인복지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등 군납 면세제도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

(69) 국세 관련 통계자료 관리 강화 필요

국세청은 세목별 불복환급 현황과 수납유형별·체납규모별 체납액 현금 정리 현황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세 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관리가 부실한 상황이므로 국세 통계자료 국세 통계 관련 기구를 신설하거나 현재 국세청 산하 국세통계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70) 국세 납부 관련 제도 개선

영세자영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의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 설계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견제 장치가 부재한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결정문 공개할 것

(71) 국회 제출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필요

국정감사 및 인사 청문회시 국회에 제공하는 과세정보 제공범위를 확대 할 수 있도록 증감법을 개정하는 등 그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

(72) 관세청 관련 제도 개선

가상자산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관세청이 관련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관세청의 밀수단속 업무에 대한 기재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2. 국세청(서울·충부·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 포함)

(1) 납세자 권익구제 제도 개선 필요

국세행정 상의 오류로 인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률이 매년 90%를 상회하고 있고 조사권 남용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대로 무분별한 과세권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세무조사 중 납세자 금융거래 정보 일괄조회 및 디지털포렌식의 실시건수가 높으므로 무분별한 계좌추적 등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일용직·특고 대상 소득자료 제출 절차와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것

세무조사 운용방향과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을 공개할 것

(2) 조세탈루 방지를 위한 조사 및 적극적 조치 필요

비자금, 비거주자제도 및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부동산 및 주식 매수, 성실신고 의무 미이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한 조세탈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3) 글로벌기업 등의 조세회피 관련 대안 마련 필요

글로벌기업의 조세회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강화, 자료요구권 신설, 자료제출 거부 시 미제출 자료의 증거능력 불인정, 이행강제금·형사처벌 등 제재수단 도입, 조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입법화,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권고하는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신고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검토 등 대안을 마련할 것

(4) 역외탈세 대응 강화 필요

최근 5년간 역외탈세 규모가 고정되어 있고 징수세액 규모도 매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역외탈세를 조사하는 인력을 확대할 것

최근 역외탈세 대응활동 관련 예산이 크게 감소하였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점증하는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의 효과성 제고,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 증액 등의 방안을 재검토할 것

(5) 가상자산 강제 집행 관련 제도 개선

가상자산 강제집행을 위한 창구를 일원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가상자산 지갑 보관업자를 통해 공매 절차 진행 등 가상자산 압류 및 매각 전반의 과정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6) 세수 관련 제도 개선

세수추계참여 기관으로서 기재부에 현장상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미납된 체납액을 징수하여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7) 영세자영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활용 제고 필요

영세자영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의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요건 완화, 분납기한 추가 연장 등 영세개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8) 비수도권 지역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인력 확보 필요

비수도권 및 고령층 대상 대면 세금신고 지원이 시급하므로,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인력을 지방 고령화 지역에 재배치할 것

(9) 거짓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활용한 세금 탈루행위 근절 대책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같은 불법행위 협조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리를 강화할 것

(10)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주거용 부동산 중 거래금액 5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적정한 감정평가 없이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 보완할 것

시가 형성이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되어 실질에 맞지 않게 과세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1) 중고거래 관련 매출파악 시스템 정비

중고거래에 대한 소득세 부과시 소액거래하는 일반시민에게 세금폭탄 안 내가 가지 않도록 정확한 매출 파악 시스템을 정비할 것

(12) 홈택스,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등 개선 정비

홈택스 서버 증설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IP를 차단하는 등 과세행정 수요를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월 개통한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은 기관별 양식 및 표기방식 차이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정상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13) 세무대리 플랫폼 활성화에 따른 대책 마련

세무대리 플랫폼 활성화로 납세자들의 세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홈택스 과부하 및 세무직원 업무량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 원스톱 세액공제시스템 구축

월세세액공제 신청이 저조한 문제를 해소하기 세액공제 대상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원스톱 세액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

(15) 세무플랫폼 허위과장광고 관련 조사 필요

세무플랫폼의 허위과장광고, 개인정보유출, 과다환급등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국세청은 이를 인지하고 있으므로 관련해서 조사의뢰 및 정기적인 간담회등을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

(16) 아프리카TV BJ의 후원금에 대한 과세 등 대책마련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프리카TV BJ의 개인계좌로 받는 후원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7)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방안 검토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가 미흡하므로, 정확한 수수료 신고를 위해 과세근거자료 제출 의무화 법안 및 법인세 부과방안 등을 검토할 것

(18) 에어비앤비 숙박제공자의 숙박영업 등록 검토

에어비앤비에서 숙박제공자로 활동하는 사람의 39%가 불법영업 중이므로, 숙박영업 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영업을 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19) 편법증여에 대한 소급과세 및 편법증여 방지대책 마련

특정법인을 통한 우회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과세예정인데, 국세청 출신 컨설팅업체가 올해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가업승계가 가능하다는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편법증여에 대한 소급과세의 필요성 검토 및 편법증여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특정 기업의 승계 관련 합병 이익의 증여가 특수관계자에게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있으므로,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검토할 것

(20) 미성년자 불법·편법 증여 관련 자료 정리 필요

미성년자 불법·편법 증여 추세 현황과 어떤 형식으로 불법·편법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할 것

(21)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상 소송 대응역량 확대를 위한 시스템 마련

글로벌 빅테크 기업 등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이 높는데, 이는 국세청의 소송 대응역량이 부족함에 기인하므로 전문 변호사 인력 확충 등 체계적인 소송 대응시스템을 마련할 것

(22) 소송 대응역량 확대를 위한 시스템 마련

승소장려금 인상, 승진 혜택 부여, 연봉상한 폐지 등 조세소송의 승소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

(23) 세무조사 기준 정비

납세자의 성실도, 미조사기간 등과 관계없는 무작위추출방식 세무조사는 실적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성·공정성을 갖춘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게 기준을 정비할 것

(24) 투기성 주택보유 외국인의 취득 등 세무조사 실시

투기성 주택보유 외국인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친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

(25)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출처에 대해 국세청이 엄정하게 조사할 것

(26) 중증환자의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가 소득공제 대상의 중요지침이 되고 있으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의사 또는 병원마다 다르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할 것

(27) 현장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국세공무원이 수집한 현장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했으나, 1.2%의 현장정보만 실제 추징에 활용되고 관련 성과격려금이나 인센티브도 저조한 실정이므로, 활용도 면에서의 개선 및 적극적 인센티브 부여 등 검토할 것

(28) 국정조사 등과 관련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등 검토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정조사 등과 관련된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의 강행규정화 및 국회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29)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 세액공제 관련 산출기준 등 마련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출기준 등을 마련할 것

(30)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및 우대혜택 재검토 필요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혜택을 악용하여 탈세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므로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또는 우대혜택에 대해 재검토할 것

(31) 먹튀 주유소 세금 징수를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등 제도 개선 필요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하고 탈세한 뒤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의 세금 징수율이 0.7%에 불과하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등 제도를 개선할 것

(32)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세금 납부의무 면제 관련 제도 개선 필요

고액·상습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지난 5년간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징세권한이 사라진 체납세금 규모가 총 8조 8,403억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3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개선 필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명단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납자의 나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체납자 식별 및 심리적 압박효과 제고를 위하여 법령개정을 통해 생년월일을 공개하도록 할 것

(34)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내 법인 설립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내 법인 설립 증가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35)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에 티몬·위메프사태 피해사업자 외 유사 피해업체 추가 필요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에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겪은 사업자 외에 알렛츠 등 유사 사태로 인한 피해업체를 추가할 것

(36)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과세정보 수집의 경우 사후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개정 필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과세정보 수집의 경우 사후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감사원 사전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국세기본법」을 개정할 것

(37) 과세정보 적극적 공개 필요

사후동의를 전제로 정보를 제공하는 현행 제도로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과세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38) 웨딩업체 탈세행태 근절을 위한 노력 및 세정지원 방안 검토 필요

웨딩업체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및 축소신고를 통한 탈세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전수조사 수행, 엄격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력을 기울이고, 이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웨딩업체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

(39)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초과납부 원천징수세액 자동환급 시스템 구

축 및 원천징수세율 인하 필요

영세 인적용역사업자가 초과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세무 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국세청이 직접 초과징수금을 환급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할 것

(40)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일괄납부제 재도입 필요

2020년부터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는데, 시스템 분리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커지고 있으므로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납부하던 이전 시스템으로 회귀할 것

(41) SNS 플랫폼 등을 활용한 조세탈루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거래형태가 등장하면서 개인 간 거래를 가장한 조세탈루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2) 비상장주식 물납 관리 철저

비상장주식 물납의 경우 사전에 평가를 면밀히 하고, 물납 허가 시 경영 실적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관리를 철저히 할 것

(43)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기준 금액 완화 필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기준금액을 완화할 것

(44) 지방 창업기업 확인제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 환수 필요

지방 창업기업 확인제를 악용한 탈세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수검

증을 통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을 환수할 것

(4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

창업중소기업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악용한 조세탈루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수조사 등 제도를 정비할 것

(46) 세금포인트 현금화 등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세금포인트 사용비율이 0.59% 정도밖에 안되므로 세금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47) 주택임대사업자 탈세 근절을 위해 수입금액 검증인원 확대 필요

매년 3,000명의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하고 있는데, 세금 탈루로 적발되어 추징된 인원 비율이 평균 85%에 달하므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탈루 근절을 위하여 검증인원을 확대할 것

(48) 부정 무신고 가산세 조항을 해외자산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가 어려우므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0%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조항을 해외자산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9) 조세특례 관련 집행 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

조세특례는 국가의 재원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조세특례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의거하여 집행할 것

(50)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선제적 조치 필요

불법사금융 신고는 매년 10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세무조사 착수율은 1%대에 그치는 실정으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

(51) 세무조사 유예 법적근거 마련 필요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도는 법률적 근거를 우선적으로 마련한 후 추진할 것

(52) 금융회사의 주식 보유 및 거래 현황 제출 제도 유지 필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세를 위해 주식 등 보유 및 거래 현황을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

(53) 공익법인 관리 강화 필요

직원 1인당 관리해야 하는 공익법인이 500개 이상이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공익법인이 기업집단 보호 및 편법적인 승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대규모 공익집단에 대해 점검할 것

(54)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제도 강화 필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출국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동일인의 출국금지 반복 해제 횟수 등을 관리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있으므로 관리를 강화할 것

(55) 체납 전담조직 등 비선호부서 인센티브 부여 필요

체납 전담조직 등 비선호부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

(56) 청년인턴 제도 개선책 마련 필요

청년인턴 경험을 통해 직무경험을 축적하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57) 가업승계 납부유예제도 개선 필요

가업승계 납부유예 제도 시행 이후 2년간 신청기업이 1건에 불과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전락하였으므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 및 연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것

(58) 배달업계 관련 일관된 사업자 등록지침 마련 필요

배달 대행업체는 늘찬 배달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데 배달 라이더가 이용하는 업종코드로 등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관된 사업자 등록지침을 마련할 것

(59) 골프장 캐디 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검토 필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된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골프장 캐디 피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검토할 것

(60)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대응 강화 필요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 혐의에 대하여 국세행정 신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61)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검토 필요

탈세 제보 등을 통해 징수한 세액규모가 큰 반면 포상금 지급액 비율이 저조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를 검토할 것

(62) CARF 체계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증원 필요

2027년부터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체계에 따라

48개국과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국세청 전담인력은 5명에 불과하여 가상자산 정보 처리가 가능할지 우려되므로 전담인력 증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

(63)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의무화 및 수수료 공제 검토 필요

일정 금액 이상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무화하되 평가수수료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4) 근로장려금 담당 직원 감축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 필요

근로장려금 수급가구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담당 직원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행정안전부에서 담당 직원 감축을 논의 중이므로 직원 감축이 없도록 잘 대응할 것

(65)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고소득 유튜버 포함 필요

고소득 유튜버를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포함하여 세원 관리를 강화할 것

**(66)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을 체결한 군부대에 대한 지도 및 조사 수행 필요**

사업장폐기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처리용역 계약 시 발주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 군부대에 대한 지도 및 조사를 수행할 것

**(67)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제도
보완 필요**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거주하다가 자가를 구매하는 경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

제를 해결하고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요건 적용대상을 현행 세대주에서 부부합산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것

(68)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회공헌활동에 기부할 필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의무화를 권고하였으므로 소멸 예정인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회공헌활동에 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69) 탈세 제보 접수 사안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책 마련 필요

국민 탈세제보 중 국세청이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하는 사안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담당인력 1인당 처리건수가 무려 146건에 달하며 탈세제보 처리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력 충원, 업무체계 점검 등 자구책을 마련할 것

(70)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사후관리 강화

컨설팅 업체를 통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탈루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인력을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71) 알머스기업 세무조사 특혜 의혹에 대한 조치 필요

‘알머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본사가 아닌 연구시설에 대해 착수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특혜를 준 것이라면 관계 직원자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물을 것

(72)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매입세액공제 적용 관련 개선방안 마련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

부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자가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3)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폐지

편법적인 증여 상담으로 전락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폐지할 것

(74)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서 공개

국세청의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서를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공개가능 여부 검토할 것

(75)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및 환수 민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신설로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환수에 따른 대량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6) 납세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방식 개선

납세자의 개인 정보보호 측면에서 납세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일괄조회 방식을 지양하고 개별조회 방식을 원칙으로 할 것

(77) ‘폴리바게닝’ 철저 관리 필요

세무조사 시 ‘폴리바게닝’ 사례를 전수조사 후, 사실인 경우 청장 및 관계자의 사퇴 및 위증죄로 처벌할 것

(78) 고위공무원단 승진 시 퇴직 후 불로소득 포기 서약 필요

퇴직 후 로펌 등에 취직하여 불로소득을 비호하는 업무를 하지 않도록

고위공무원단 승진 시 퇴직 후의 불로소득 포기 서약을 받을 것

(79) 모범납세자 포상제도 혜택 변경 필요

모범납세자 포상제도 혜택 중 세무조사 관련 우대 혜택을 삭제하고 명예 위주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80) 이해충돌방지 시스템 강화 필요

이해충돌 방지 대상에 국세청 고위직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소유 법인을 포함할 것

(81) 국세청 공무원의 범죄율 및 비위 발생률 감소 방안 마련 필요

매년 국세청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공직문화를 세워 국세청 공무원의 범죄율과 비위 발생률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것

(82) 역외탈세 및 조세불복 증가에 대응하여 소송 전문성 강화 등 필요

지능범죄 등 고도화된 탈세 증가에 대한 기술적·행정적 대비가 필요하고 고액 조세불복 소송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법률 전문성을 강화할 것

(83) 국세청 콜센터 상담사 처우 개선 필요

콜센터 상담사들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와 민간위탁 사무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상담사 임금 인상 등을 검토할 것

(84)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직원 복귀

국세청 직원을 감사업무 지원이라는 사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파견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감사를 통한 방송장악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직원을 복귀시킬 것

(85)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의 위원직 공개행위에 대한 점검 및 관리 필요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이 위원직 수행 여부를 외부에 알리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 및 관리를 할 것

(86) 국세청 홍보대사 선임 관련 개선방안 마련 필요

톱스타 연예인의 무보수 홍보대사 위촉은 권력기관의 갑질로 보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7) 국세청 공무원 비위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국세청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비위 근절을 위해 국세청 본청 자체 감사 실시, 감사결과 공개, 개방형 감사 직위 마련 등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8) 국세청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한 교육 등 개선책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국세청 내 성비위로 인한 징계건수가 26건에 달하고 파면을 받은 사례도 있으므로 성비위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개선노력을 강화할 것

(89) 세무조사 성과평가 방식 변경 필요

현행 세무조사 성과평가는 100% 정성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비율을 적절하게 조합한 평가방식으로 변경할 것

(90) 인사 조직 관련 제도 개선

국세청 고액 소송 패소율 해소 등을 위해 송무 담당변호사의 처우를 개선 할 것

국세청 내 사적이해신고가 강화되었으나 직무재배정 조치비율이 낮은 수준이고, 국세청장의 이해충돌등의 논란이 있으므로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국세청의 고시/남성 편중 인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사무관 승진임용 내정증서 수여식’은 국세청장 명의로 사무관 임명장을 제작·수여하는 등 현행법과 규정에 어긋나고, 소수를 위한 행사이므로 폐지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

경제부처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할 것

(91) 청사 운영 관련 제도 개선

전국 임차청사 27곳에 높은 수준의 임차료를 지출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임차청사를 줄여나가고 이른 시일내에 청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환경을 구축할 것

양주세무서 설치에 대해 검토할 것

(92) 근로장려금 사각지대 발굴 노력 필요 (서울지방국세청)

서울 지역 안내가구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는데 장려금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93)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 (인천지방국세청)

인천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세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함께 노력할 것

(94) 납세인원 급증에 따른 조직 확대 검토 필요 (인천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직원 1인당 납세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으므로 직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직 확대를 검토할 것

(95) 인천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 위한 세정지원 필요 (인천지방국세청)

인천의 벤처기업 성장률이 높은 수준이고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저오디어 산업을 육성 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성장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96) 세무조사 참관제도 실적 개선 필요 (충부지방국세청)

충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참관제도’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

(97)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필요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충청지역의 개인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폐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탄력적인 세금 부과·징수 방안을 마련할 것

(98) 과세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의 엄밀한 적용 필요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의 과오납 환급액은 6,800억원대에 달하고 불복 환급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액 부과 시 세법 등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피고 적용할 것

(99) 미수령 환급금 축소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대전지방국세청)

미수령환급금은 5년 경과 시 국고로 귀속되므로 대상자가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100)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액 관리 필요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액이 2022년 1,408억원에서 2023년 2,153억원으로 50% 정도 증가하였고 다른 지방청들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액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할 것

(101) 체납액 및 심판청구 불복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대전지방국세청)

체납액 및 심판청구 불복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징세기관으로서 만전을 기할 것

(102)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효과성 제고 필요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인력 확충, 홍보 강화 및 세무상담 시 기록을 관리할 것

(103)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및 스포츠강사 소득자료 제출 의무화 관련 홍보 강화 및 신고방법 안내 필요 (대전지방국세청)

실시간 소득과약 제도 대상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및 스포츠강사가 포함되어 소득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나, 홍보 부족 등에 따라 자료 제출을 누

락하여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업자 수가 3,000명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방법을 안내할 것

(104)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비율은 78%로 전국 평균인 97% 대비 저조하므로 자동신청 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105)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필요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의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 직원들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실적, 탈세제보 보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106) 다단계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세정지원방안 강구 필요 (대전지방국세청)

이자소득세 신고 납기 연장 또는 법적 절차 유예 등 다단계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세정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107) 납세자 지원 관련 제도 개선 (부산지방국세청)

경제적 능력이 크지 않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상환 체납액에 대한 지원 형태의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지방국세청 중 부산국세청이 국세 파오납환급금이 높은 수준이며 그 중 불복환급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과세행정의 품질 제고 필요 및 부산청의 미수령 환급금을 국민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노인세금교실 및 세금교육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하

며, 세금불복시 국선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108) 인사 조직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부산지방국세청)

비연고 직원들에 대한 임차료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할 것

통영지역의 세무행정 수요를 고려하여 조사과를 신설하고, 창원중부산세무서에 대한 착공지연으로 인해 세금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착공할 것

(109) 부산 지역내 탈세·탈루 관리 감독 강화 필요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지역의 부동산 탈세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

(110) 상속·증여 조사 시 일괄조회 제도의 엄격한 활용 필요 (부산지방국세청)

상속·증여 조사 시 일괄조회를 지양하고 전체 재산 내역과 관련하여 불요 불급한 자료는 즉각적으로 파기할 것

(111) 영세 납세자 대상 세정 지원활동 강화 필요 (부산지방국세청)

부울경 지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중소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부산지방국세청 관할 구역 내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112) 서민상대 폭리 수취자 등 민생침해탈세자 근절 대책 마련 필요 (부산지방국세청)

국고계좌 출납 담당자 등의 횡령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며, 서민 상대 폭리 수취자 등 민생침해탈세자 근절 관련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력 등 대응책을 마련할 것

(113) 특별재난지역 납세유예제도 홍보 강화 필요 (부산지방국세청)

호우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납세 유예 및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114) ㈜타이거월드 관련 과세처분 오류 시정 필요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은 ㈜타이거월드를 대상으로 과세처분의 오류를 시정할 것

(115)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징수유예 및 납부유예 제도 홍보 필요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징수 유예 및 납부유예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116) 세무조사 관련 제도 개선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관련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 통계를 각각 작성하여, 조사대상 선정 과정을 관리·개선하고,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기조사 선정할 것

(117) 인사 조직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내 낮은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등을 고려하여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MZ세대 대상 상담창구 운영등 소통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기타 공공기관과 공유·소통할 것

국세심사위원회의 불복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국선대리인의 실적 제고를 위해 실비지원 금액을 현실화할 것

대구지역 국세청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높은 수준이므로 대구청 차원의

외부감사 임명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

대구청의 기숙사가 노후화되고 있으므로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기숙사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

(118) 간병비 세액공제 포함 방안 검토 필요 (대구지방국세청)

높아지는 소득 대비 간병비율을 고려하여 간병비를 의료비로 인정하고 이를 세액공제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할 것

(119) 체납액 정리보류 금액 대응 방안 마련 필요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내 체납액 정리보류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원 증가와 관련하여 대응책을 수립할 것

(120) 납세자 지원 관련 제도 개선(대구지방국세청)

학자금 상환 체납액 관련 유연한 상환유예제도 운영등 체납관리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

수요자별 맞춤형 서비스 적극 지원 등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세정 지원을 강화할 것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121) 대구수성세무서의 조속한 청사 이전 필요 (대구지방국세청)

높은 임차료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대구수성세무서를 조속히 이전할 것

(122) 세무조사 시 일괄조회 제도의 엄격한 활용 필요(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의 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일괄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자료를 각별히 관리 감독할 것

(123) 현금영수증 관련 제도 개선 필요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역내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를 위한 현금영수증 제도 관련 소비자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124) 대구첨단의료 복합단지 내 법인세 감면 필요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125) 처리사건이 없는 국선대리인의 연임에 대한 대책마련 (광주지방국세청)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의 일환인 국선대리인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 및 처리사건이 없는 국선대리인의 연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26) 광주지방국세청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청의 5년 이내 근무자 중에서 8명의 퇴직자가 발생(올해 9월 기준)한 사유에 대한 질의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남녀 모두에게 육아휴직 사용권고 등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7) 국산맥아로 만든 수제맥주 등을 전통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광주지방국세청)

국산 맥아로 만든 수제맥주 또는 위스키가 지역특산주로 포함되지 않아 주세 경감 및 온라인 판매 등이 불가하므로, 국산맥아로 만든 수제맥주

등을 전통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8) 지속적으로 낮은 조직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광주지방국세청)

고질적으로 낮은 조직성과평가를 보이고 있어 직원 사기문제로 연계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직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29)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탄력적 집행 검토 (광주지방국세청)

통계적으로 고액 체납자들의 징수비율은 낮고, 생계형 체납자들의 징수비율은 높는데, 생계형 체납자에게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징수의 탄력적 집행을 검토할 것

(130)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광주지방국세청)

타 지역에 비해 광주전남 지역의 근로장려세제 지급비율이 높고, 올해 대상자도 확대될 계획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131) 광주전남지역의 국세수입 목표 설정시 한국은행과 공조 (광주지방국세청)

에너지 공기업으로 인해 광주전남지역의 부가가치세 비중이 매우 치중되어 있으므로, 국세수입 목표 설정시 한국은행과 공조할 것

(132)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징수 필요 (광주지방국세청)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체납정리 증가율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으므로,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할 것

(133) 탈세제보의 활용을 제고방안 마련 (광주지방국세청)

탈세제보 처리건수가 저조하므로, 탈세제보의 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34) 지방국세청에 대한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 확대 필요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은 수도권보다는 납세환경이 취약한 광주, 대구, 부산, 대전 등 지방에 수요가 더 많을 것이므로,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인력을 확대할 것

(135) 파산 및 회생신청 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필요 (광주지방국세청)

호남지역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편인데, 법인파산과 회생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파산 및 회생을 신청한 법인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136) 증가하는 악성·고액채납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광주지방국세청)

악성·고액 채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3. 관세청(부산본부세관 포함)

(1) 마약류 밀반입 단속 강화 및 근절 대책 마련 필요

관세청 직원의 마약 밀반입 연루 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유사 사건 발생 시 내부감사를 강화하고, 직원의 마약범죄 가담여부에 따라 엄벌에 처하는 등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 마약류 밀반입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최근 19세 이하의 마약사범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물뽕(GHB) 등 마약에 대한 2023년 단속건수는 2021년 대비 350건 감소하여 마약밀반입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마약 밀반입 단속을 강화할 것

관세청은 해외 불법마약류판매사이트 차단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차단하고, 차단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 협의할 것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통관인력 및 예산은 여행자 반입 마약 단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관세청 내부의 마약류 관리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청주국제공항 마약탐지견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인력충원 방안 마련 등 대책을 수립할 것

(2) 대마제품의 밀반입 방지 방안 마련 필요

대마성분이 들어간 과자, 젤리 등 식품들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으며, 가공형태의 대마 제품 암시장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대마제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해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마제품 목록을 작성하고

국민에게 철저하게 안내하여 유의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3) 마약탐지견 확대와 마약 레드팀 운영 필요

마약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탐지견을 늘리거나 국내 유입 마약의 주요 출발국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합동으로 마약 레드팀(감독관)을 운영하여 마약 밀반입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 통관 관련 수사 개입 최소화 필요

관세청 간부들이 수사 중인 경찰에 접근해 수사에 개입하려 한 행위를 공적협의로 두둔하는 관세청장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

(5) 통관인력 증원 필요

2023년 통관건수는 2019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동일한 기간 세관 인력 증가율은 2배 미만으로 통관 인력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통관행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력 증원 등 방안을 검토할 것

(6) 첨단 산업기술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입관리 강화 차원에서 관세법상 보호대상 지식재산권의 범위에 산업기술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 오픈마켓 서면실태조사 관련 관리책임 전가 등 유의 필요

오픈마켓 서면실태조사 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대한 과도한 관리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서면실태조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

(8) 특송화물을 통한 위험물 반입 방지 필요

특송화물이 늘어나면서 이와 함께 사회안전 유해물품 반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장검사를 효율적으로 하여 사회안전 유해물품 반입을 방지하고, AI 기반 우범 선별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9) 노후화된 ‘e-SEAL’의 최신화 필요

밀수위험 컨테이너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e-SEAL’이 노후화 되고 있으므로 신규장비 신속히 도입할 것

(10) 담배의 니코틴 성분 속인 불법업자 처벌 강화 필요

담배 내부의 니코틴 성분을 합성니코틴등으로 속여 탈세한 불법업자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것

(11) 개인통관부호 도용 불법해외직구에 명의대여행위죄 적용 필요

수입품 통관 시 번호 도용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하여 해외직구하는 경우 명의대여행위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검토할 것

(12) 식용건 금지 잔여건의 마약탐지건 활용방안 검토 필요

식용건 금지로 인한 잔여건중 일부를 탐지건 등 특수목적건으로 활용하는 계획이 현실적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13) 관세조사 거부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제도 등 대책 마련 필요

관세조사 거부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장기간 부과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국세청 등의 제도개선 시기에 맞추어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나 기타 대책을 수립할 것

(14) 관세청 조직 운영 관련 제도 개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의 높은 관세청 퇴직자 취업비율 및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시정하는 한편, 관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급증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

대통령 순방시에도 세관등의 관리 감독 강화할 것

(15) 온라인 플랫폼 내 유해물품 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각 플랫폼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세청이 차단 조치를 했지만, 각 플랫폼에 유해물품이 계속 유통되고 있으므로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유해물질을 판정하고 검사하는 기관이 관련 정보를 관세청에 전달하면 관세청이 통관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16) 세관별 인력배치 개선 필요

2024년에 특송화물 전담인력이 20명 증원된 평택항 마약단속 실적은 저조한 반면, 증원이 없었던 부산항은 마약단속 실적이 전년대비 2.7배 늘어났는데, 이는 세관별로 관세청 직원의 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인력배치를 개선할 것

(17) 해외직구에 따른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2024년 9월 기준 관세청이 소관 부처로부터 제공받은 위해 직구제품 정보 건수가 96건에 그치고 있으므로, 관세청과 타 기관 간 관련 정보의 공유를 활성화하고, 해외직구 문제를 관장할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각 관계부처 전문가의 협업 검사 인력을 확대하며, 소관법령별 해외직구 위해물품의 반입차단 대상 지정 및 관세청의 차단절차 법제화를 검토할 것

(18) 입국장 인도장 공항 확대 재검토 필요

입국장 인도장 공항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경우 관세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반대하고 있으므로, 입국장 인도장 공항 확대 정책을 재검토할 것

(19) 세관의 감시 역량 강화 필요

부산세관과 인천세관에서 감시정과 CCTV 등 기존 장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밀수 적발을 역량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드론의 운영이 곧 종료될 예정인데, 마약 및 위험물 밀반입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감시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20) 드론 성능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드론의 운용은 항만감시를 위한 필수 장비로 지속적인 운용이 필요하므로 드론 국산화를 위해서 정부지원 R&D를 투입하거나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항만 감시를 위해 드론 성능을 제고하고 운영을 지속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1)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원의 세관신고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대통령 해외순방 시 대통령 수행원의 휴대물품 반출신고 및 세관신고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

(22) 언더밸류를 활용한 관세탈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해외직구 시 실제 가격보다 낮추어 과세가격을 조작하는 언더밸류 수법으로 관세탈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외의 판매자가 언더밸류를 할 경우 세관에서 소비자에게 소명요청을 하거나 소비자가 추가적인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23) 산업기술 유출 피해 관련 수출입관리 강화 필요

최근 산업기술, 방산기술, 영업비밀 유출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산업기술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입관리 강화 차원에서 관세청의 수출입 통제 범위에 산업기술, 방산기술, 영업비밀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24) 북한산 물품의 불법반입 단속 강화

북한산 물품이 국내 온라인 유통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UN 안보리 대북제재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제재의 이행을 위해 북한산 물품의 불법 반입 단속을 강화할 것

(25)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방식 개선 필요

전국 지정장치장 57개 중 화물관리인이 지정된 28개의 지정장치장 모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단체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정장치장 화물관리 업무를 경쟁체제로 바꾸고 외부공시를 강화할 것

(26)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CIQ 인력 총원 필요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의 CIQ 인력이 부족하여 공항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인력을 총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7) 특송물량 비용 부담 제도 개선 필요

중국발 특송물량이 2019년 4,300만 건에서 2023년 1억 3,100만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세관 인력이 충분하게 늘어나지 않아 세관 직원의 검사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세관 인력을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외국 기업에 책임 의무를 부과하여 수요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거나 자격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8) 개인통관고유 부호 유출 차단 필요

2024년에 이커머스 중개 플랫폼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가 전년대비 44.6% 증가하였으므로 본인인증서비스의 활용 또는 일회용 통관부호 도입을 검토하고 개인통관번호 유출 차단과 관련한 전반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29) 통관고유부호의 도용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검토

통관고유부호의 도용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인인증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일회용 통관고유부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30) 기관 간 협력 개선 필요

최근 가짜 임신테스트기 수입 차단에 대해 관세청과 식약처 간 협력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유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관계 기관 간 의사소통을 개선하여 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31) 위조품 판매 방지 방안 마련 필요

우리나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조품 등이 다수 판매되고 있는데, 위조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통관 절차에서 판매업자를 블랙리스트 처리하는 등 위조품 판매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32) 특송물류센터 화물관리인의 화물관리비용 감면 개선 필요

특송물류센터의 화물관리인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화물관리비용 감면을 통해 소수의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3) 할당관세 정책의 효과성 점검 필요

할당관세가 확대 적용되어 적용대상 품목이 2021년 165개에서 219개로 증가

하였고 약 2년 동안 4조 5,000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신선식품 및 신선과일 등 농축산물의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할당관세의 정책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

(34) 포괄가격신고 제도 개선 필요

포괄가격신고 요건 중 ‘같은 물품’이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어 포괄가격신고 신청건수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건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하므로, ‘같은 물품’이라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신고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5)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필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의 여행자 휴대품 검사율을 높이고,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액 징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36)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선 필요

중국발 해외 직구 소비 급증으로, 국내 중소기업 등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국무조정실,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에 참여하여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관련 정책조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

(37)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확대 필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은 부산항 시범운영 만족도 평가에서 이용자 편의가 높아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내수 진작을 위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전국 공항 및 항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8) 면세점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필요

국내공항 면세점 노동자는 휴식공간이 없는 점, 화장실 시설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근무환경이 열악하므로, 관세청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면세점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9) 불법 환전업체에 대한 대책 보고 필요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불법 환전영업자에 대한 제재는 3개월 업무정지만 가능한 상황이므로, 불법 외환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환전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환전소에 대한 검사율을 제고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환전영업자에 대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40)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확보 필요

가상자산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국내 무역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관세청에서 단속한 가상자산 관련 무역범죄는 실적이 저조하므로 입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여 가상자산의 국외 이전 거래내역 등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41) 카지노 환전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 보고 필요

카지노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실적이 저조하고, 검사 이전에 검사 대상 환전업체에게 조사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통보하도록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조사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카지노거래의 고위험 특성을 반영해 검사 및 조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단속의 밀행성과 보안을 훼손하는 관세청 고시를 개선하는 추진 계획을 보고할 것

(42) 관세평가분류원 특공 악용 직원에 대한 조치 필요

관세평가분류원은 무리한 세종시 이전 후, 직원 다수가 세종시에서 2017년

에서 2019년 사이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받았는데, 직원의 공무원 특공 악용에 대해 적절한 징계 및 환수 조치를 할 것

(43) 관세인재개발원 교수 인력 관리 개선 필요

관세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중 성희룡 등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교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촉 규정이 없어 해촉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
이므로 추후 운영상 미비점이 없도록 인력 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

(44) 조사 시 인권보호를 위한 직원교육 시행 필요

2023년 7월에 국가인권위에서 관세청에 권고결정을 했는데, 관세청에서 마련한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조사직무에 대해 인권 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할 것

(45) 성비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관세청에서 매년 성비위를 사유로 직원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 직원들이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폭넓은 신고 시스템을 만들고, 성비위 관련 예방교육 이수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교육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46) 관세청 퇴직공무원 재취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세청으로부터 AEO 심사업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중인 한국AEO진흥협회에 관세청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해 있는데 관세청이 AEO 제도 관련 계약을 한국AEO진흥협회에 몰아주고 있고, 관세청에서 지난 10년간 한국면세점협회로 총 88명이 재취업 했는데 한국 면세점 3사의 매출이 2020년 119.8억 달러에서 2023년 99.1억 달러로 20.7억 달러 감소한 문제가 있으며, 관세청은 조달청 및 통계청에 비해 재취업 승인 심사가 유독 많으며 승인율이 100%에 달하고 있으므로, 유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47) 관세청 출신 공무원이 재직중인 협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관세청 출신 공무원이 재직중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주)케이씨넷, 한국AEO진흥협회와의 수의계약이 과다하므로, 기획재정부 차원의 종합감사 등을 실시할 것

(48) 관세청의 일감몰아주기 축소를 위해 실행계획 마련

타 기관에 비해 관세청의 일감몰아주기, 긴급공고와 수의계약 규모가 과다하므로, 긴급공고 또는 수의계약 규모 등을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

(49) AEO 인증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관리강화방안 마련

AEO 인증제도를 악용한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0) 재해복구시스템의 신속한 구축 필요

CIQ 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조기 구축 및 재해복구 서버 장비 증설의 추진이 미흡하여 전산망이 마비가 됐을 경우에 복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전산망 마비 시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신속하게 갖출 것

(51) 고가 휴대품의 반출신고 관리

반출신고가 되지 않은 고가의 신변장식용품을 착용한 채 입국한 경우, 세관에서 밀수 여부를 검사한 뒤 반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물품에 대해 적정한 과세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고가 휴대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

(5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수요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마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수요는 급증하나 담당인력 수는 10년 가까이 변함이 없으므로, 적기에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등 대책을 마련할 것

(53) 압수 농산물에 대한 신속한 검사 및 보관·관리 개선

관세청이 압수한 농산물의 부패·변질 방지를 위해 7일 이내에 식물검역 및 식품검사 등을 의뢰한 비율이 저조하므로, 압수 농산물의 신속한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보관·관리를 개선할 것

(54) 북한 노동력을 사용한 중국제품의 수입현황 파악 실시 등

북한 노동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제품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제품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등을 할 것

(55) 반도체 등 특수화물의 한-일 복합운송의 간소화

반도체 등 특수화물의 한-일 복합운송이 한-중 복합운송보다 서류절차 등 더 복잡하므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간소화시킬 것

(56) 해외직구 의약품 및 유해물질 함유 제품 통관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해외직구 의약품 중 마약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반입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해외직구 물품 중 유해물질이 다수 포함된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고 있으므로 직구물품 포장의 물품 정보를 통관시 확인하는 등 위해물품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할 것

(57) 과태료 수납률 제고방안 마련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하면서 관세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급증하고 있으나, 과태료 수납률이 9%에 불과하므로,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8) 관세청 직원의 마약밀반입 연루의혹 등 해소를 위한 조치 실시

관세청 직원의 마약밀반입 연루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감찰을 실시하거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9) 관세청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재점검 실시

최근 5년간 직무태만, 품위손상,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07명에 달하고 있으므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재점검을 실시할 것

(60) 한일간 특수화물 복합운송 절차 관련 고시 개선 필요(부산본부세관)

한일간에 특수화물 복합운송 절차 관련 간소화를 위해 고시를 개정할 것

(61) 드론 활용 등 불법 마약 유통 검사 강화 필요(부산본부세관)

부산항을 통한 불법 마약 유통을 드론등을 통해 적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울경지역에 집중적으로 마약류가 검출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 수립 및 용당세관 내 엑스레이 검색기 증설 등 인력 장비를 확충하며, 해상화물을 통한 불법마약의 차단을 위해 인력을 충원할 것

(62) 부산본부세관 통관 절차 관련 제도 개선(부산본부세관)

상승하는 부산항의 물동량을 고려하여 진해·웅동 등 효율성을 바탕으로 통합검사장의 신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부산 지역 내 중국산 검색기의 잦은 고장과 관련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

(63) 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리 강화 필요 (부산본부세관)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대해 단속·통제를 강화하고 산업부와 적극적으로 공조할 것

(64) 관세 체납 징수율 향상 필요(부산본부세관)

부산 지역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향상을 위해 추적 전담팀을 운영하고, 감치뿐만 아니라, 정확한 세금이 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65) 기업 수출 지원 확대 필요(부산본부세관)

부산 지역내 수출경쟁력확보를 위해 기업들의 수출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인도·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와 무역 시 통관에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본부와 협업할 것

(66) 외화밀반출입 관련 제도 홍보 및 계도 필요(부산본부세관)

부산의 경우 일본으로의 왕래가 잦고 외화밀반입은 보이스피싱등 기타 범죄와 연루될 수 있으므로, 외화밀반출입과 관련하여 관련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보안·단속요원들과 협의하여 사전 차단에도 노력할 것

(67)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내 통관 관리 강화 필요(부산본부세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한 물품 반입 증가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

(68) 철강 수출기업 대상 CBAM 대응 필요(대구본부세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인해 기업들이 생산 과정 중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구본부세관 관할 기업들에 대해 CBAM 대응을 위한 EU 수출입 관련 상담·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69) 통관관리 및 조사 단속 강화(대구본부세관)

대구세관 내 노후화된 장비를 조속히 교체하고, AI 기반 우범선별 시스템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하며,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70) 불법마약 단속 강화 필요(대구본부세관)

대구지역내 마약 적발량이 폭증하고 있으므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노후화된 검사장비들을 현대화 할 것

(71) 납세자 지원 관련 제도 개선(대구본부세관)

대구세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을 위해 수출팩토링 홍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대구 경북지역의 중소 영세기업들의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수출물류비 지원 관련 사업을 강화 할 것

세관을 사칭한 로맨스 스캠에 대해 국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할 것

(72) 군산세관의 검색기 추가배치 필요(광주본부세관)

전자상거래 물량이 확대되고 있어 통관지연이 예상되므로 군산세관에 검색기를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3) 서남해권 관할 분석실 마련(광주본부세관)

화물반입 시 1차 엑스레이 검사 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분석실로 보내는데 광주 관할 내 분석실이 없어 타 지역으로 보내 분석을 요청해야 하는 바, 인력 재배치 또는 증원 등을 통해 서남해권에도 분석실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

(74) JDC 활성화 방안 마련(광주본부세관)

JDC의 이용자 및 매출액 모두 감소하고 있으므로, 제주 발전을 위해 JDC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75) 세액탈루 위험이 낮은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완화방안 마련(광주본부세관)

세액탈루 위험이 낮은 일반기업까지 관세조사를 강화할 경우 기업 부담이 증가하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6) 군산세관 인력 및 장비 확충 필요(광주본부세관)

군산세관 특송통관장의 2월 대비 8월의 반입건수가 551.8% 증가하여 통관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통관 전담인력이 2명만 증원되었으며 2025년도 예산안에 X-Ray 검색기 설치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인력을 7명 증원하고 X-Ray 3대를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 조달청

(1) 조달물자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조달물자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차단봉 형태의 지하차도·터널 차단시설은 안전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우수조달물품 등 공공조달물품에 대한 품질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공조달물품 사후 품질 공동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조달청-관세청간 협조를 통해 원산지 위반 제품 공급을 단속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원산지 파악을 명확히 하여 원산지 불명이 없도록 관리할 것

(2) 혁신제품 시범사용 확대

수요기관이 직접 사용 후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혁신제품 시범 사용 및 설치 지원을 확대할 것

지방조달청은 혁신조달을 활용하여 지역 기업을 육성하고, 그 결과를 본청에 신속히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3) 조달 공정성 강화 및 조달제도 보완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건의 위법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입찰담합에 대한 수요기관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입찰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할 것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상향하고 부당이득환수제도를 개선하여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달절차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조달절차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지정신청·제한 등 엄격한 제재방안을 검토할 것

벤처나라 제품의 지정 만료 이후에도 제한 없이 재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기업의 자력 성장 저해 및 신생기업에 대한 기회 제한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규정 보완 및 관리를 강화할 것

중소기업 성능인증제도 운영 시 조달청이 민원 발생을 이유로 기술인증가점을 주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구매가격 사전공개제도가 잘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관련 규정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협상계약 기술능력 평가항목에서의 최고 및 최저 점수 관련 기준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사후원가검토조건부 비목의 비중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사원에 통보하고, 정산 결과를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승인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4)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확보 및 제도 보완

부정당업자 제재 및 벌점에 대하여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상향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사 거부·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서류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업체의 우수제품 지정을 막기 위한 우수제품 지정 과정에서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할 것

(5) 태양광 발전장치 직접생산기준 제도 개선

태양광 발전장치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지지대에 대한 직접생산기준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납품대금연동제 간 조화로운 운영 방안 마련

국가계약법상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제도와 납품대금 연동제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7) 국가보안시설 공사 담당 업체에 대한 보안 강화 방안 마련

특정 국가보안시설의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정상적인 공사들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8) 조달청의 탄소중립 달성 노력 강화

공공조달 시장의 탈탄소화를 위한 최소녹색기준 강화 및 입찰 시 환경

성적표시인증(EDP) 제출 의무화 등 방안을 검토할 것

(9) 나라장터를 통한 수요기관 자체계약 건에 대한 관리 강화

수요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조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위법적 면세 계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나라장터를 통한 수요기관 자체계약 건에 대한 위법한 사항 발생 시 조달청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0) 조달청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

조달청 공무원 채용에서 특정협회와의 유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1) 공공주택 계약의 부실 심사 방지 방안 마련

업무 과중으로 인해 공공주택 계약의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발주 일정을 조율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2)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유입을 위한 조건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조달시장에서 지역 기업들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13) G-PASS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G-PASS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조달청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4)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 전략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위한 법률·하위규정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며, 수출전략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후관리체계 마련할 것

5. 통계청

(1) 물가지수 등 통계지표 체감도 제고

자가주거비, 신규 상품·서비스 등을 물가지수 품목에 반영하는 등 통계지표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2) 지역별 GRDP 작성 시기 개선

GRDP를 예산안 및 정책에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작성 시기를 앞당길 것

(3) 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

국가통계 품질제고를 위하여 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4)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상자산 보유현황 포함

가상자산 보유현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적절한 조사방식을 마련할 것

(5) 통계작성 변경의 사전승인 절차 준수

각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의 변경에 대한 통계청의 사전승인 절차 준수율이 저조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6) 농가경제조사 작성 개선

농가경제조사 표본 교체시 지표의 연속성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1인 농가를 포함하여 통계의 정확도를 개선할 것

(7) 통계 발표 시차 및 주기 단축

통계의 효용성 제고를 위하여 포괄적 연금통계 등 발표시차가 18개월 이상인 통계의 발표 시차와 5년 주기의 생활시간조사 및 가계생산 위성계정의 통계 작성 주기를 단축할 것

(8) 통계 발표 시차 및 주기 단축

통계의 효용성 제고를 위하여 포괄적 연금통계 등 발표시차가 18개월 이상인 통계의 발표 시차와 5년 주기의 생활시간조사 및 가계생산 위성계정의 통계 작성 주기를 단축할 것

(9)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통계 확충

통계청은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등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역통계를 확충할 것

지자체가 생산하는 지역특화통계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작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10) 안전한 통계 조사 환경 조성

통계조사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 및 위험 지역 조사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11) 조직 및 운영 개선

통계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의 용역계약 비중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2)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 작성 필요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통계청에서 관련 자료

를 수집하고 작성할 것

(13) 타 기관 통계와의 정합성 필요

통계청과 타 기관 간 거시경제 지표가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 지표가 정합성을 가지도록 개선할 필요

(14) 출산을 추계의 정확성 개선 필요

통계청의 출산율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추계 모델을 변경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5) 60~64세를 포함하여 연금통계 작성 필요

통계청의 연금통계에서 제외된 60~64세에 대한 조사를 추가사업으로 진행할 것

(16) 사회적 고립도 조사 실시 필요

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 고립도에 대한 종합적·지속적·정례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17) 가계부채 관련 통계 개선 필요

가구별 가계부채 DB를 조속히 구축하여 분기별 공표를 하거나 한국은행 가계부채 DB를 국가통계로 승인하는 등 가계부채 통계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18) 국민의 행복을 반영하는 지수 개발 필요

경제지표 외에 국민행복을 반영할 수 있는 국민삶의질지수 또는 국민행복지수 등을 개발하고, 해당 지수의 분야별 비중 결정 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

(19) 자산불평등에 대한 통계 개발 및 기후위기에 대한 분석 필요

자산 및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한 결혼율·출산율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를 개발하고 기후위기가 경제 및 소득불평등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등을 검토할 것

(20) 통계조사원 처우 개선 필요

통계조사원들의 불리한 처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

(21) 가계동향조사의 불응률 개선 노력 필요

가계동향조사의 불응률을 낮추기 위해 통장을 명예통계조사원으로 위촉하는 등 방문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AI를 활용한 조사기법을 개발할 것

(22) 외국인 사망자 관련 통계 생산 필요

법무부와 협의하여 외국인 사망자 관련 사망원인별, 체류자격별, 국적별 통계를 작성할 것

(23) IMD 국가경쟁력지수 관련 검토 필요

IMD 국가경쟁력지수 인용 시 왜곡 등 발생한 오류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할 것

6. 한국은행

(1) 금리인하와 재정정책의 병행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문제에 대응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금리 인하가 요구되나 부동산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므로 재정정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건전재정 정책으로 취약계층과 취약 중소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시행을 검토할 것

(2)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위주의 시장이라 금리의 변동이 가계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금리 시 가계부채 문제가 커진다는 점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할 것

(3) 물가안정목표제의 실효성 제고

물가안정목표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에서 정책목표에 물가와 성장 이외 신용변수를 추가하는 등 물가안정목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경제전망 오차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해마다 경제전망의 오차 발생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오차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전망을 개선·보완할 것

산업 전문가의 배치·영입·육성을 통하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것

(5) 낙관적 경제전망에 대한 개선

경제전망이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기에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신뢰성을 떨어뜨려 경제정책의 효과를 줄어들게 하므로 현실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외환보유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탈달러화 트렌드 등 외환시장의 변화에 대비하여 외환 보유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환을 다변화하고 금 보유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7) 대외변동성 대응 방안 마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트럼프 당선, 그리고 주요국들의 통화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대외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기에 한국은행이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할 것

(8) 대정부 일시대출금 활용에 있어 부대조건 준수

정부가 금통위가 의결한 부대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활용을 늘리고 있으므로 「국고금관리법」 및 부대조건에 부합하게 재정증권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우선 조달하도록 촉구할 것

(9) 한국은행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대

한국은행법 제3조에 따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사전승인범위 축소, 법인세 부과 면제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10) 자영업자를 고려한 가계대출비율 축소 방안 마련

GDP 대비 민간신용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통제가 필요하나 확실적인 기준으로 무리한 축소를 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에게 어려움이 전가된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대출비율 축소 방안을 마련할 것

(11) 수도권과 지방의 이원화된 부동산 정책 실시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어있어 통일된 정책을 시행하기보다 시장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는 이원화된 정책을 실시할 것

(12)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핀셋 및 타겟팅 정책을 시행하는 데 유용할 수 있는데 10년째 한도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출 한도를 현실에 맞게 늘릴 것

(13) 금융중개지원대출 위규대출의 방지

위규대출 방지를 위하여 한국은행 본점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심사결과를 이중으로 점검하고 감사실이 사후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14)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중개대출의 한도를 늘리고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중소기업 대출 비율 제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EU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팩터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5)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 검토

대출 접근성이 높을수록 자산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규모를

저리·장기로 빌려주는 등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6)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제도 정비 및 제반 환경 조성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거래 내역 조회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 시스템과 관련한 신뢰도나 안정성,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소외계층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17) 지역거점국립대학 육성방안 마련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거점국립대학 육성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일자리를 유치할 방안을 모색할 것

(18)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정책 검토

거점도시 중심 발전이 총생산이나 고용에 효과가 있지만 지방 소도시를 포기하는 관점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조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19) 지역본부의 정책 싱크탱크로서 역할 강화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지역 제반의 문제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전략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

지역 활성화를 위해 연구 검토가 필요한데도 지역본부의 연구 인원이 부족하거나 특정 지역본부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필요시 지역본부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

(20) 한국은행의 고용안정 목표 추가 고려

정부는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정책에 접근하기에 중립적이

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한국은행이 이를 담당하도록 책무나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1) 한국은행의 내부 조직구조 개선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구조 개선을 위해 개방형 고위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비율을 높이고 한국은행 내부 고위직의 여성 비율을 높이도록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은행 지역인재선발제도의 경우 지방인재 채용 목표 인원 자체도 미미하며 그마저도 달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채용 목표 인원을 높이고 이를 달성할 것

(22) 국민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방안 마련

한국은행 평판조사 결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기관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경영정보 공시수준을 지금보다 확대할 것

(23) 금융통화위원회의 공공성과 투명성 및 다양성 확보

금융통화위원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록이나 의사록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

금융통화위원회 내부 구성원들이 학력, 성별 등에서 편향된 측면이 있기에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주적 구조를 갖추도록 할 것

(24) 비은행 금융기관 및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그림자 금융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중소기업 건설 분야에 제2금융권의 대출이 많기에 부실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

(25) 한국은행 직원들의 과도한 복지 지양

한국은행의 방만한 사내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사무소장 및 사무소 소속 선임 주재원에 대해 주택 임차료를 외교부에서 정하는 공무원 임차료로 조정할 것

(26) 위조지폐 방지대책 마련

위조지폐 활용으로 인해 현금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및 고령층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응하는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위조지폐 유통 관련 통계 및 법적 문제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것

(27) 사회 구조개혁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수행

중앙은행이 사회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고 구조개혁 보고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28)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통한 가사도우미 제도 확대

일·가정 양립을 해야 하는 가정들이 최저임금의 상승 문제로 가사도우미를 활용하기 어렵기에 사인 간의 계약을 통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안을 검토할 것

(29) 녹색채권 발행의 확대

녹색채권 발행 확대를 위해 금융감독 기관과의 정책 공조를 활성화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할 것

한국은행이 녹색채권 발행을 활성화하여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것

(30) 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기후위기 대응이 물가안정이라는 한국은행 본연의 법적 책무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이를 통화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할 것

매입자산의 탈탄소화를 추진할 계획을 마련하고 유럽중앙은행처럼 적극적인 탈탄소화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한국은행이 기후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융기관들의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치 달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기후공시 차원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대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

(31) PF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계획 마련

부실한 부동산 PF 정리의 지연이 통화정책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금리 인하로 PF 대출이 늘어나면 부실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

(32) 지역상품권 및 지역화폐에 대한 용역 검토

지역상품권 및 지역화폐 정책이 내수 확대를 위해 일률적으로 진행할지 타겟팅하여 진행할지 논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이 정책연구를 검토할 것

(33) 국가 총부채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이나 총량 관리에 실패했기에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은행이 책임감을 가지고 질적 또는 양적으로 일관된 부채 관리 정책을 추구할 것

(34)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검토

교육 환경이 부동산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가계 부채 증대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지역별 비례선발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나 기계적인 다양성을 추구하면 역지스러운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조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것

7. 한국수출입은행

(1) 대규모 방산 수주 위한 수은 내 전담조직 구성 및 특화된 금융지원 수단 개발

국내기업들의 대규모 방산 수주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수출입은행 내 방산 수출금융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방산 수출에 특화된 금융지원 수단을 개발할 것

현재 납입자본금 수준으로는 폴란드 방산수출에 충분한 신용공여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에 대주단을 구성하고 은행들이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

(2) 특정 계열에 편중된 동일차주 신용공여 관리 철저

특정 계열을 대상으로 동일차주 신용공여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여신이 균형있게 공여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할 것

(3) 대출·보증 연계 직접투자 규정 개정 및 펀드출자 제약 완화 검토

수출입은행이 대출하고 보증과 연계되어서만 직접투자가 가능하다는 제한을 해소하여 해외 지분 투자를 활성화하고, 미래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벤처캐피털 등 다양한 형태의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내실있는 운영 및 지원방식 다양화

수은금융과 공급망안정화기금이 계정이 분리되어 별도 운영된다는 점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자금의 중복지원 문제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수은금융과 공급망안정화기금간 공동·연계지원을 통해 공급망안정화사

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따른 지원방식을 대출뿐만 아니라 보증, 출자 등 다른 영역으로 넓힐 것

5조원 규모로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과정에서 위험성 심사를 철저히 하는 등 내실 있게 기금을 운영할 것

(5) 유턴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면밀한 관리

유턴기업 49개에 대한 수은의 금융지원 규모가 2조 5천억원을 넘는데, 실제 돌아온 기업은 절반도 되지 않으므로 제도를 개선할 것

유턴기업 지원사업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사후관리를 공동조하고 자금 회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6) 중소기업 등 지원강화

수출팩토링 지원 사업에서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측면이 있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히든챔피언 사업자 선정이 대기업에 가까운 기업들이 선정된다는 점에서 제도 취지에 맞는 적절한 기준과 원칙을 세울 것

수출입과 해외 진출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나 ESG 금융프로그램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보다 지원할 것

RG 발급이 대형 조선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 조선소에 대한 RG 발급을 확대할 것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도가 높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여신정책을 펼칠 것

(7)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내실화

수은은 추가적인 신규 화석연료 투자를 중단하고, 금융지원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관리의 구체적인 관리 목표를 조속히 수립해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

수출입은행의 탄소배출량이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배출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 고효율 사무기기 도입 확대 및 외부감축사업 폭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

(8) EDCF 사업 관리 강화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는 ODA 지원이 필요하고, 개도국 고부가가치 대형 인프라 사업을 집중 발굴하면서도 수원국의 신용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환수 가능한 나라에 대해 승인할 것

EDCF 사업 대형화에 따라 공여국 신용 상황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을 확대하고 기존 사업의 국가별 자본조달상황과 신용상황 파악 등 리스크에 대응할 것

입찰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료를 제출해 선정될 경우 수출입은행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미승인된 사업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함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하고 자체변경이 과도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EDCF 사업의 사후평가가 취사 선택되어 이뤄지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사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9) 체코 원전사업에 대한 여신관리

체코 원전 수주 관련 경제성과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익성, 자금 회수 가능성 및 지식재산권 이슈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며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릴 것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하여 과도한 저가수주나 저리지원이 국제투명성 협약 또는 EU 내부의 법률에 저촉돼서 불법 보조금으로 규정받을 우려가 있기에 이를 검토할 것

원전 수주 사업 관련하여 경제성, 수익성의 예측과 분석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것

(10) 현물출자 비율, 동일차주 신용공여 및 KAI 지분 관리 등 강화

수출입은행에 정부가 출자를 하는 경우 현금출자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승인이 불필요하는 등의 이유로 현물출자의 비중이 높는데, 이는 BIS 규제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물출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수은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예외적용은 과도함에도 행정부가 시행령에서 임의로 연장하고 확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KAI의 공적 특성 및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이 초기단계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KAI의 민영화 이슈에 대응할 것

KAI의 리스크관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지분구조로 인해 KAI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KAI 지분을 정리하고, 즉시 정리가 불가능할 경우 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할 것

- 수출입은행의 출자회사를 관리함에 있어 출자회사 관리위원회를 내실화하고, 위원회에서 대출금 출자전환 건 등을 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

(11) 남북협력기금 사업관리 및 법원에 공탁된 북한 자금 가압류 등

남북관계의 경색 이후 실질적인 교류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수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남북사업이 활발했던 기간과 경협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기간 모두 같은 규모로 남북본부 인력운용을 한다는 점에서 조정을 검토하고,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예산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것

북한에 빌려준 자금으로 지은 자산을 훼손시킨 경우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북한의 자금을 가압류 하는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자금을 환수하도록 할 것

대북교역이 단절된 상황에서 대북사업 투자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은이 운영자금 지원 및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금액을 갚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으므로 회수가 어려운 금액은 정리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12) 공공기관 운영 내실화

세수결손 대응 위해 정책금융기관에서 배당금을 과도하게 정부에 지급하고 있는바, 다른 나라의 국책은행의 사례를 연구하여 제도화시키고, 배당협의체에 수은 은행장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것

여성과 소수자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임원의 비율을 높이고 임금 차별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방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해외근무 직원들의 성과 측정이 불분명하고 국외근무수당이 공무원 수준을 상회한다는 점 등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음에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사내 대출을 제공하였는바 이를 시정할 것

8. 한국조폐공사

(1) 모바일 신분증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

모바일 신분증 위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이 투표 등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장애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망이나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할 것

(2) 전자여권 핵심자재 국산화 추진

전자여권의 전자칩과 COS의 국산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

(3) 여권 재발급 가이드라인 마련

여권 재발급이 세금 낭비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여권 재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4) 장애인복지카드에 점자 압인 도입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압인을 장애인복지카드에 도입할 것

(5) 경영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

조폐공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수익성 제고와 품질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6) 기술개발 개선 방안 마련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조폐공사 기술연구원이 집행하는 세부사업별 집행 자료를 철저히 관리할 것

연구활동진흥비 안에 지식재산권 보상을 위한 포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별도 과목을 신설하여 계상할 것

R&D 투자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의 R&D 권고율에 5년 연속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R&D 투자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7) 화폐 내구성 강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필요

화폐의 내구성 강화 등을 위한 폴리머 화폐 개발 연구 등 연구개발 확대 필요

(8) 여권 발급 절차 개선

전자여권 개별배송 서비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수수료 절감과 묶음 배송을 검토하고 모바일 신분증과 연계하여 여권의 재택 신청을 도입하는 방안을 외교부와 협업하여 검토할 것

(9) 일회용품 보증금제 도입 보류에 따른 중소기업체 피해 문제 해결

일회용품 보증금제 도입 보류에 따라 중소 민간업체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민간업체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환경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법원 조정과정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10) 조폐공사 판매·전시 시설 실적 개선 방안 마련

조폐공사의 판매·전시 시설인 오롯디오향관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실적을 개선할 것

(11) 휴가 관련 제도 개편 필요

병가 사용을 출근 불가할 때가 아닌 직무 수행이 곤란할 때로 개정하고 연차사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직들이 솔선수범하여 연차사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저조한 연차 사용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연차 사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연차 사용은 노동력 보전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을 가질 것

(12) 여성 임직원 비율 확대

여성 전체 임직원 비율이 27%에 불과하고 여성 고위직은 7%에 불과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13) GKD 경영 실태 개선 방안 마련

GKD 경영실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행위가 밝혀진 직원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

(14) 지역 본부에 대한 내부 관리·감독 강화

제지본부가 환경법을 위반하는 등 지역본부에 대한 내부 관리·감독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5)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해킹메일 대응 훈련에서 조폐공사 직원들의 열람 건수는 증가하고 미신고율은 늘어나고 있으므로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할 것

(16) 사업타당성과 수요를 감안한 사업 추진 필요

사업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사업이 시행되어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후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 타당성과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17)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처우 및 관련 제도 개선

콤스코시큐리티는 중소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속 특수경비원들에게 가산세 납부동의여부를 요구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철회할 것

콤스코시큐리티의 특수경비원 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반관리비 비율과 이윤비율을 상향하고 특수경비원 시중노임단가 상향 계획을 마련할 것

(18) 조폐공사 사업의 다각화 방안 검토

조폐공사의 개척형 사업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전략을 재검토하여 새롭게 수립할 것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CBDC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9. 한국투자공사

(1) 우수인력 확보 및 투자 전문인력의 높은 퇴직률 개선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내부 육성 시스템을 충분히 마련할 것

전통자산 운용역의 퇴직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낮출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해외 주재원들의 귀국 후 퇴임 문제를 개선할 것

(2) 저조한 투자수익률 개선 및 전략적 투자 대책 마련

KIC 수익률이 저조한 것은 위탁운용사의 수익률이 벤치마크보다 낮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위탁운용사에게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탁운용사 선정과정 투명화, 성과·페널티시스템 구축 및 지나치게 높은 위탁운용 수수료 산정체계 점검 등 제도를 개선할 것

공사의 운용 수익률이 타 국내 연기금이나 해외 주요 국부펀드와 비교 시 낮다는 점에서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 수정 및 우수 인력 확보 등 전반적인 조직의 역량을 높일 것

해외지사별 투자실적이 집계되고 있지 않아 자산 운용에 대한 평가가 어려우므로 이를 개선하고, 기관과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화바스켓 수익률과 달러 기준 수익률을 병행해서 공개할 것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투자에 활용하라는 목적으로 위탁된 7조 원의 자금을 활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외 첨단기술기업 인수를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집행할 것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 투자 해외 실사 관련 우려 등이 제기되므로, 부

동산 투자 위험 심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국부펀드로서의 사회적 책무 등 수행

현행 제도상 가상자산 투자 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같아 국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립된 투자 방침을 세울 것

ESG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ESG 투자수단을 개발하며,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할 것

투자공사가 일본·중국 등 해외 경쟁 기업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를 투자해 손실을 보고 있으므로 투자규모 및 비중을 조정할 것

연차보고서, 위탁운용사 현황 등과 관련하여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일 것

해외기업 공동투자 역할 강화를 위해 전략투자팀 인력을 확충하고,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등 전략적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인도 뭄바이사무소 개소 후 투자성과가 미미하므로 인도 뭄바이 사무소 투자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

(4) 공공기관 운영 내실화

동북아의 금융허브 취지로 설립된 한국투자공사가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운영과정을 점검할 것

세수결손 대응 위해 정책금융기관에서 배당금을 과도하게 정부에 지급하고 있는바, 당기순이익의 전액을 정부배당액으로 가져가는 것은 사업진행의 차질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국책은행의 사례를 연구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임직원들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학자와 연구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할 것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중요 사안들은 국회에 정보를 정확히 보고할 것

단기성과 위주 성과평가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연지급비를 도입할 것

10. 한국재정정보원

(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률 향상을 위한 노력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률 증가를 위해 합동현장점검 활성화, 보조금부정 징후탐지시스템 고도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2) 디브레인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

디브레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분할 수출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3)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의 이용실적 제고 방안 마련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 이용실적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

(4) 재정정보분석센터의 효율적 운영

재정정보분석센터의 연구실적을 증진하고 연말에 편중되는 보고서 발간 시점을 개선할 것

(5) 사무실 이전 임대계약 시 예산 낭비 여부 확인

사무실 이전에 따른 새로운 임대계약 시 예산이 낭비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확인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6) 장애인·청년 의무 고용 준수,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 인사제도 개선

장애인 및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며, 인사 관련 직원과의 소통강화 및 고충처리 체계를 마련할 것

11. 한국원산지정보원

(1) 원산지정보원의 역할 강화 필요

원산지 도용을 막고 국익 보호를 위해 원산지 증명 전문성을 확보하고 표시 업무뿐만 아니라, 단속 및 교육 등에서도 역할 할 것

(2) 조직 운영 관련 개선

한국원산지정보원이 보유한 주식 중 관세청 퇴직자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처분할 것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규정한 수준에 부합하도록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는 등 청년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것

(3) 원산지관리사 및 실무사 자격시험 관리 개선

원산지관리사 및 실무사 자격시험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므로, 문제은행 시스템 도입을 통한 합격률, 난이도 출제오류율 등을 개선할 것

12. 한국통계정보원

(1)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장애인 의무고용을 고용부담금 납부로 대신하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준수할 것

(2) 여성 관리직 비율 제고

여성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고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여성 관리직 비율을 제고할 것

